

석사학위논문

노인부양주체에 관한 의식 변화 연구

2013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실버산업전공

황슬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천근

노인부양주체에 관한 의식 변화 연구

A Study on Consciousness Changes of Supporting the Elderly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실버산업전공

황슬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천근

노인부양주체에 관한 의식 변화 연구

A Study on Consciousness Changes of Supporting the Elderly

위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실버산업전공

황슬기

황슬기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노인부양주체에 관한 의식 변화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실버산업전공

황 슬 기

산업화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는 과거 가족을 중시하던 경향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부양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처럼 부양의식은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사회에서의 노인 부양 형태는 가족에 의한 ‘직접적인 부양 방법’이 가장 많았고, 그것이 최선이였다. 그러나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사회 구조를 단기간 변화시키며 젊은 세대의 부양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가치관의 혼재로 세대 간의 차이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고령화, 노인질환, 세대격차로 인한 가치관의 혼재 등 다양한 노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에 부양 서비스와 부양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과거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던 부양의식은 현대사회로 바뀌는 변화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직접적 부양의식은 약해졌다. 반면에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양의식의 변화가 어떠한지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유추하여 부양 서비스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의식의 변화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둘째, 근대화 이론에 따른 부양의식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셋째, 교환이론에 따른 부양의식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넷째, 사회 이탈 이론에 따른 부양의식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다섯째, 이에 따라서 그 견해가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 향후 어떻게 부양의식이 변할 것 인지 유추하여 보고자 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표를 근거로 ‘가족’분야를 부분적으로 연도별 각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출하였으며, 조사항목 중 ‘가족’ 조사에 따른 유형만 분석하여 기존 통계청 자료를 통해 대표적 부양 이론에 적용해 부양의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부양의식은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가족,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결론적으로 이 4가지 부양의식을 위의 연구 방법에 대입시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흐름에 따른 변화하는 부양의식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알아본 부양의식을 통해 향후 노인부양의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변화 흐름을 유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양 서비스와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의 기초자료 정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노인부양주체, 부양의식, 의식변화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 3 절 연구의 한계성	5
제 2 장 노인부양의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노인부양에 관한 개념과 배경	6
제 2 절 노인부양 이론을 통한 현대사회의 부양의식 변화	8
1. 근대화이론	8
2. 교환이론	9
3. 노인부양에 관한 선행연구	10
제 3 절 노인부양의 유형	12
1. 부양주체에 따른 유형	12
2. 부양분담에 따른 유형	12
1) 개별부양	12
2) 서비스부양	13
3) 일시적 부양	13
3. 부양 필요성에 따른 유형	14
1) 정서적 부양	14
2) 신체적 부양	15
3) 경제적 부양	16

제 3 장 연구 설계	17
제 1 절 연구 분석 틀	17
제 2 절 사회조사 방법	19
제 3 절 사회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
제 4 절 전반적인 부양 주체에 대한 인식변화	23
제 4 장 연구 결과	26
제 1 절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의식의 관계	26
1. 성별과 부양의식의 관계	26
2.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	31
3.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40
제 2 절 근대화이론에 따른 부양의식의 관계	60
1.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60
2.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77
3. 부모와의 교류(동거)와 부양의식의 관계	94
제 3 절 교환이론에 따른 부양의식의 관계	99
1.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99
2.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110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21
제 1 절 요약 (이론 및 연구의 특성)	121
제 2 절 결론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123
【참고문헌】	127
【부 록】	129
ABSTRACT	131

【 표 목 차 】

[표-1] 연구 분석틀	18
[표-2] 사회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
[표-3] 전반적인 부양 주체에 대한 인식변화	23
[표-4] 성별과 부양 의식의 관계	26
[표-5]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	31
[표-6]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40
[표-7]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60
[표-8]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77
[표-9] 부모와의 교류(동거)와 부양의식의 관계	94
[표-10]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99
[표-11]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110

【 그림 목 차 】

〈그림-1〉 전반적인 부양 주체에 대한 인식변화	24
〈그림-2〉 성별과 부양 의식의 관계 (남성)	27
〈그림-3〉 성별과 부양 의식의 관계 (여성)	29
〈그림-4〉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 (미혼)	32
〈그림-5〉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 (배우자있음)	34
〈그림-6〉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 (사별)	36
〈그림-7〉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 (이혼)	38
〈그림-8〉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10대)	41
〈그림-9〉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20대)	43
〈그림-10〉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30대)	45
〈그림-11〉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40대)	47
〈그림-12〉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50대)	49
〈그림-13〉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60대)	51
〈그림-14〉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70대)	53
〈그림-15〉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80대)	55
〈그림-16〉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90대)	57
〈그림-17〉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무학)	61
〈그림-18〉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초등)	63
〈그림-19〉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중등)	65
〈그림-20〉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고등)	67
〈그림-21〉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대학교 4년 미만)	69
〈그림-22〉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대학교 4년 이상)	71
〈그림-23〉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대학원 석사과정)	73
〈그림-24〉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대학원 박사과정)	75
〈그림-25〉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100만원 이하)	78
〈그림-26〉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100만원~200만원미만)	80
〈그림-27〉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200만원~300만원미만)	82

〈그림-28〉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300만원~400만원미만)	84
〈그림-29〉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400만원~500만원미만)	86
〈그림-30〉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500만원~600만원미만)	88
〈그림-31〉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600만원~700만원미만)	90
〈그림-32〉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700만원 이상)	92
〈그림-33〉 부모와의 교류(동거)와 부양의식의 관계 (동거)	95
〈그림-34〉 부모와의 교류(동거)와 부양의식의 관계 (비동거)	97
〈그림-35〉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거의 매일)	100
〈그림-36〉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일주일에 한 두번)	102
〈그림-37〉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한달에 한 두번)	104
〈그림-38〉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일년에 몇 번)	106
〈그림-39〉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거의 하지 않음)	108
〈그림-40〉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거의 매일)	111
〈그림-41〉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일주일에 한 두번)	113
〈그림-42〉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한달에 한 두번)	115
〈그림-43〉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일년에 몇 번)	117
〈그림-44〉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거의 하지 않음)	11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의 경로효친 사상이나 자녀의 효도관이 달라지고 있다. 효의 실천에 있어 현실조건에 맞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녀의 부양의식과 부양가치관은 과거 부자중심의 전통적인 대가족주의 가치관에서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 단위의 생활체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과거 가문과 가족을 중요시하던 경향에서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 부양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노인부양 형태는 직접적인 가족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환경이 변화 하였고, 환경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구조 역시 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을 이룩하면서 동양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가진 노인 세대와 서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사회구조에 따른 가치관의 혼재로 인해 세대 간의 차이는 노인들이 적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노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출산율감소 및 핵가족화, 의학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늘고 있다.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에 따르면,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超)고령사회' 또는 '후기 고령사회' 라고 한다.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섰으며, 향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구 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짧은 기간인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될 것이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 보다 그 충격이 클 것이다.(한국노인인력 개발원, 2011, p8)

급증하는 핵가족화 현상은 평균가족원 수가 줄어드는 ‘소(少)가족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가족원 수의 감소는 곧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를 뜻한다. 특히 가정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의 과중한 부담을 뜻한다.

향후 2020년에는 젊은 사람 5~6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부양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데, 노부모를 무조건 직접적 돌보아야 한다는 젊은이들의 부양의식과 효의 따른 가치관은 변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직접적 부양을 원치 않는다. 또한 실질적 대비책 역시 부족하다.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고 이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자녀의 수는 줄어들고 더욱 복지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대가족의 경우 항상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노인)부양은 자식의 몫이었고, 전통사회에서는 ‘직접적’ 부양의식은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또 하나의 효의 도리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면서 전통가족형태의 변형이 일어났다. 이러한 산업화는 전통적으로 노인과 함께 동거하던 ‘대(大) 가족’형태에서 독립적 ‘소(少) 가족’ 형태가 늘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부양의식 역시 변화하였다.

이 후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해지는 반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해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노인부양의식 변화와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미래의 노인부양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사회 변화에 우리는 이제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이 연구가 하나의 뒷받침이 되리라 믿는다.

노인 부양의식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노인 부양 문제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으며, ‘초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을 순탄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회조사표를 근거로 하였다.

사회통계조사 중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인 ‘가족’분야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연도별 각 2008년=52,940명, 2010년=45,078명, 2012년=36,88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출하였으며, 조사항목 중 ‘가족’ 조사에 따른 유형만 분석하였다.

이 중 무응답 대상자는 전체대상에서는 포함하였지만 실제 분석단계에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하는 연구대상이 각 분석단계에 들어갔을 경우 각 항목별로 전체 표본수가 무응답 대상자에 따라 연구의 정확성이 달라지고 연구 표본을 파악하는데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응답 대상자의 무응답이 각 항목별로 그 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구의 대상 변화 추이가 상이하다.

연구 대상의 범위는 노인부양의식(견해)의 변화를 보다 뚜렷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간의 정서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10대)부터 노인부양의 직접적 부양자에 해당하는 노년기(90대)까지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의식이 시대에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유추하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부양 이론에 따른 부양의식을 현대사회의 맞게 부양의식과 특성을 교차 분석 하였다.

첫째, 시대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이 어떻게 변해 왔고 변할지 유추하기 위해 08년, 10년, 12년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부양의식을 선별 하였다.

둘째, 부양의식은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가족,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셋째, 4가지로 나눈 부양의식과 각 이론적 특성을 통해 교차분석을 통해 결과 값을 만들고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 부양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그에 따른 이론은 국내 노인 부양에 관한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관련 학술논문을 참고 하였으며, 노인부양 의식 변화 비교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통하여 활용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로, 조사대상자를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개발 ‘기초생활 사회조사 표’를 근거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를 직접 선정하지 못하였다.

둘째, 사회조사 통계 중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인 ‘가족’ 분야를 다루므로 다른 통계보다 주관적이라는 점. 또한 ‘가족’분야 유형만으로 새로운 가설을 대입했기에 부양의식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변화추이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추론하기 보다, 관계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기초자료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노인부양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노인부양에 관한 개념과 배경

노인부양의 관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활의 규율로서 또한 도리로서 당연시하였었다. 특히 논어에 등장하는 ‘경로효친’ 사상은 유교적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였고 근대화 이전의 사회는 사회문제가 없는 목가적 사회로 가부장제가 강한 성격을 나타내며 가정과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전통적 가족 부양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부양이라 함은 쉽게 말해 생활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돌보다’는 뜻이다. 넓은 뜻으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공법적 부양도 포함되지만, 좁은 뜻으로는 사법(민법) 상의 친족 부양을 의미한다. 민법은 상호 부양에 관한 장을 두어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직계 혈족 및 배우자 상호 간에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다.

Caplan(1982)에 의하면 부양이란, 정서적 지원과 필요한 자원을 개인에게 제공하고, 개인을 그에게 의미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관계가 지속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Warren(1981)은 물질적 원조, 정서적 지지, 신체적 고통을 보살펴 주는 일, 외로울 때 위로와 시중을 들어 주는 등의 서비스라고 하였다.

Parsons T.는 (1977) 가족을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 중 유형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 본다.

Bergmand(1978)은 한 개인을 통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얻는 과정을 부양이라 하였으며, 노년 학계에서 가족의 부양이라 함은 자신의 힘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개념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금전이나 물자 등의 지급에 의한 경제적 부양과, 심신 상태에 알맞은 간호를 하거나 또는 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시중을 들어주는 복지 부양과 애정과 신뢰, 신의와 성실을 기본으로 한 일상적 대화와 상호협조를 통한 정서적 부양의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다.(이재영, 2012, p.20)

가족부양은 사적 부양의 영역에 속하며, 노인부양은 경제적 부양과 더불어 신체적인 수발이나 질병의 간호를 통한 육체적 부양,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과 정신적 위안을 갖도록 도와주는 정서적 부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녀의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이 노부모에게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였다.(이혜원, 1996, p.73)

제 2 절 노인부양 이론을 통한 현대사회의 부양의식 변화

1. 근대화 이론

현대화 이론은 Cowgill & holmes (1972)에 의한 이론으로 노인의 지위는 산업화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절대적 지위가 급변하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의 과정 속에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일섭, 최성재, 2000, p.89)

산업화에 의하여 생산 활동의 ‘분업화와 기계화’를 시작으로 2차,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발전했다. 산업의 발달은 경제적 ‘부’를 가져왔음에 틀림없지만 너무나 급진적 발전으로 전통적 부양형태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는 급변하는 근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였고, 그중 가장 큰 노인들의 부양 문제는 신경 쓰지 못 하였다.

이러한 근대화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역시 점차 발달하였고, 또한 산업화에 따른 생활 수준 및 교육수준의 향상 역시 자연적으로 사회구조를 ‘도시화’ 또는 ‘핵가족화’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점차 낮아지고 그들의 역할이 상실되었다.

노인들의 역할이 모호성을 초래하게 되면서 사회와 문화구조의 틀이 변화하였다. 근대화의 변화는 위와 같은 가부장제의 전통적 가족 부양형태를 ‘개인적’, ‘독자적’중심의 사회형태를 만들었다. 또한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는 점차 쓸모없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은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느 순간 부양의식은 ‘가족이 직접 부양’하던 전통적인 부양의식을 가지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 또는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오도록 변화하게 되었고, 변화된 사회 속에서 가족들은 변화된 부양 형태를 현실에 맞게 적응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부양을 가족이 ‘직접’ 부양하는 것 보다 가족도 어느 정도는 부양하더라도 ‘정부가 함께’ 해결해주길 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노인부양 문제가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심각하게 대두되어,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부양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의 노인부양이 사회에서 보장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오늘날 까지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2. 교환 이론

교환이론의 대표적 인물인 George C. Homans (1967) 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및 비신체적, 보상 및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의 교환이며, 개인의 행위는 자신에 의한 손익계산에 근거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환관계는 살피지므로, 이는 사회적 현상의 필수적 부분이 틀림없다. 따라서 교환이론은 행위자를 고립된 실재로서 파악하기보다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그 강조점을 둔다.

한국사회는 지난 40여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사회구조의 변화라 할 수 있겠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의 구성 형태는 확대가족이나 직계가족의 대가족 형태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바뀌었으며, 가족의 다양한 기능들은 축소되고 대부분의 기능들은 전문적인 사회제도로 이관되었다.

전통사회에서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대가족의 가부장 중심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에 노인부양 역시 가족이 ‘직접’ 부양하였다. 가족관계가 좋으니 자연스레 부양의식 역시 높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핵가족화로 가족의 형태의 축소와 더불어 부양의식 역시 붕괴하였다.

고령자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은 자녀의 교육 및 생업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하나의 재산 가치를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령자인 노인은 일종의 권위자로서의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들의 지적 재산은 ‘교환자원’으로서의 자격 역시 충분하였다. 대표적 예로 ‘고려장’을 들 수 있다.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지냈다는 풍습으로 실제 존재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일제 강점기의 식민사관이지만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서술한다.

한 관리가 늙은 노모를 풍습대로 버리려 했으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잃을까 가지를 꺾어 표시를 했고 관리는 차마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성심껏 봉양하였다. 이후 관리가 난관에 처하였을 때 노모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였고 이에 임금도 감동해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의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 요소 중 하나였으며 교환의 가치가 충분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산업화에 따라 노인의 권위적 위치는 점차 하락하였고 노인의 경험에 의한 기술과 삶의 지혜 역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큰 필요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주의’가 점차 심해져 갔고 사람들의 의식 또한 ‘서구적 사상’이 강해지자 자연스럽게 노인의 사회적 중요도와 위치, 필요는 줄어들었고 그들의 기술과 지혜는 쓸모없게 되어 교환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3.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은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 효 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중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각 세대 모두 부모부양의식은 청년 세대가 중년이나 노년 세대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노년세대는 정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은 반면, 중년이나 청년세대는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나 부양의식에 두는 관심의 차이를 나타냈다.

중년층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의식 수준이며 청년층의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효 의식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노년세대와 중년세대는 부모부양의식에서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의식의 영향력이 큰 반면 청년세대는 효의식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정선주(2003)의 연구에 의하면 장년층이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하여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년층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고학력일수록, 남성일수록 정서적 부양의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응답으로는 노인자신과 가족이 부양해야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노년기에는 가족과 노인자신과 국가가 부양해야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장길종(2008)의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효와 부모부양의식에서 현대사회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부양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리된 효 의식이 가족주의 가치관을 교육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적 가족 윤리와 관련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의식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양의식을 세대별 부양의식 또는 단년도로 인해 단편적 특성을 가진 부양의식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제한점 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정확성을 가진다.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로 인한 의식변화는 시대에 흐름에 따라 부양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해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굳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양이론(근대화이론·교환이론)을 특성에 적용하여 시대 흐름에 따른 부양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향후 변화할지에 대한 유추를 해봄으로써 현대 사회의 국민들의 부양의식 변화를 알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냈다.

산업화 이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향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대비책 이자 변화되어가는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의 의식변화 차이를 통해 미래의 노인부양의식 관련 대책과 의식 수준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노인부양의 유형

1. 부양주체에 따른 유형

일반적으로 노인부양이라 함은 부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크게 공적(公的)부양과 사적(私的)부양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사적 부양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이 부양을 담당하는 개인적 혹은 가족적 차원의 부양을 말한다. 반면, 공적부양은 공적부조라고도 하는데 지역사회 및 국가가 개인에게 개입하여 사회보장 서비스 혹은 복지사업차원의 사회적 부양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공적부양에서 노부모는 자녀 또는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문화적 규범과 친밀감에 대한 강한 편견으로 인하여 장점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적 부양으로는 그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노인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각기 다른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보편적으로 적용 되면서 공적부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체로 사회보장제가 발달하여 있는 선진 사회에서는 공적 부조로서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은 가족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양분담에 따른 유형

모든 일이란 분담하면 훨씬 수월해 진다. 이는 노인부양에서 역시 마찬가지 이다. 노인들의 연령과 건강상태, 그리고 그에 맞는 서비스의 유형과 필요 유무의 정도, 부양시설과 이용조건 등에 따라서 우리는 분담된 부양의 유형을 개별부양, 서비스적 부양, 일시적 부양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별부양

먼저 개별부양은 비교적 서비스적 부양형태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가

장 일반적 부양유형이다.

개인부양은 노인 개인이나 노부부가 자신의 부양을 해결하는 유형으로 개인주의 중심의 선진국의 주된 부양유형이다. 우리나라의 민족 특성상 유교적 사상이 강하므로 노후에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지냄으로써 가족 내에서 부양이 쉽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세대 간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다양한 부양의 유형을 만들었다.

2) 서비스 부양

이는 말 그대로 노령화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적절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 시설에서 본인들의 부양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시설로 실버타운이 있다. 실버타운이란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의 이유로 급변하는 세상 속 급속도로 늘어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무료, 유료로 종합적인 서비스 적 보호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일컫는다.

이는 시설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정도의 질과 규모에 따라 노인촌, 노인복지주택, 양로/요양원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다양한 논문에서 서비스적 부양을 실버타운형과 양로/요양원, 의료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으나 필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장 큰 의미와 본질의 목적은 같으므로 크게 서비스 부양을 하나로 보았다.

3) 일시적 부양

일시적 부양은 노인 부양이 단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부양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또는 복지회관, 단기보호 시설 등이 있다.

3. 부양 필요성에 따른 유형

1) 정서적 부양

정서적 부양이란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변화 또는 노후 된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 불안 등의 심리적 압박을 달래주며 신체적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인격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양을 말한다. 이는 노인의 인생에 있어 은퇴로 인한 역할 관계의 상실과 경제적 빈곤, 배우자의 죽음, 젊은 세대와의 갈등, 건강 악화,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자녀로부터 더 많은 기대를 가지며 노인으로 하여금 쓸쓸함과 무의미함, 상실감, 고독감,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다. 다시 말해 노인의 주변인과의 관계는 만족스럽게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서적 측면의 부양이다.

정서적 부양은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경제적으로 아무리 충분한 부양이 이루어지더라도 인격적 주체로서의 정서적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보다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84%는 자신들의 자녀와 한 시간 이내의 주거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 중 85%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녀를 만난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노인가구와 자녀의 가구가 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친자간의 접촉 빈도도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위와 같은 수정확대가족의 형태가 형성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일부 세대에 해당 된다.

노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하고 사회적인 접촉을 하려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욕구는 충족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노인의 정서적 부양은 가족기능의 본질이 애정에 의거한 정서적 역할임을 생각할 때 가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부양형태가 요구되며 이는 다른 어떤 부양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노년기 고독과 소외감 해소에 중요한 해결책으로서 궁극적으로 노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노부모와의 질적인 접촉과 지지, 격려, 마음을 알리고 이해하고 열게 하는 대화, 감정적 교류로 인한 신뢰, 사랑과 감사, 존경 등이 있다.

2) 신체적 부양

신체적 부양은 고령화로 인하여 신체적 활동 및 가사운영에 필요한 노인의 일상의 필요한 부분 내에 신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양을 말한다.

현대사회에 걸맞게 점차 전통가족에서 현대가족, 핵가족화가 되면서 전통사회의 가족형태에 비해 신체적 부양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노화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저하로 인해 건강상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에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는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일상생활 및 가사운영의 수행이 원만하도록 신체적 원조와 가사운영, 즉 노인이 필요로 하는 일 등을 하거나 보살펴 드리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노인의 신체 노화는 질병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질병은 보통 장기적이고 진행되어가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으로 결국 가족 중 자녀가 보살펴야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이 많았고 가치관 또한 효를 미덕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노부모는 자녀에게 병간호와 시중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자녀가 분가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의 수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부양의 기능은 약해졌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인의 신체적 부양해결이 어려워졌다.

서양의 경우 노인세대 가족 또는 독거노인은 공적기관을 통한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대부분의 신체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 시설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신체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나 시설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도 노인들의 서비스적인 부양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자녀는 노인의 신체적 부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고, 장애나 병이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서는 서비스 부양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양까지 겹쳐 노인부양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현대 가족에서 신체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어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부양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3) 경제적 부양

경제적 부양이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지원하거나 자립을 도와주는 부양형태를 말한다. 경제적 부양은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형태이다.

노인의 경제생활 해결 방법은 가족부양, 저축, 노동 및 사업수입, 연금 등으로 사회보장에 의한 급부, 공적 부조, 기타 사적 부양으로 한다.

노년기의 경제문제는 건강유지나 여가활동·자아실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경제적 부양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 중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노인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건강이 좋은 노인들로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기회가 부여되고 재훈련 제도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재분배 받을 제도 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이 토지를 기초로 하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사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묵시적 협상으로 인해 오늘날의 노인들보다 많은 사회적 교환가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노후의 경제적 부양의 문제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일부 노인을 제외한 많은 노인들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태로써 은퇴를 경험하고,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의 사회적 교환가치가 점차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제부양이 노인부양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 3 장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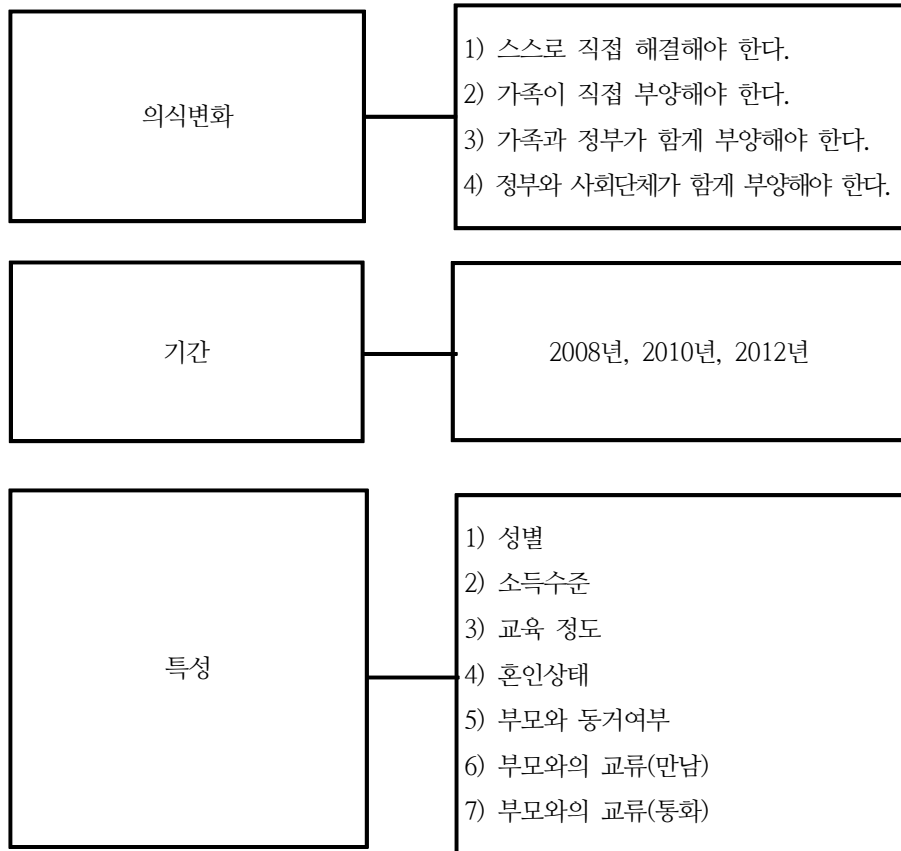
제 1 절 연구 분석 틀

다양한 부양이론을 통한 의식변화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배경 변인, 가족특성 변인, 가구소득 변인 등 개인의 특성이 현대사회에 사회적 현실에 맞게 노인부양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통계청 자료를 통하여 대상자들의 개인적 배경 변인[성별, 소득수준, 교육 정도, 혼인상태,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와의 교류-(만남,통화)]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이에 대한 종속변인을 노인 부양에 대한 의식으로 하여 이를 설정하였다.

각각의 항목으로 내용을 설정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하여 부양의식의 변화를 좀 더 세부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모형을 제시하면 <표 -1>와 같다.

〈표-1〉 연구 분석틀



제 2 절 사회조사 조사방법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전체 10개 부문으로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가 있으며 10개 조사부문 중 가족부문에서 필요 항목 (성별, 소득수준, 교육 정도, 혼인상태,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와의 만남, 부모와의 통화)을 표본 추출 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424 표본가구내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이 중심들이다.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및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ss.kostat.go.kr)를 통해 자료 제공되며, 「사회조사보고서」 발간 및 「한국의 사회지표」에 발췌 수록된다.

제 3 절 사회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2〉 사회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2008년	2010년	2012년	2008년	2010년	2012년
무응답		10,409	8,232	5,945	19.7%	18.8%	13.9%
성별	남자	25,666	25,007	17,577	48.5%	55.5%	47.6%
	여자	27,274	20,071	19,311	51.5%	44.5%	52.4%
연령대	10	7,631	10,927	3,985	14.4%	24.2%	10.8%
	20	5,647	4,654	4,124	10.8%	10.3%	11.2%
	30	8,641	6,967	6,229	16.5%	15.5%	16.9%
	40	9,357	7,835	7,332	17.9%	17.4%	19.9%
	50	6,877	6,110	6,396	13.1%	13.6%	17.3%
	60	4,662	4,170	4,376	8.9%	9.3%	11.9%
	70	3,079	3,082	3,391	5.9%	6.8%	9.2%
	80	788	868	981	1.5%	1.8%	2.7%
	90	59	71	73	0.1%	0.2%	0.2%
혼인 상태	미혼	9701	8,723	9,568	38%	19.4%	25.9%
	있음	28,075	23,633	22,827	53%	52.4%	61.9%
	사별	3,417	3,155	3,128	6.5%	7.0%	8.5%
	이혼	1,338	1,335	1,365	2.5%	3.0%	3.7%
교육 정도	무학	12,776	1,958	1,908	24.1%	37.8%	5.2%
	초등학교	4,942	4,351	4,427	9.3%	4.3%	12%
	중학교	4,550	3,859	4,894	8.6%	8.6%	13.3%
	고등학교	15,688	13,148	12,316	29.6%	29.2%	33.4%
	대학 (4년제 미만)	5,681	5,226	4,900	10.7%	11.6%	13.3%
	대학교 (4년제 이상)	8,050	7,153	7,154	15.2%	15.9%	19.4%
	대학원 석사과정	1,007	908	1,014	1.9%	2.0%	2.7%
	대학원 박사과정	246	243	275	0.5%	0.5%	0.7%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 25,666명(0.8%) 25,007명(10%), 17,577명(12%) 여자 27,274명(08%), 20,071명(10%), 19,311명(12%)으로 2008년 남자 48.5% 여자 51.5%, 2010년 남자 55.5% 여자 44.5%, 2012년 남자 47.6% 여자 52.4%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0대부터 90대로 구분하였으며 2008년에는 10대 7,631명(14.4%), 20대 5,647명(10.8%), 30대 8,641명(16.5%), 40대 9,357명(17.9%), 50대 6,877명(13.1%), 60대 4,662명(8.9%), 70대 3,079명(5.9%), 80대 788명(1.5%), 90대 59명(0.1%), 2010년에는 10대 10,927명(24.2%), 20대 4,654명(10.3%), 30대 6,967명(15.5%), 40대 7,335명(17.4%), 50대 6,110명(13.6%), 60대 4,170명(9.3%), 70대 3,082명(6.8%), 80대 868명(1.8%), 90대 71명(0.2%), 2012년에는 10대 3,985명(10.8%), 20대 4,124명(11.2%), 30대 6,229명(16.9%), 40대 7,332명(19.9%), 50대 6,396명(17.3%), 60대 4,376명(11.9%), 70대 3,391명(9.2%), 80대 981명(2.7%)으로 조사하였다. 연령대 중 30대, 40대의 응답률3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혼인상태는 2008년 미혼 20,109명(38%), 배우자있음 28,075명(53%), 사별이 3,417명(5.6%), 이혼 1,338명(2.5%), 2010년에 미혼 8,723명(19.4%), 배우자있음 23,633명(52.4%), 사별 3,155명(7%), 이혼 1,335명(3%), 2012년 미혼 9,568명(25.9%), 배우자 있음 22,827명(61.9%), 사별 3,128명(8.5%) 이혼 1,365명(3.7%)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이상, 석사, 박사로 구분하였는데. 2008년 무학 12,775명(24.1%), 초등학교 4,942명(9.3%), 중학교 4,550명(8.6%) 고등학교 15,688명(29.6%), 대학교(4년제 미만) 5,681명(10.7%), 대학교(4년제 이상) 8,050명(15.2%), 대학원 석사과정 1,007명(1.9%), 대학원 박사과정 246명(0.5%), 2010년 무학 1,958명(37.8%), 초등학교 4,351명(4.3%), 중학교 3,859명(8.6%), 고등학교 13,148명(29.2%), 대학교(4년제 미만) 5,226명(11.6%), 대학교(4년제 이상) 7,153명(15.9%), 대학

원 석사과정 908명(2%) 대학원 박사과정 243명(5%), 2012년 무학 1,908명 (5.2%), 초등학교 4,942명(9.3%), 중학교 4,550명(8.6%) 고등학교 15,688명 (29.6%), 대학교(4년제 미만) 5,681명 (10.7%), 대학교(4년제 이상) 8,050명 (15.2%), 대학원 석사과정 1,007명(1.9%), 대학원 박사과정 246명(0.5%) 응답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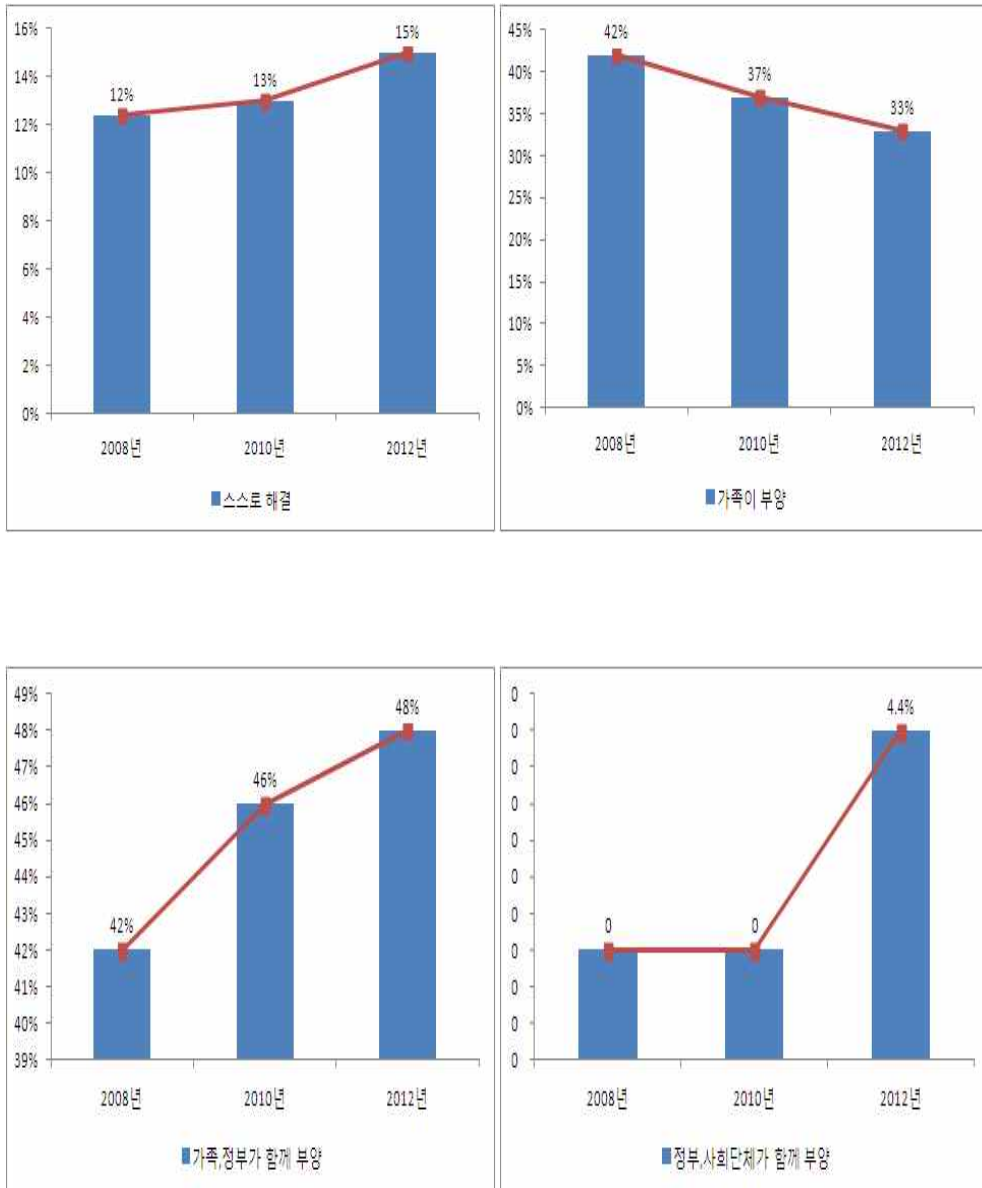
제 4 절 전반적인 부양 주체에 대한 인식변화

〈표-3〉 전반적인 부양 주체에 대한 인식변화

(2008년 N=42,456명, 2010년 N=36,832명, 2012년 N=36,877명)

구분	빈도 백분율 (%)											
	2008년				2010년				2012년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부양 의식	5,293 (12%)	17,629 (42%)	17,908 (43%)	1,626 (4%)	4,800 (13%)	13,690 (37%)	16,925 (46%)	1,417 (4%)	5,400 (15%)	12,221 (33%)	17,633 (48%)	1,623 (4%)

〈그림-1〉 전반적인 부양 주체에 대한 인식변화



부양주체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를, 부양이론은 다양한부양이론 중 ‘근대화이론·교환이론’을 통해 부양주체의 부양의식의 변화를 알아봤다

자녀의 부양의식과 부양가치관은 과거 부자 중심의 전통적인 대가족주의 가치관에서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 단위로 변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8년부터 2012년간의 부양의식의 변화를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2008부터 2012년까지의 노인부양의식 견해를 빈도분석 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부양의식의 변화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다양한 특성을 적용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양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부모와의 교류가 많던, 많지 않던 노인 부양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에서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에 따른 전반적 대상자들의 부양의식을 살펴보면 먼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2008년은 12%, 2010년은 13%, 2012년은 15%로 점점 증가한다.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2008년 42%, 2010년은 37%, 2012년에는 33%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직접적 부양의식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2008년 42%, 2010년은 37%, 2012년은 33%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워지면서 부양가족은 ‘간접적 도움’을 원하고 있다. ‘가족, 정부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2008년 3.8%, 2010년은 3.8%, 2012년은 4.4%로 미비한 차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과 정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일반적 특성과 부양의식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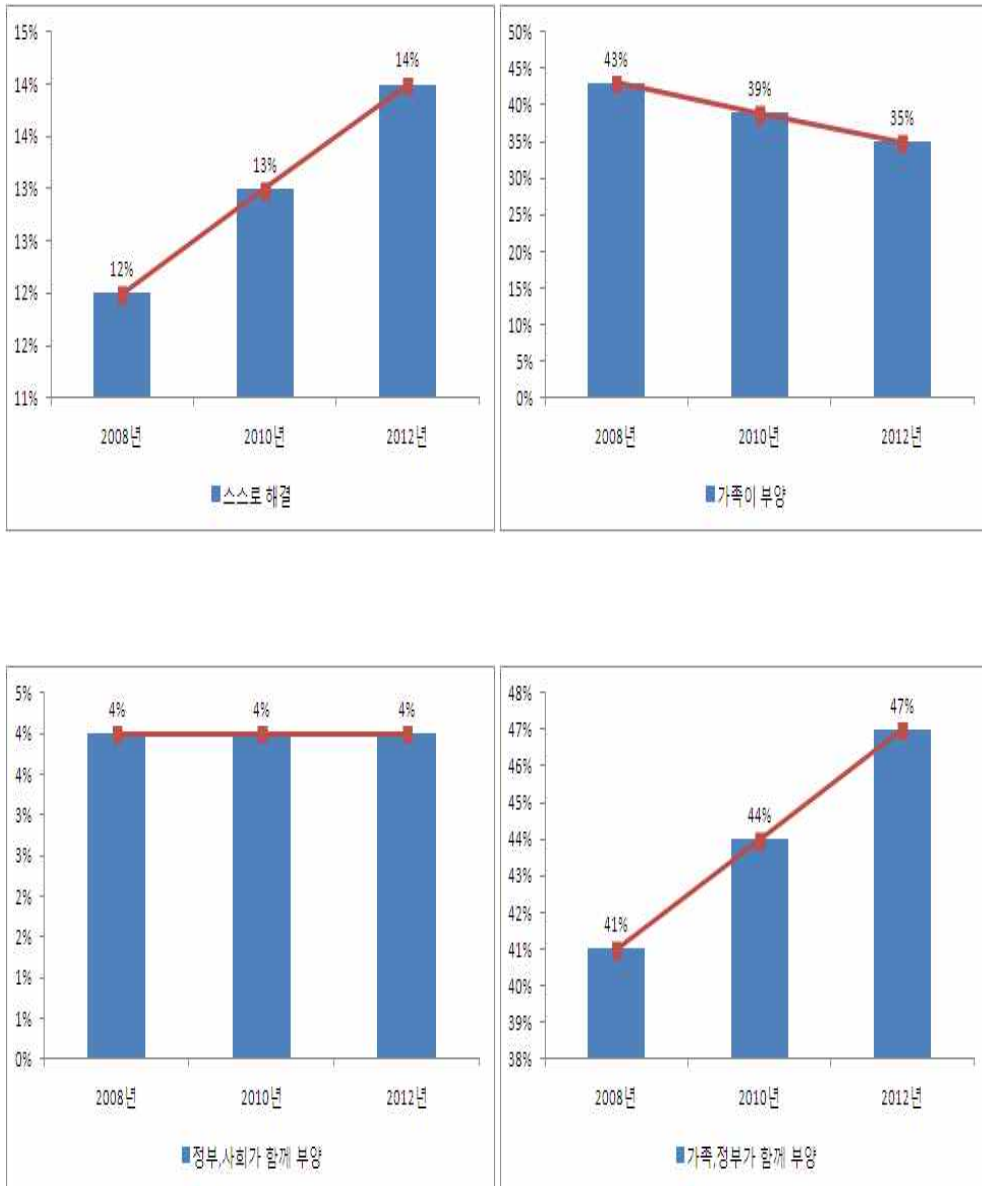
1. 성별과 부양 의식의 관계

〈표-4〉 성별과 부양 의식의 관계

(2008년 N=42,456명, 2010년 N=36,832명, 2012년 N=36,877명)

구분		빈도 백분율 (%)											
		2008년				2010년				2012년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성 별	남 자	2,459 (12%)	8,775 (43%)	8,280 (41%)	715 (4%)	2,245 (13%)	6,938 (39%)	7,746 (44%)	626 (4%)	2,528 (14%)	6,128 (35%)	8,166 (47%)	748 (4%)
	여 자	2,834 (13%)	8,854 (40%)	9,628 (43%)	911 (4%)	2,555 (13%)	6,752 (35%)	9,179 (48%)	719 (4%)	2,872 (15%)	6,093 (31%)	9,467 (49%)	875 (5%)
전체		5,293 (12%)	17,629 (42%)	17,908 (42%)	1,626 (4%)	4,800 (13%)	13,690 (37%)	16,925 (46%)	1417 (4%)	5,400 (15%)	12,221 (33%)	17,633 (48%)	1,623 (4%)

〈그림-2〉 성별과 부양 의식의 관계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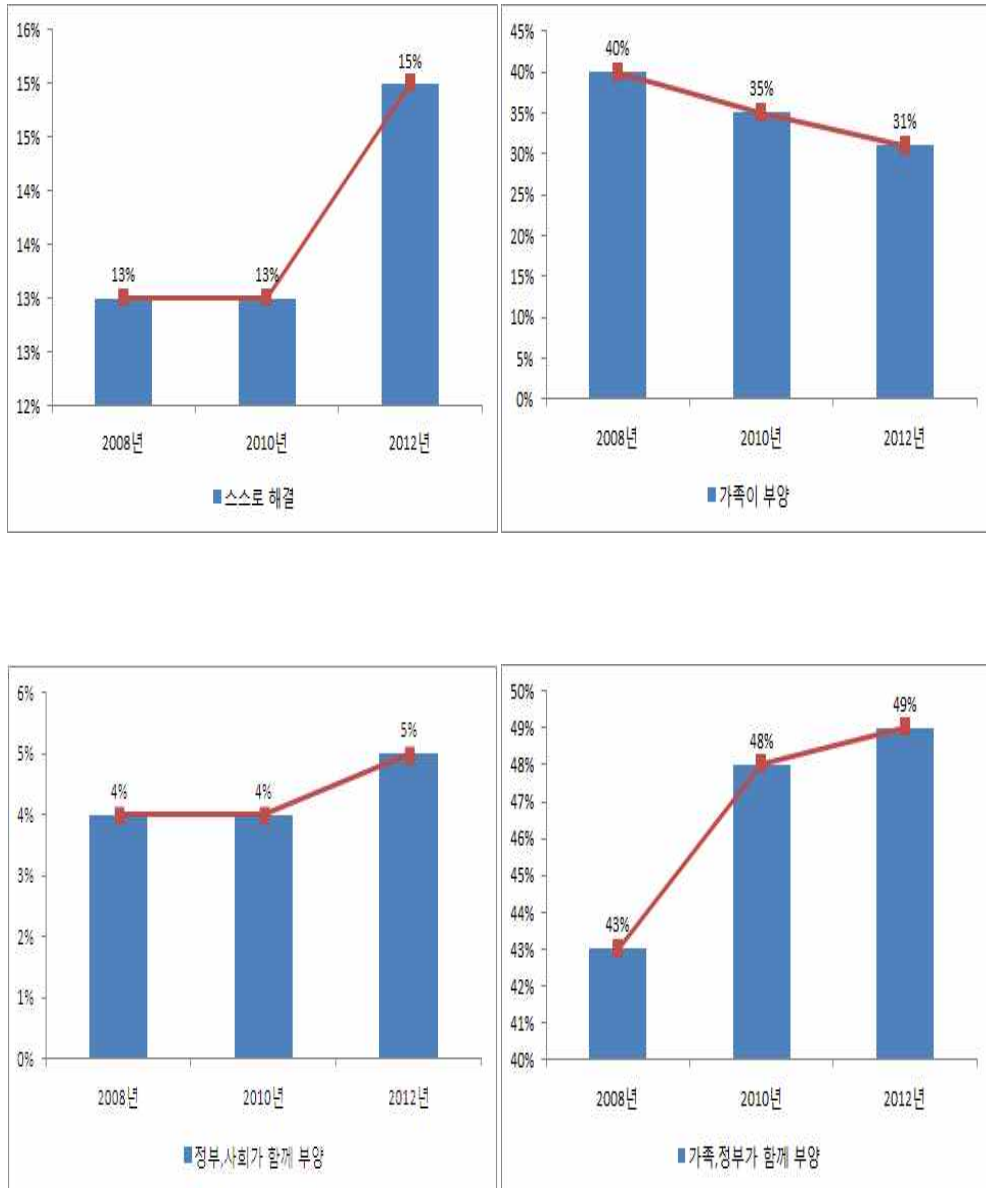
〈표-4〉을 살펴보면 노인부양의식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가족,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각 항목의 남자의 경우 2008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459명 (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8,775명 (1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8,280명(41%),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715명 (4%)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245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6,938명(39%),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7,746명(44%),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626명(4%)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528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6,128명(35%),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8,166명(47%),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748명(4%)이다.

〈그림-3〉 성별과 부양 의식의 관계 (여성)



‘여자’의 부양의식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834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8,854명(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9,628명(43%),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911명(4%)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555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6,752명(35%),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9,179명(48%),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719명(4%)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528명(15%),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6,093명(3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9,467명(49%),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875명(5%)이다.

남녀 모두를 고려해 보면 2008년부터 12년까지에 걸쳐서 부양의식의 변화를 보았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의 노인부양의식의 변화가 눈에 띈다.

남자의 부양의식은 거의 변화가 미미하지만 여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반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와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의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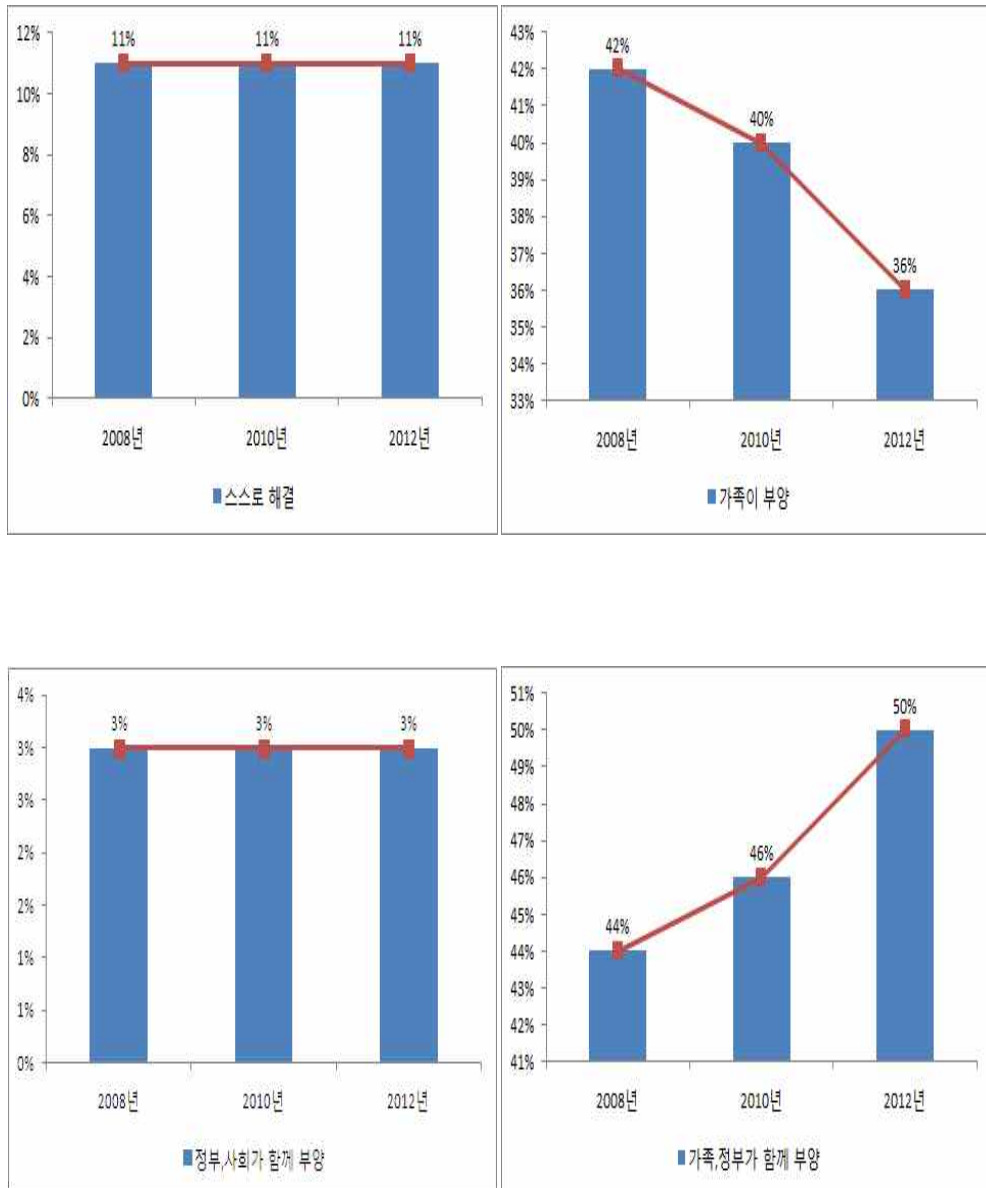
2.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

〈표-5〉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

(2008년 N=42,456명, 2010년 N=36,832명, 2012년 N=36,885명)

구분		빈도 백분율 (%)											
		2008년				2010년				2012년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혼 인 상 태	미혼	1,098 (11%)	4,012 (42%)	4,209 (44%)	319 (3%)	964 (11%)	3,475 (40%)	4,053 (46%)	229 (3%)	1,023 (11%)	3,442 (36%)	4,760 (50%)	338 (3%)
	배 우 자 있음	3,554 (13%)	11,374 (40%)	12,094 (43%)	1,042 (4%)	3,191 (14%)	8,370 (35%)	11,156 (47%)	909 (4%)	3,638 (16%)	7,070 (31%)	11,141 (49%)	972 (4%)
	사별	472 (14%)	1,667 (49%)	1,083 (32%)	194 (5%)	466 (15%)	1,337 (42%)	1,148 (36%)	200 (7%)	527 (17%)	1,252 (40%)	1,120 (39%)	229 (4%)
	이혼	169 (13%)	576 (43%)	522 (39%)	71 (5%)	179 (13%)	508 (37%)	568 (42%)	79 (6%)	212 (15%)	457 (33%)	612 (49%)	84 (3%)
전체		5,293 (12%)	17,629 (42%)	17,908 (42%)	1,626 (4%)	4,800 (13%)	13,690 (37%)	16,925 (46%)	1,417 (4%)	5,399 (15%)	12,221 (33%)	17,633 (48%)	1,632 (4%)

〈그림-4〉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 (미혼)



배우자의 유무(혼인상태)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견해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본인과 부모님만 생각한다면 쉽게 부양할 수 있지만 가족이 생기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우자의 유무의 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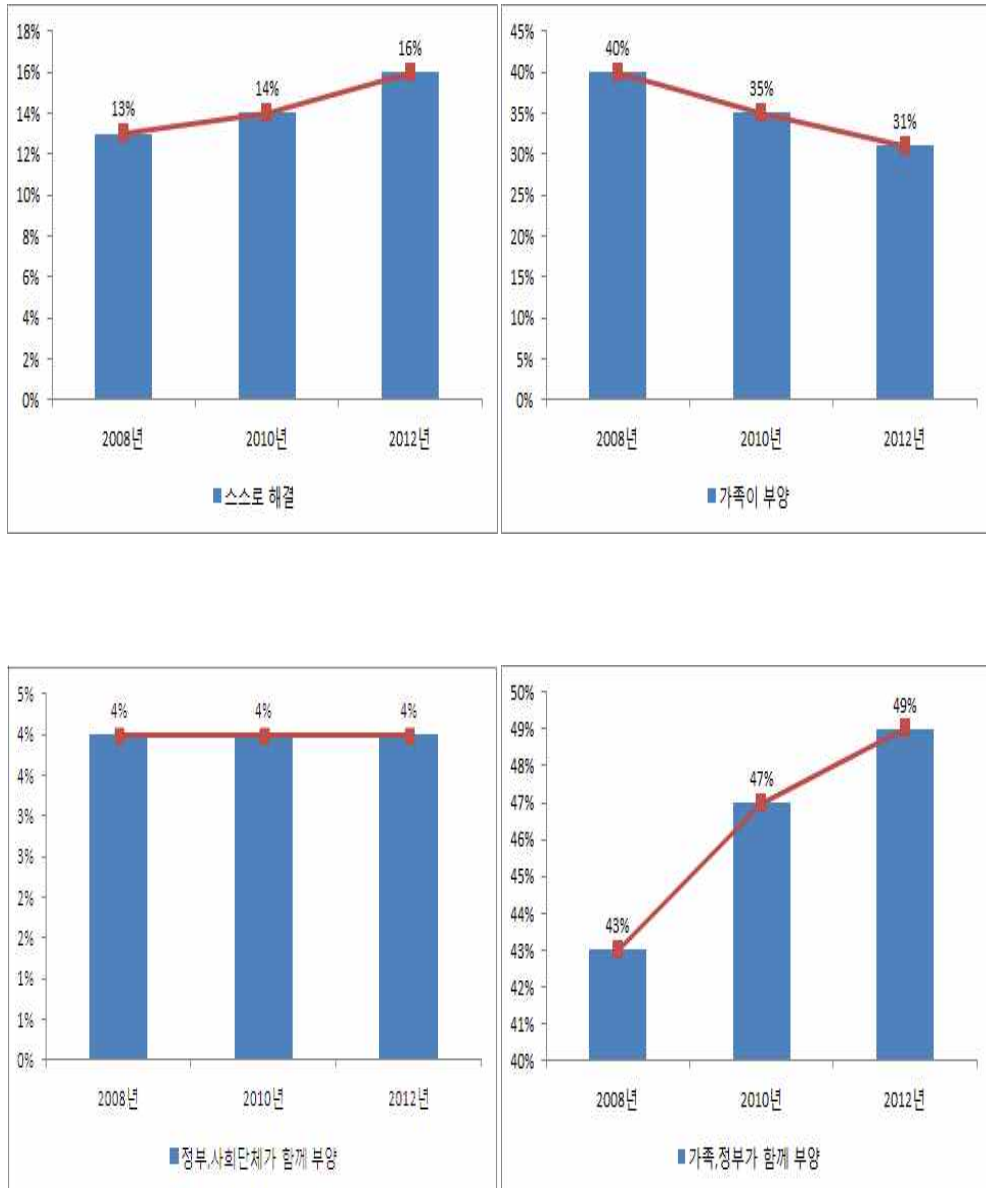
2008년 미혼 대상자부터 살펴보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098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012명(42%),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4,209명(44%),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19명(3%)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964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475명(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4,053명(4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29명(3%) 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023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442명(3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4,760명(5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38명(3%)이다.

미혼 대상자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가 10년(40%)에서 12년(36%)까지 4% 떨어졌으며,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10년(46%)에서 12년(50%)까지 4% 증가로 가족부양의식은 낮아지며 가족,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주체의 부양의식이 변하고 있다.

〈그림-5〉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 (배우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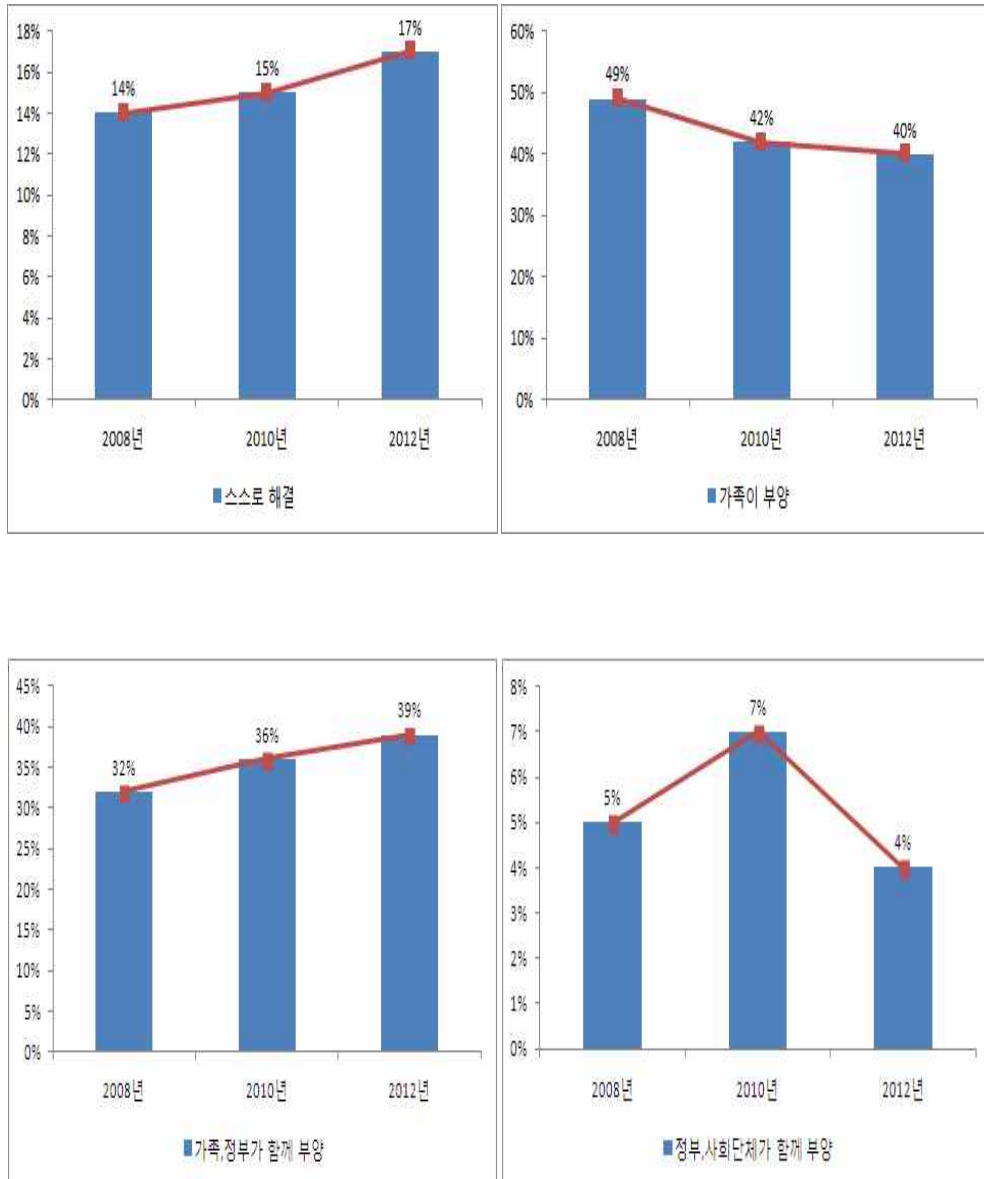


배우자가 있는 기혼 대상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554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1,374명(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2,094명(43%),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042명(4%)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191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8,370명(35%),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1,156명(47%),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909명(4%) 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638명(16%),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7,070명(3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1,141명(49%),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972명(4%)이다.

〈그림-6〉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 (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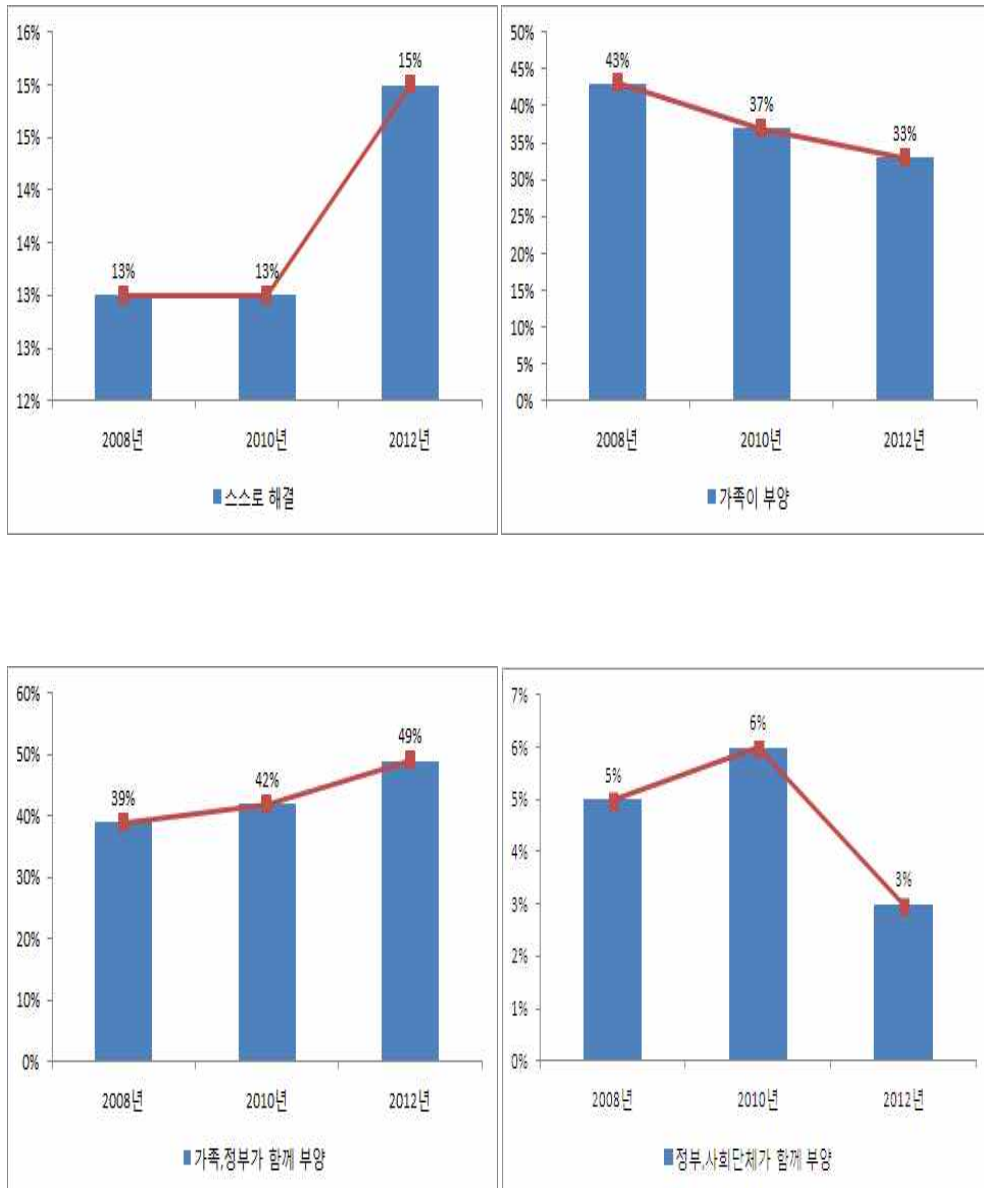


사별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472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667명(49%),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083명(32%),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94명(5%)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466명(15%),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337명(42%),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148명(3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00명(7%)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27명(17%),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252명(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120명(39%),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29명(4%)이다.

〈그림-7〉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 (이혼)



이혼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혼한 대상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69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576명(4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522명(39%),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71명(5%)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79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508명(3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568명(42%),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79명(6%) 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12명(15%),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57명(3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612명(49%),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84명(3%)이다.

이혼한 대상자의 경우 노인부양의식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혼인상태에 따른 배우자의 여부가 노인부양의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실히 미혼자와 기혼자의 차이는 분명했다. 기혼자들의 부양의식은 보다 분명하게 보여 진다.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부양의식이 가장 높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노인부양의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미혼자들이 기혼자가 되면서 부양의식 역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서를 막론하고 부모를 부양 하는 것은 도리이기에 가족이 부양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보다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의식이 강해짐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사별의 경우 미혼과 기혼과는 조금 다른 경우를 보였다. 가족들의 부양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가족의 직접부양의 의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족보다는 다른 타인에게 자신을 맡기고 싶단 마음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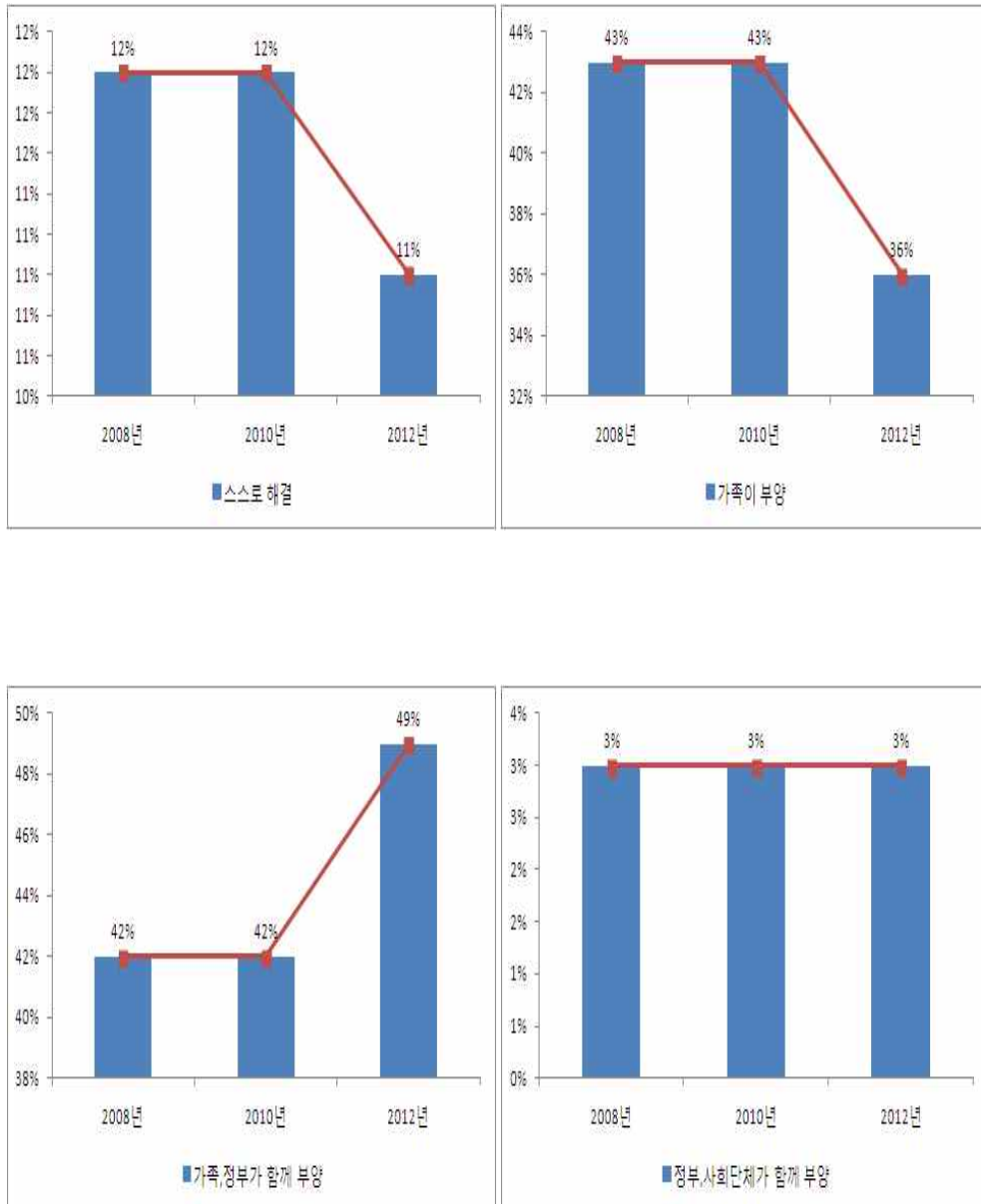
3.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표-6〉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

(2008년 N=42,456명, 2010년 N=36,877명, 2012년 N=36,876명)

구분		빈도 백분율 (%)											
		2008				2010년				2012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연 령 대	10 대	411 (12%)	1,432 (43%)	1,410 (42%)	109 (3%)	356 (12%)	1,332 (43%)	1,308 (42%)	91 (3%)	443 (11%)	1,442 (36%)	1,964 (49%)	134 (3%)
	20 대	618 (11%)	2,236 (40%)	2,620 (46%)	170 (3%)	487 (10%)	1,793 (39%)	2,268 (49%)	105 (2%)	452 (11%)	1,395 (34%)	2,127 (51%)	150 (4%)
	30 대	854 (9%)	3,240 (38%)	4,242 (49%)	303 (4%)	782 (11%)	2,272 (33%)	3,676 (53%)	237 (3%)	709 (11%)	1,849 (30%)	3,433 (55%)	235 (4%)
	40 대	957 (10%)	3,729 (40%)	4,308 (46%)	358 (4%)	812 (10%)	2,778 (36%)	3,975 (51%)	268 (3%)	850 (12%)	2,225 (30%)	3,938 (54%)	318 (4%)
	50 대	931 (13%)	2,922 (43%)	2,774 (40%)	247 (4%)	801 (13%)	2,318 (38%)	2,735 (45%)	255 (4%)	956 (15%)	2,149 (34%)	3,031 (47%)	258 (4%)
	60 대	894 (19%)	2,099 (46%)	1,466 (31%)	202 (4%)	842 (20%)	1,518 (37%)	1,586 (38%)	222 (5%)	1,040 (24%)	1,424 (33%)	1,695 (39%)	217 (5%)
	70 대	537 (17%)	1,503 (49%)	855 (28%)	183 (6%)	591 (19%)	1,273 (41%)	1,040 (34%)	175 (6%)	791 (23%)	1,272 (38%)	1,108 (33%)	219 (6%)
	80 대	85 (11%)	430 (55%)	223 (28%)	49 (6%)	119 (14%)	367 (40%)	367 (40%)	58 (6%)	152 (16%)	423 (43%)	316 (32%)	88 (9%)
	90 대	6 (10%)	38 (65%)	10 (17%)	5 (8%)	10 (14%)	39 (56%)	15 (21%)	6 (9%)	6 (8%)	42 (58%)	21 (29%)	4 (5%)
전체		5,293 (12%)	17,629 (42%)	17,908 (42%)	1,626 (4%)	4,800 (13%)	13,690 (37%)	16,925 (46%)	1,417 (4%)	5,399 (15%)	12,221 (33%)	17,633 (48%)	1,623 (4%)

〈그림-8〉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10대)



대상자는 10대부터 90대까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령별로 나누어 조사한 이유는 각 나이별로 부양의식이 다른 당연한 것이며, 본인 스스로가 부양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부양의식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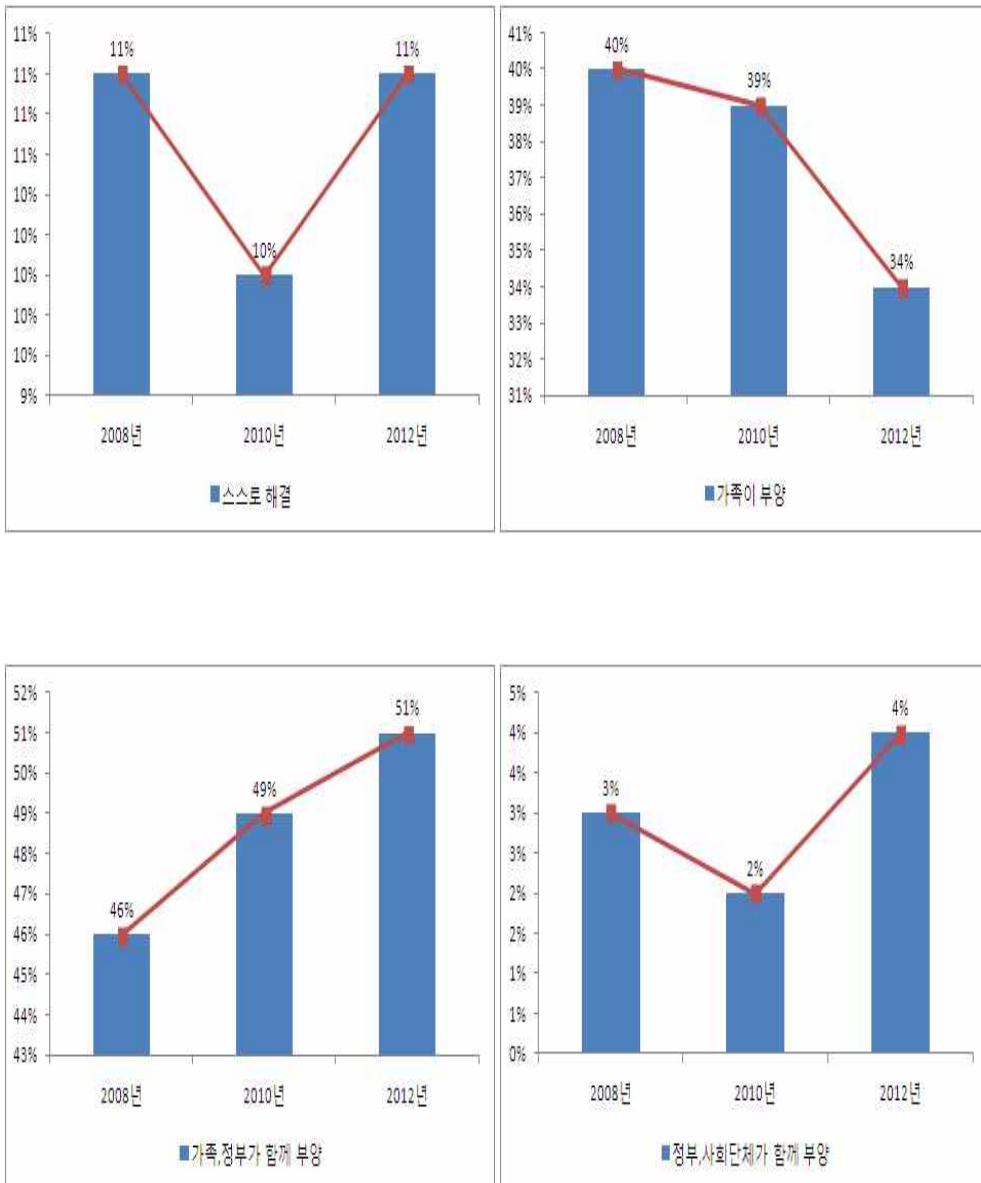
2008년 10대부터 보면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411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432명(4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410명(42%),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한다’ 109명(3%)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356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332명(4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308명(42%),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한다’ 91(3%)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443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442명(3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964명(49%),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한다’ 134명(3%)이다.

10대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부양의식보다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부양의식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림-9〉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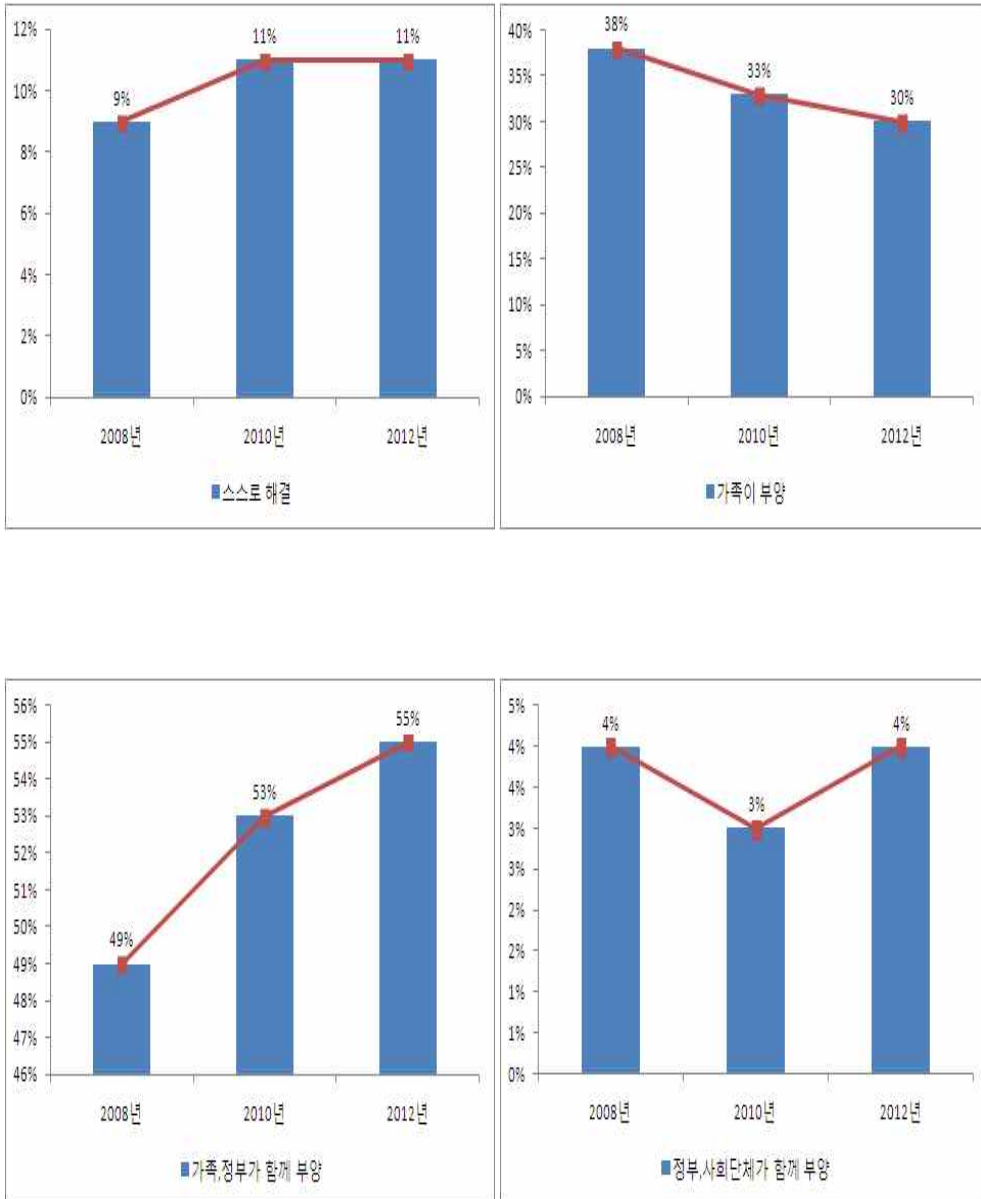
20대를 살펴보면 2008년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618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236명(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620명(46%),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170명(3%)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487명(1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793명(39%),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268명(49%),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105명(2%)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452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395명(34%),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127명(51%),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150명(4%)이다.

20대의 경우 역시 10대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부양의식보다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그림-10〉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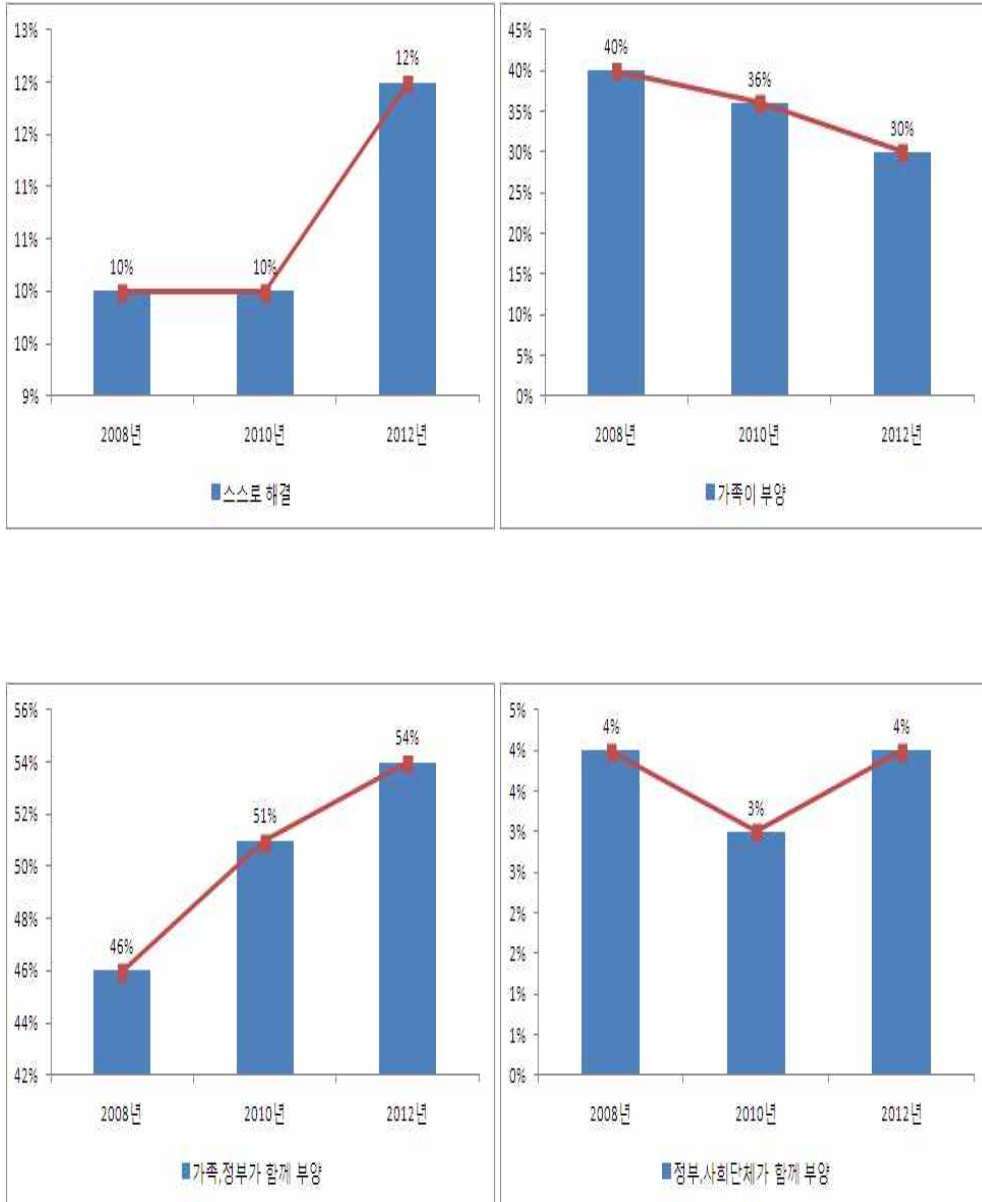
30대는 2008년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854명(9%),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240명(3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242명(49%),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한다’ 303명(4%)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782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772명(3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676명(53%),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한다’ 237명(3%)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709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849명(3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433명(55%),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한다’ 235명(4%)이다.

30대 역시 10, 20대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인다. 노인부양의식 견해 중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가장 높았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를 토대로 살펴보면 앞으로의 다른 연령층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11〉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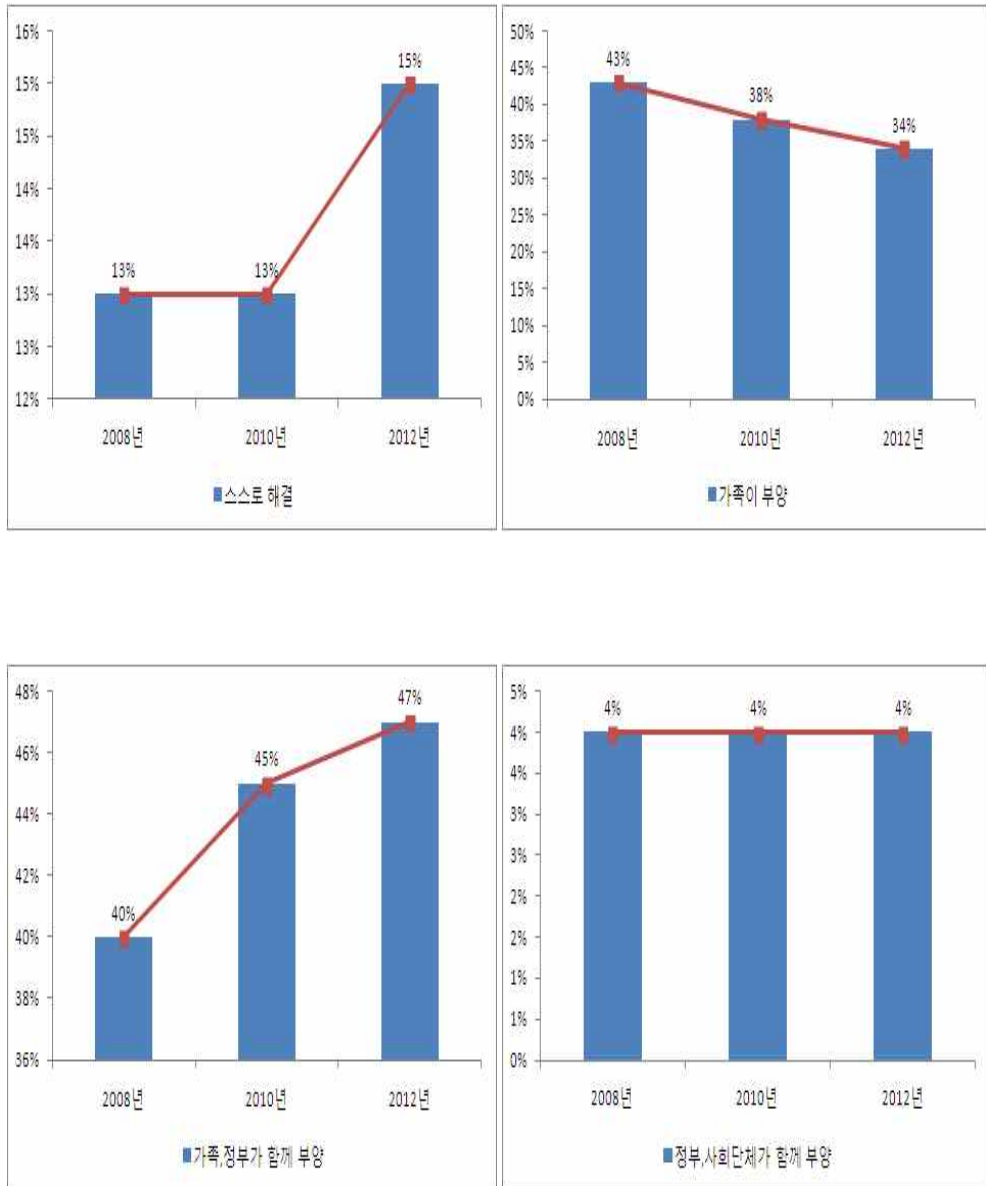
40대는 2008년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957명(1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729명(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242명(46%),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한다’ 358명(4%)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812명(1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778명(3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975명(51%),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한다’ 268명(3%)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850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225명(3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938명(54%),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한다’ 318명(4%)이다.

40대까지 살펴본 결과 10대부터 30대까지의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왔다.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부양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1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부양의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하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40대부터는 다른 연령대와 부양의식에 차이를 보인다.

〈그림-12〉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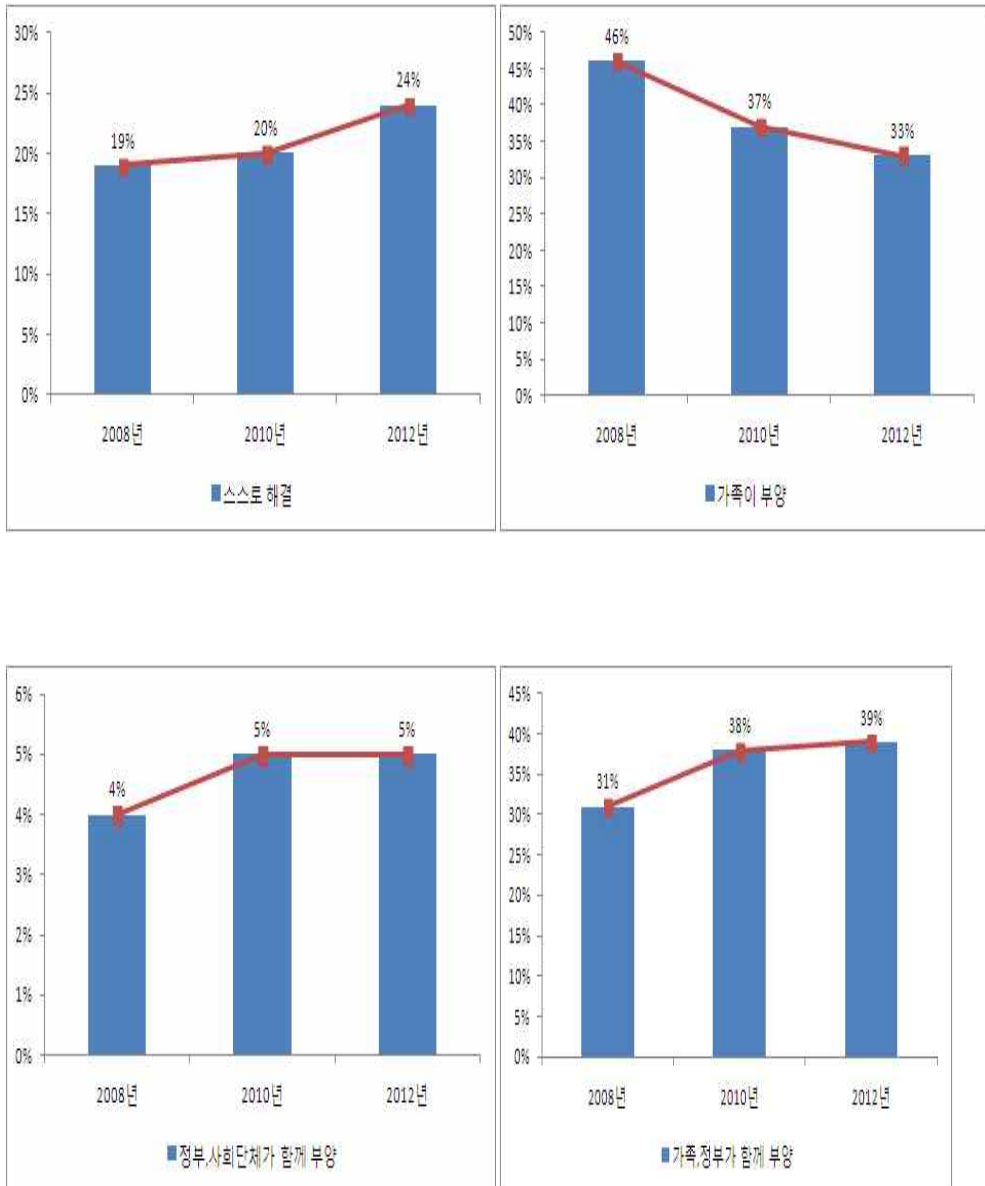
50대는 2008년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931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922명(4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774명(40%),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247명(4%)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801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318명(3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735명(45%),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255명(4%)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956명(15%),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149명(34%),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031명(47%),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258명(4%)이다.

40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의 부양의식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13〉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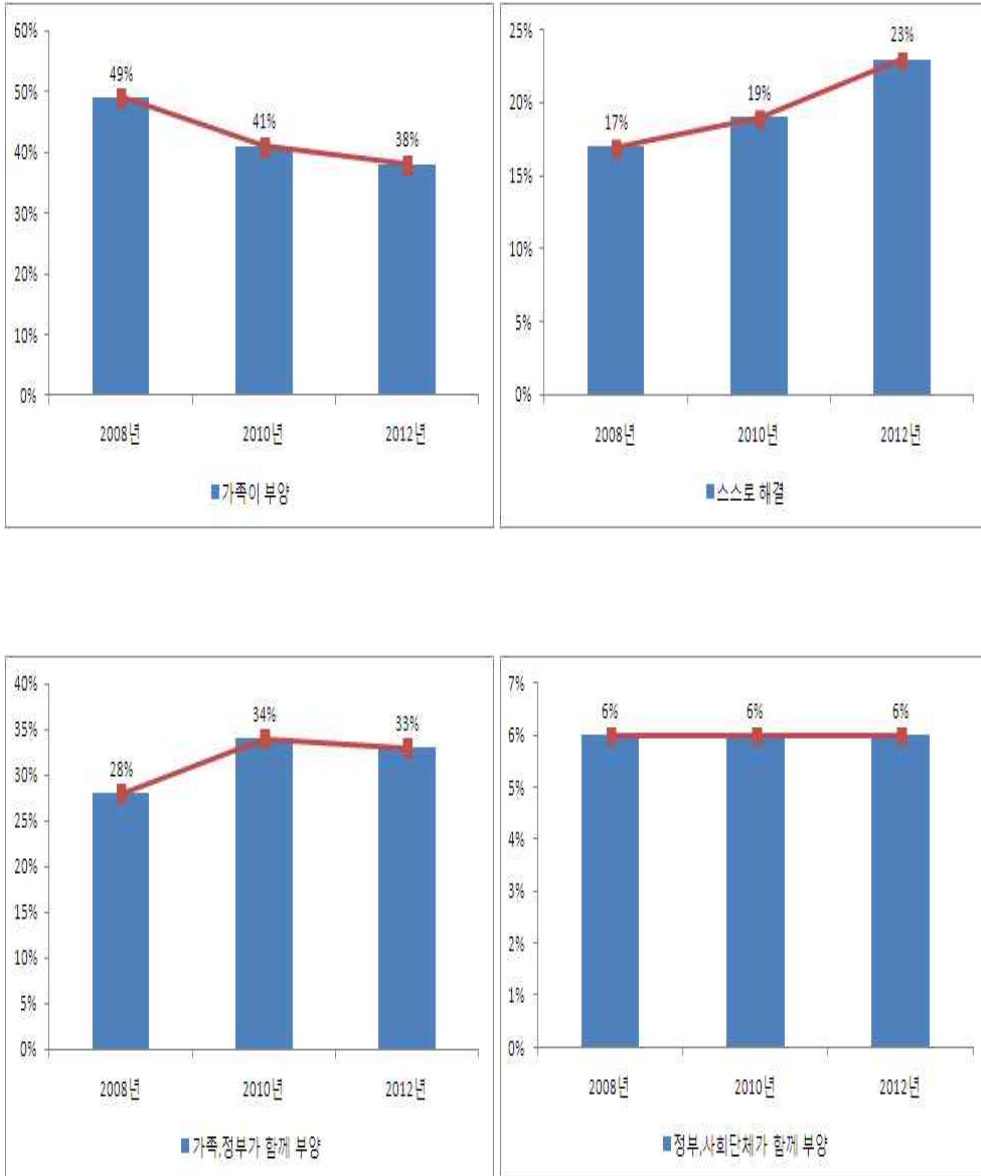
60대는 2008년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894명(19%),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099명(4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466명(31%),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한다’ 202명(4%)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842명(2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518명(3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586명(38%),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한다’ 222명(5%)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1,040명(2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424명(3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695명(39%),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한다’ 217명(5%)이다.

50대부터 60대, 70대 그 이후로 갈수록 젊은층과는 달리 부양의식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부양의식이 늘어나고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 변화가 10대, 20대, 30대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완곡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4〉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7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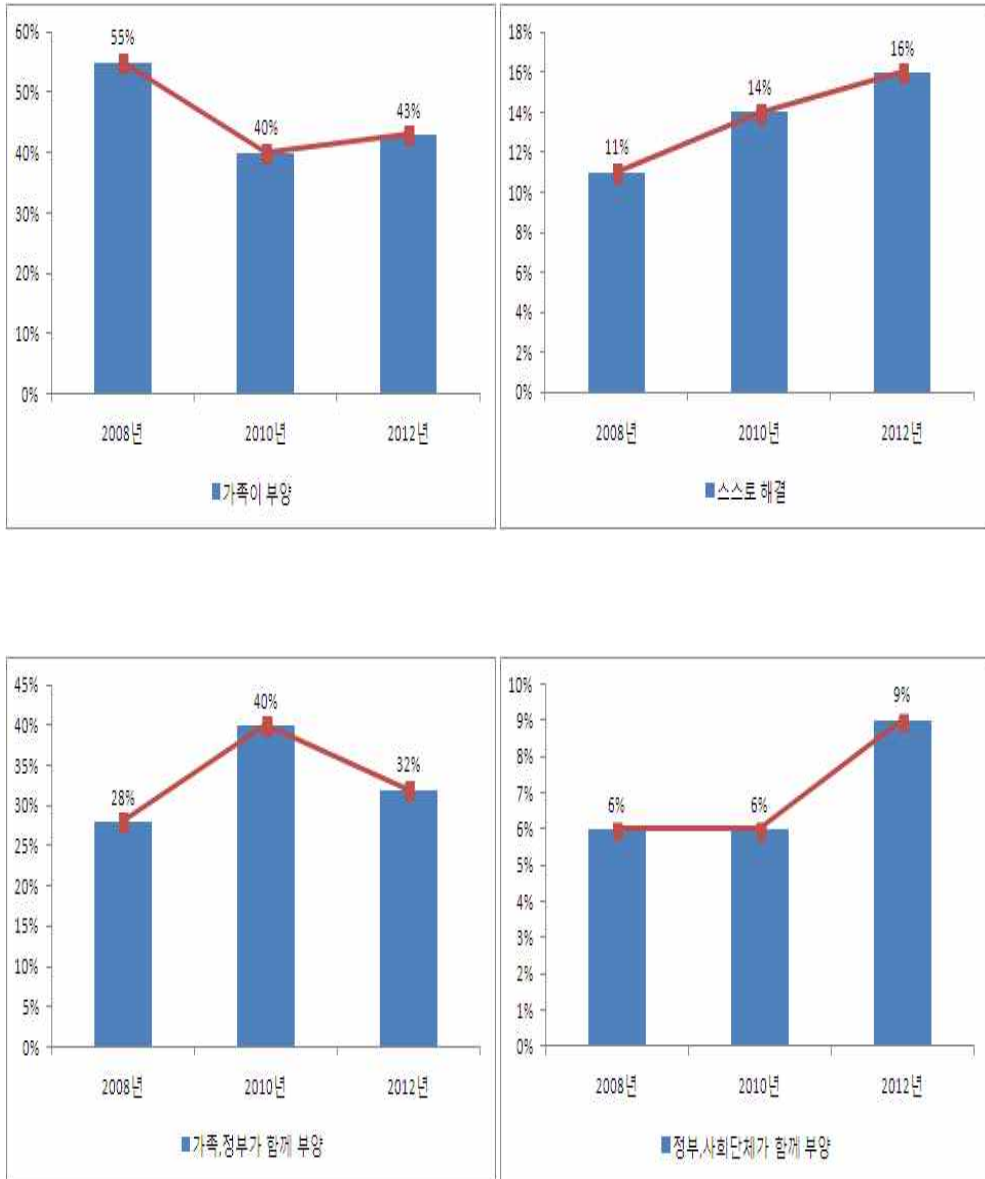


70대는 2008년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537명(17%),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503명(49%),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855명(28%),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183명(6%)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591명(19%),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273명(4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040명(34%),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175명(6%)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791명(2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272명(3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108명(33%),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219명(6%)이다.

〈그림-15〉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8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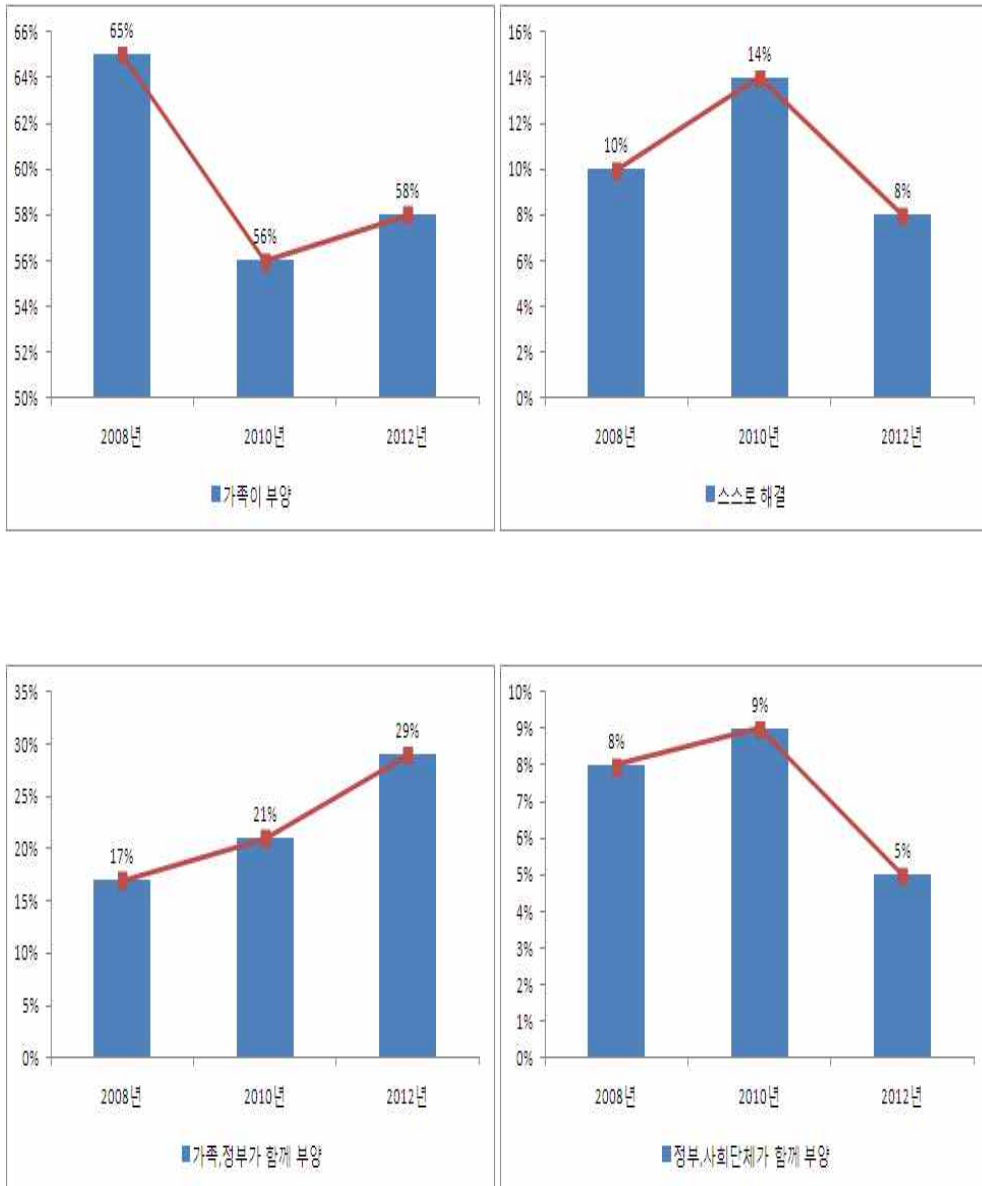


80대는 2008년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85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30명(55%),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23명(28%),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49명(6%)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119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67명(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67명(40%),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58명(6%)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152명(16%),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23명(4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16명(32%),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88명(9%)이다.

〈그림-16〉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90대)



90대는 2008년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6명(1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8명(65%),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0명(17%),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5명(8%)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10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9명(5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5명(21%),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6명(9%)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 6명(8%),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2명(5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1명(29%), ‘정부, 사회 함께 부양해야 한다’ 4명(5%)이다.

최고 장년층인 80, 90대를 살펴보면 70대와는 달리 노년층으로 갈수록 본인이 실질적 부양주체가 되어서 인지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약간 늘어나고 있지만 미미하다.

10대부터 30대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다른 부양의식보다 높지도 않고 시대별 부양의식이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40대부터 그 후의 연령대의 대상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보인다. 바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점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모든 연령대가 마찬가지로 위의 기본적 특징을 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40대부터는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 역시 함께 오르고 있다. 이는 40대부터는 실질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이를 맞이 해야하는 시작의 선에 서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50대부터 그 이후로 갈수록 젊은 층과는 달리 부양의식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 완곡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부양의식이 늘어나고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특성을 통해 부양의식이 변화하며 줄어들고 있지만 그 변화가 10대, 20대, 30대처럼 빠르고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고 장년층인 80, 90대를 살펴보면 70대와는 달리 노년층으로 갈수록 본인이 실질적 부양주체가 되어서 인지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부양의식이 약간 늘어나고 있지만 미미하다.

제 2 절 근대화이론과 부양의식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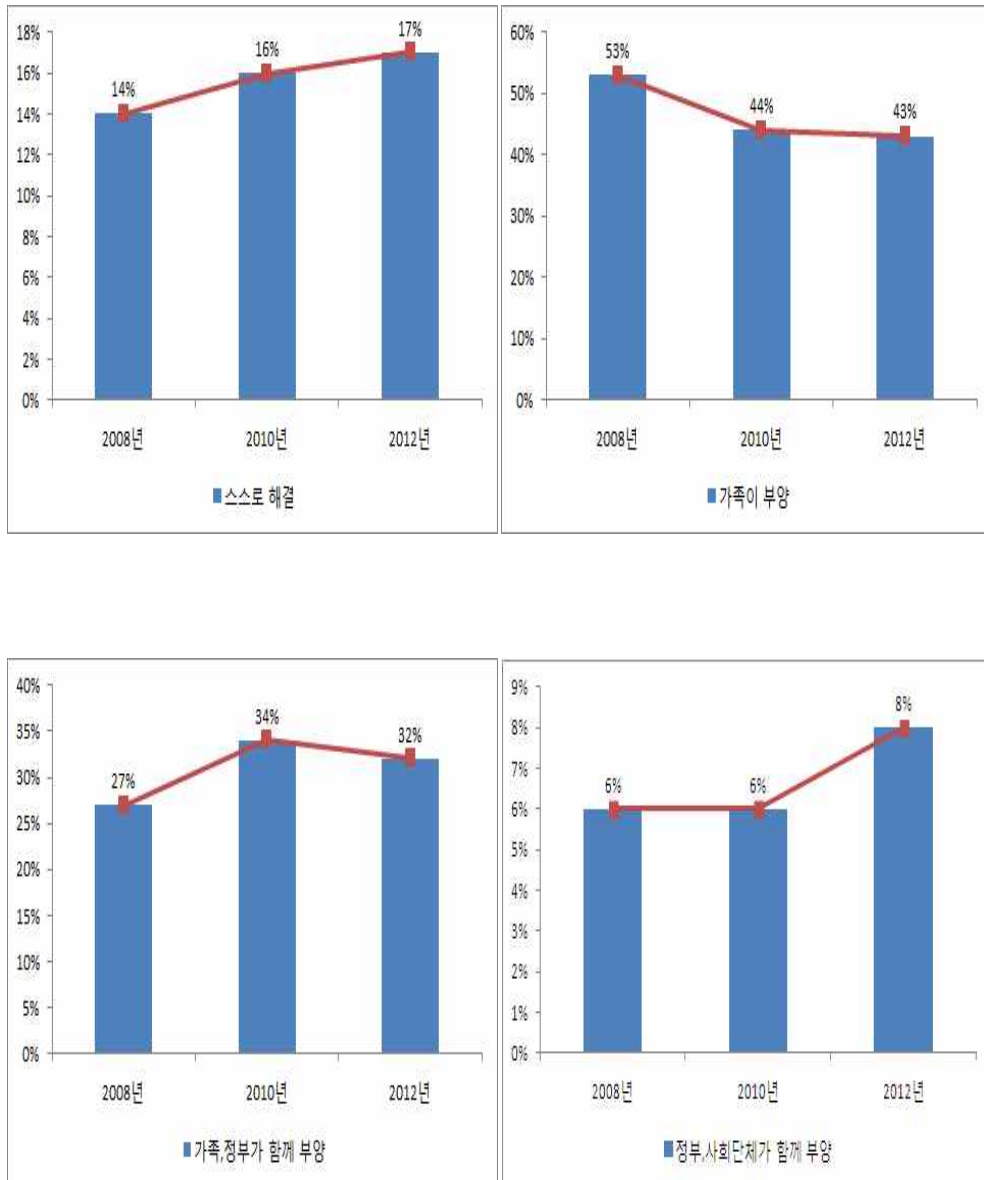
1.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표-7〉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2008년 N=42,456명, 2010년 N=36,832명, 2012년 N=36,877명)

구분		빈도											
		백분율 (%)											
		2008년				2010년				2012년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교육 정 도	무학	321 (14%)	1,260 (53%)	645 (27%)	141 (6%)	307 (16%)	865 (44%)	659 (34%)	124 (6%)	316 (17%)	827 (43%)	618 (32%)	147 (8%)
	초등 학교	796 (16%)	2,398 (49%)	1,483 (30%)	245 (5%)	721 (17%)	1,796 (41%)	1,597 (36%)	233 (6%)	888 (20%)	1,695 (38%)	1,592 (36%)	252 (6%)
	중 학교	604 (13%)	2,003 (44%)	1,728 (38%)	178 (4%)	567 (15%)	1,537 (40%)	1,573 (40%)	182 (5%)	836 (17%)	1,770 (36%)	2,068 (42%)	217 (5%)
	고등 학교	1,866 (12%)	6,486 (41%)	6,767 (43%)	556 (4%)	1,593 (12%)	4,977 (38%)	6,120 (47%)	455 (3%)	1,689 (14%)	4,044 (33%)	6,084 (49%)	497 (4%)
	대학 (4년 미만)	614 (11%)	2,222 (39%)	2,646 (46%)	199 (4%)	533 (10%)	1,924 (37%)	2,609 (50%)	156 (3%)	554 (11%)	1,560 (32%)	2,630 (54%)	156 (3%)
	대학 (4년 이상)	930 (12%)	2,839 (35%)	4,010 (50%)	266 (3%)	928 (13%)	2,260 (32%)	3,746 (52%)	219 (3%)	924 (13%)	2,021 (28%)	3,907 (54%)	298 (5%)
	석사 과정	128 (13%)	340 (34%)	505 (50%)	34 (3%)	117 (13%)	268 (29%)	487 (54%)	36 (4%)	154 (15%)	241 (24%)	571 (56%)	46 (5%)
	박사 과정	34 (14%)	81 (33%)	124 (50%)	7 (3%)	34 (14%)	63 (26%)	134 (55%)	12 (5%)	39 (14%)	63 (23%)	163 (59%)	10 (4%)
	전체	5,293 (13%)	17,629 (41%)	17,908 (42%)	1,626 (4%)	4,800 (13%)	13,690 (37%)	16,925 (46%)	1,417 (4%)	5,400 (15%)	12,221 (33%)	17,633 (48%)	1,623 (4%)

〈그림-17〉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무학)



산업화에 따른 생활 수준 및 교육수준의 향상은 자연적으로 사회구조를 ‘도시화’ 또는 ‘핵가족화’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전반적 모든 국민의 지적 수준이 올라갔다. 이러한 지적수준에 따른 근대화 이론에 노인부양의식의 견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교육받지 않은 ‘무학’ 대상자들의 부양의식을 살펴보면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21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260명(5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645명(27%),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41명(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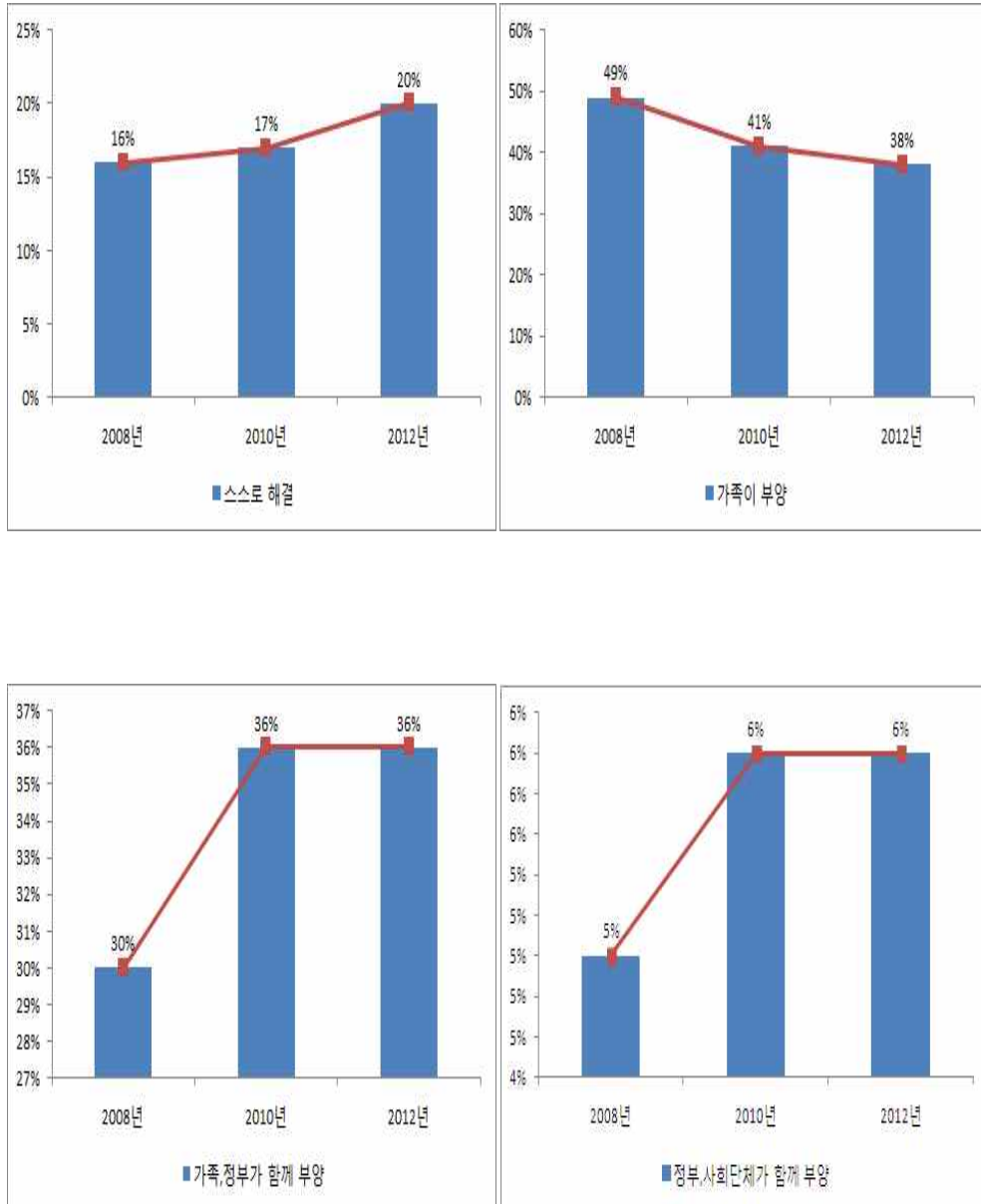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07명(16%),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865명(44%),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659명(34%),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24명(6%)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16명(17%),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827명(4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618명(32%),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47명(8%)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부양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양의식 중에서도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약해지는 반면에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조금씩 증가 하고 있고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의 부양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과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해결해야한다.’는 부양의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대상자들을 교육 정도의 기준을 놓고 부양의식을 살펴본 결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는 이 연구의 기초자료 ‘사회조사 통계표’가 2012년 4월 11일 총선 이후인 5월 중순에 조사되었다는 점을 감안, 또한 2012년은 대한민국의 기존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는 점에 의해 국민의 정서가 정부와 사회단체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쏠려있기 때문에 부양의식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의 변화가 있음으로 본다.

〈그림-18〉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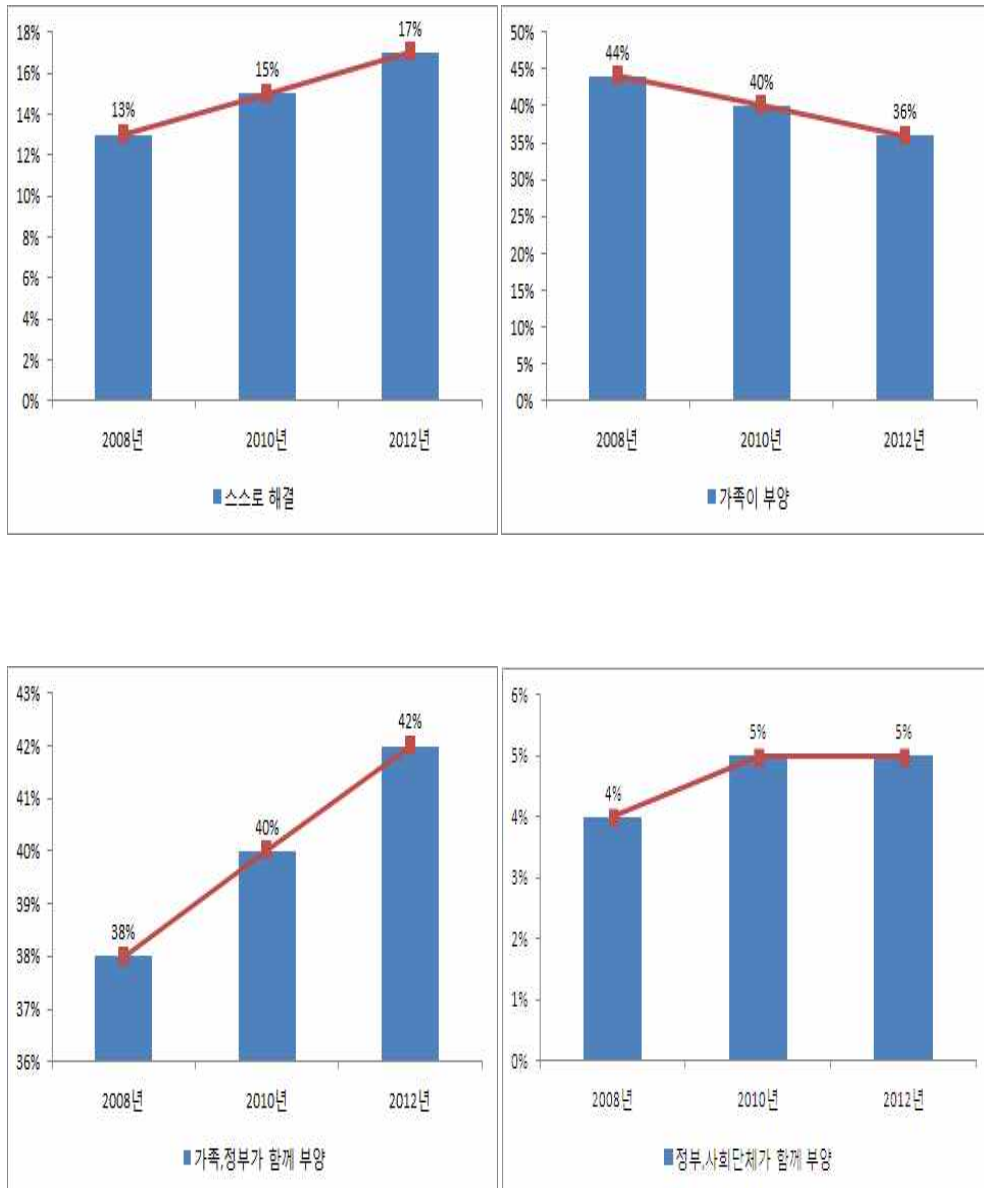
초등교육만 받은 대상자의 부양의식을 살펴보면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796명(16%),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398명(49%),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483명(3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45명(5%)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721명(17%),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796명(4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597명(3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33명(6%)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888명(2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695명(3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592명(3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52명(6%)이다.

초등교육만 받은 대상자들의 부양의식의 견해를 살펴보면 무학보다 반응 변화가 미미하다. 하지만 공통 변동요인인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다.

〈그림-19〉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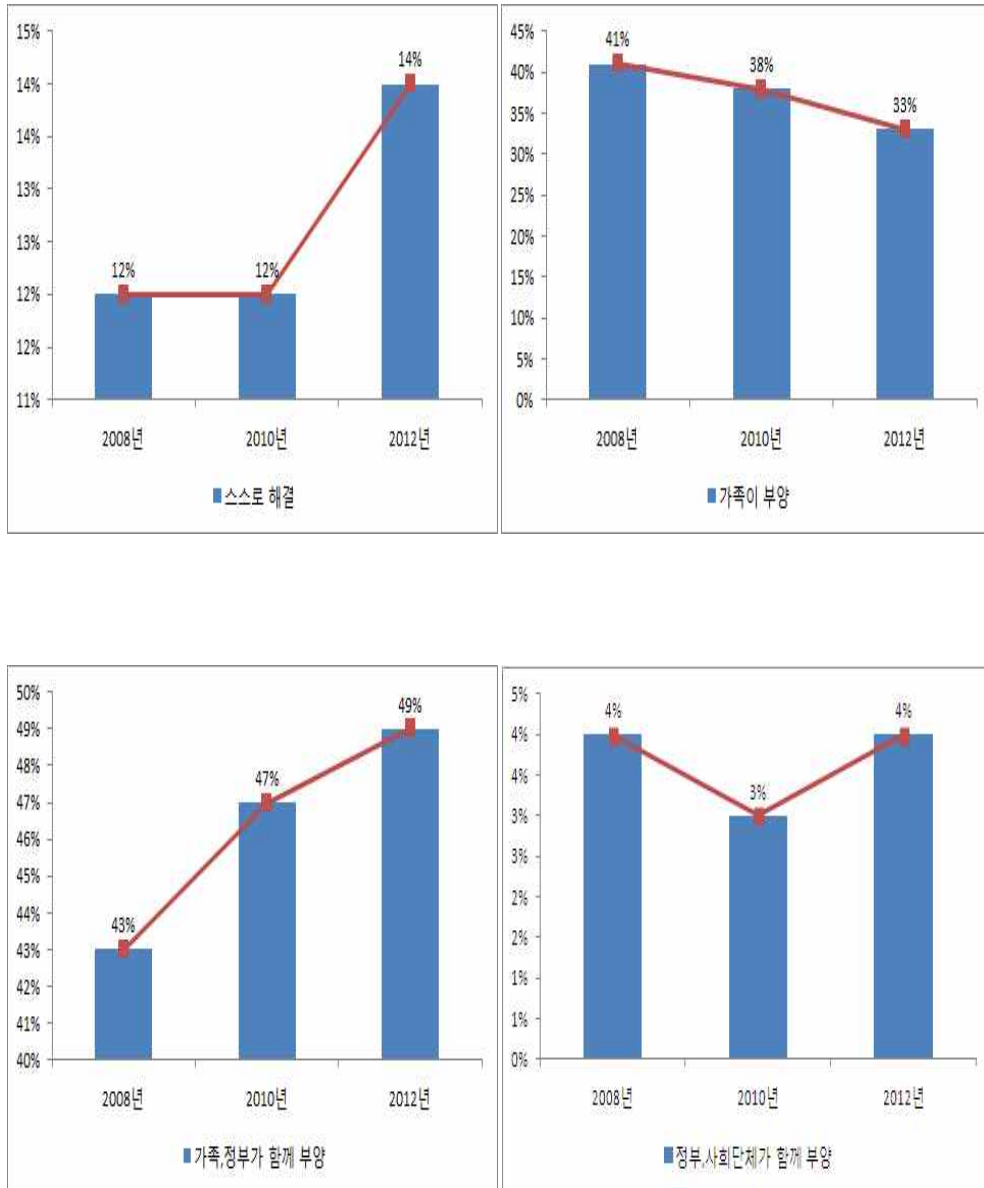
중학교 교육까지 받은 대상자의 부양의식을 살펴보면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04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003명(44%),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728명(38%),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78명(4%)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67명(15%),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537(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573명(4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82명(5%)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836명(17%),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770(3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068명(42%),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17명(5%)이다.

중등교육자의 경우 무학, 초등교육만 받은 대상자와는 대상자의 비율이 더 높아서 인지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무학, 초등교육자 보다 급격하게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0〉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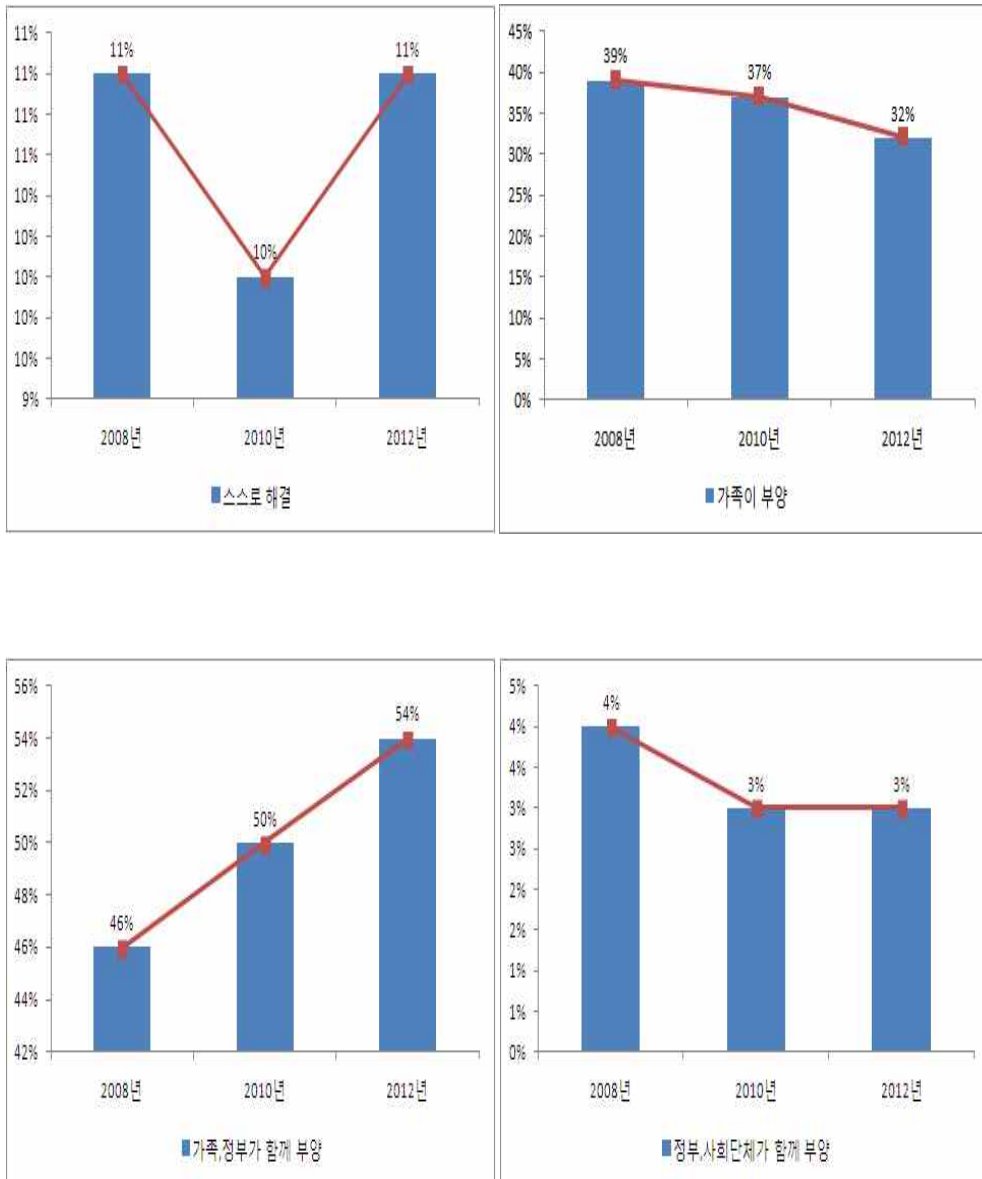
고등학교 까지만 교육받은 대상자의 부양의식을 살펴보면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866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6,486명(4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6,767명(43%),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556명(4%)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593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977명(3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6,120명(47%),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55명(3%)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689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044명(3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6,084명(49%),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97명(4%)이다. 2012년은 2010년에 비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와 ‘정부와 사회의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의식이 두 배 정도 늘어났다.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대상자 이다. 고등학교만 교육받은 대상자의 경우 무학, 초등, 중등 교육자와는 다르게 급격하지 않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변동을 보인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 변화가 2008년, 2010년에는 같았지만 2012년에는 2%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고등교육 대상자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매년 오르는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부양의식보다 좀 더 천천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1〉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대학교 4년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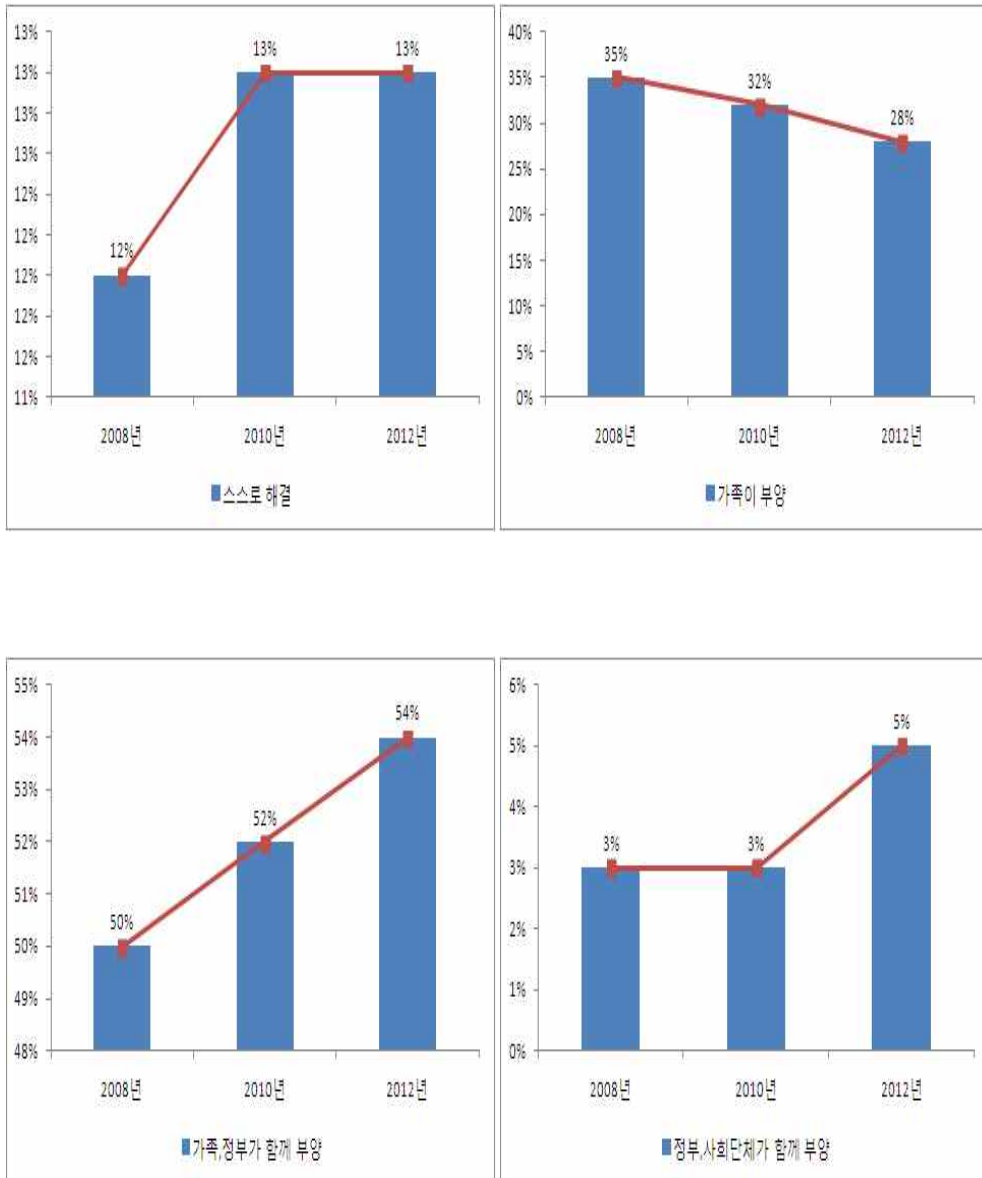


대학(4년제 미만)까지 교육받은 대상자의 부양의식을 살펴보면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14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222명(39%),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646명(4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99명(4%)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33명(1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924명(3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609명(5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56명(3%)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54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560명(32%),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630명(54%),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56명(3%)이다.

〈그림-22〉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대학교 4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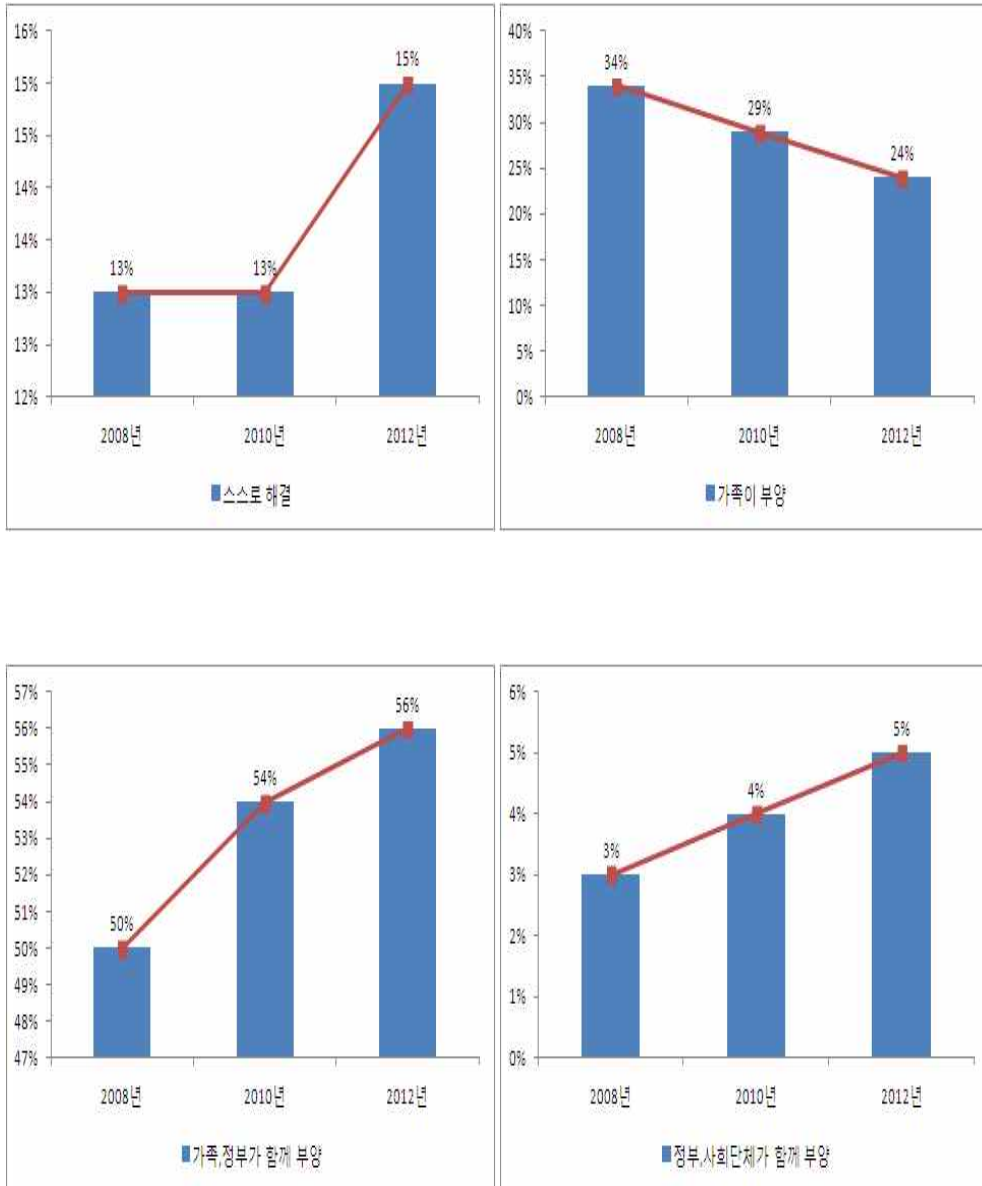
대학교(4년제 이상)까지 교육받은 대상자의 부양의식을 살펴보면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930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839명(35%),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010명(5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66명(3%)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928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260명(32%),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746명(52%),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19명(3%)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924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021명(2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907명(54%),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98명(5%)이다.

4년제 이상의 대상자의 경우 전문대(4년제 미만)의 대상자 보다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정부와 사회단체의 신뢰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23〉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대학원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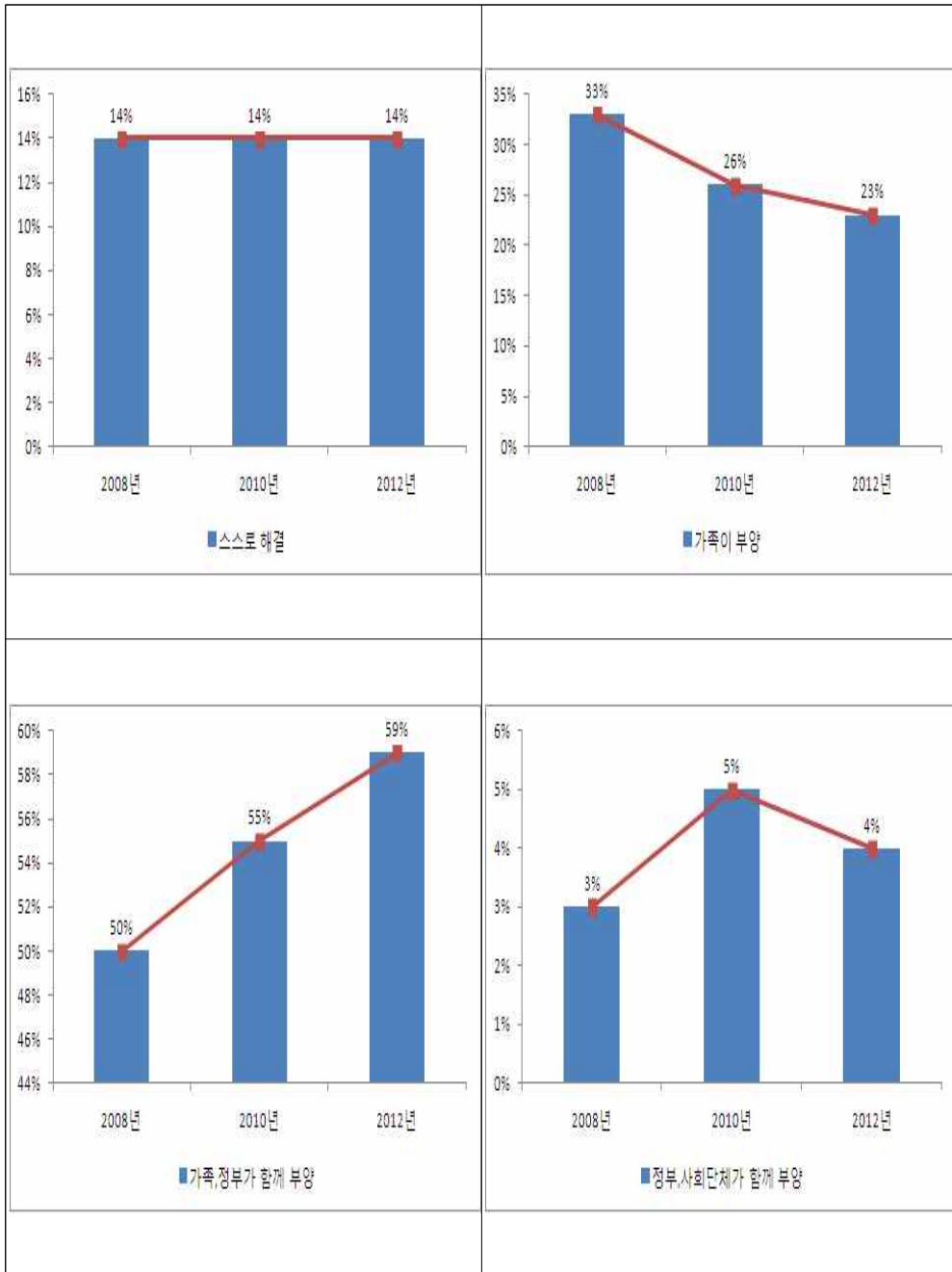
대학원 석사까지 교육받은 대상자들의 부양의식을 살펴보면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28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40명(34%),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505명(5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4명(3%)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17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68명(29%),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87명(54%),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2명(4%)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54명(15%),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41명(24%),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571명(5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6명(5%)이다.

석사까지 교육받은 대상자의 경우 4년제 이상의 교육자와 비슷한 동향을 보였다.

〈그림-24〉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 (대학원 박사과정)



대학원 박사까지 교육받은 대상자의 부양의식을 살펴보면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4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81명(3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24명(5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7명(3%)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4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63명(2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34명(55%),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2명(5%)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9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63명(2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63명(59%),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0명(4%)이다.

석사까지 교육받은 대상자들의 부양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변화 요인인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줄고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의 변동 추이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는 이들의 경우 처음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양의식의 변화에 따른 전체적 비율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양의식은 그 중에서도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약해지고 반면에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조금씩 증가 하고 있다.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흥미로운 점은 비율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전체인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지만 교육 정도인 학력이 높은 고학력자가 노부모를 공경하며 직접적으로 더 부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었다. 고학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노인부양의식에 있어서 다른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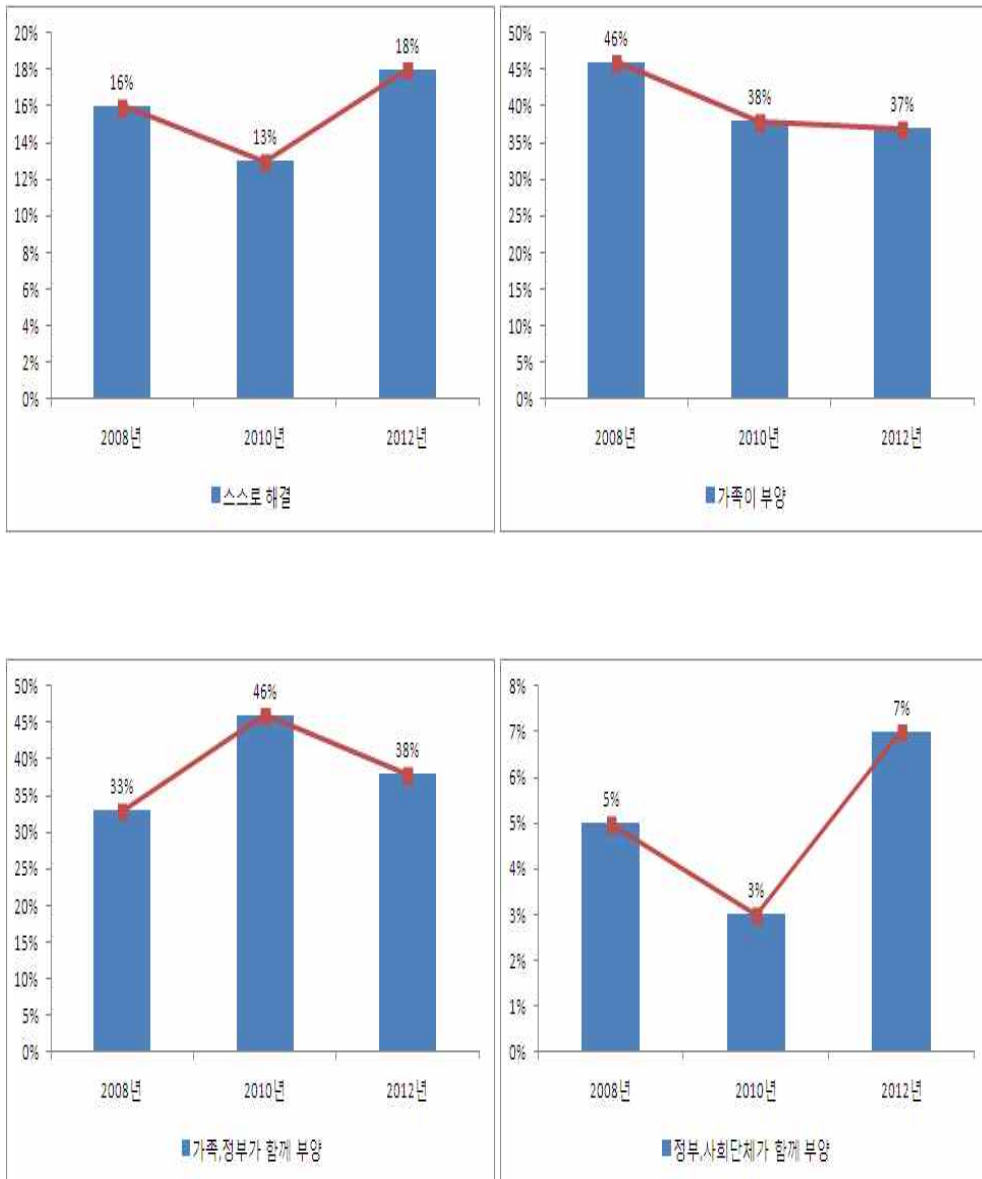
2.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표-8〉 가구 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2008년=42,456명, 2010년 N=28,912명, 2012년 N=36,877명)

구분		빈도 백분율 (%)											
		2008년				2010년				2012년			
		스스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스스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스스로	가족	가족, 정부	정부, 사회
가 구 소 득	100만원 미만	1,269 (16%)	3,753 (46%)	2,693 (33%)	427 (5%)	677 (13%)	2,030 (38%)	2,475 (46%)	195 (3%)	1,205 (18%)	2,564 (37%)	2,595 (38%)	455 (7%)
	100만원 ~200만원 미만	1,231 (12%)	4,353 (43%)	4,182 (41%)	389 (4%)	959 (13%)	2,705 (38%)	3,221 (45%)	280 (4%)	1,338 (16%)	2,970 (36%)	3,662 (44%)	352 (4%)
	200만원 ~300만원 미만	1,133 (11%)	4,233 (41%)	4,660 (45%)	351 (3%)	873 (12%)	2,739 (40%)	3,153 (45%)	269 (3%)	1,104 (13%)	2,694 (32%)	4,214 (51%)	329 (4%)
	300만원 ~400만원 미만	665 (11%)	2,290 (39%)	2,710 (46%)	196 (4%)	519 (12%)	1,669 (40%)	1,872 (44%)	161 (4%)	686 (13%)	1,681 (31%)	2,926 (53%)	183 (3%)
	400만원 ~500만원 미만	448 (12%)	1,475 (38%)	1,800 (47%)	133 (3%)	281 (13%)	829 (38%)	1,004 (46%)	80 (3%)	468 (13%)	1,082 (30%)	1,940 (53%)	144 (4%)
	500만원 ~600만원 미만	269 (14%)	744 (38%)	880 (45%)	60 (3%)	170 (13%)	522 (39%)	600 (45%)	54 (3%)	243 (13%)	496 (27%)	1,002 (56%)	71 (4%)
	600만원 ~700만원 미만	96 (12%)	296 (37%)	372 (47%)	34 (4%)	88 (13%)	247 (37%)	308 (46%)	23 (4%)	125 (13%)	255 (27%)	520 (56%)	33 (4%)
	700만원 이상	182 (14%)	485 (37%)	611 (46%)	36 (3%)	129 (14%)	340 (37%)	401 (44%)	39 (5%)	231 (15%)	479 (31%)	774 (50%)	56 (4%)
전체		5,293 (12%)	17,629 (42%)	17,908 (42%)	1,626 (4%)	3,696 (13%)	11,081 (38%)	13,034 (45%)	1,101 (4%)	5,400 (15%)	12,221 (33%)	17,633 (48%)	1623 (4%)

〈그림-25〉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100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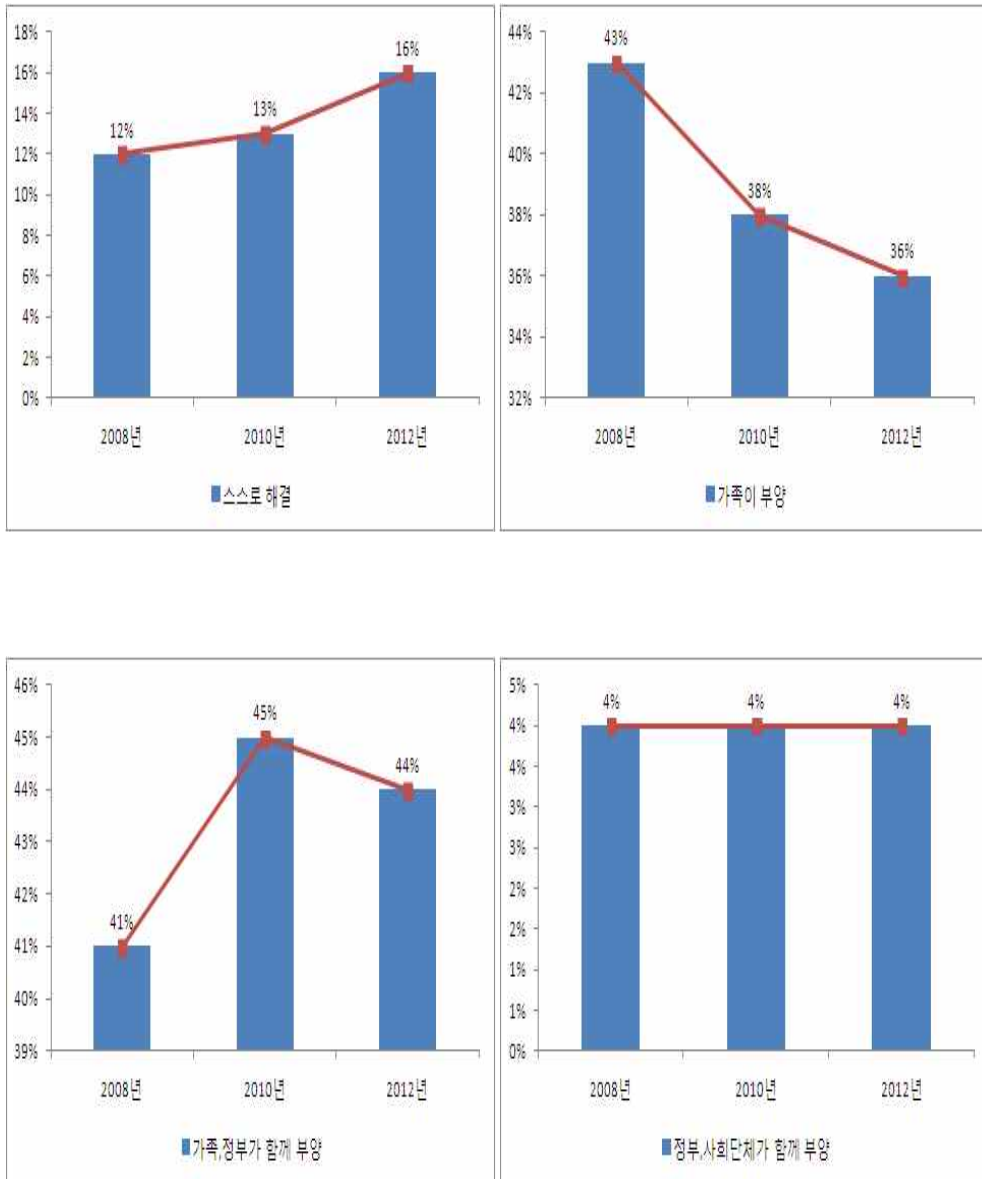
가구소득에 따라 부양의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노인부양이 현실조건에 맞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고 적음은 부양을 하는데 실질적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환경은 부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노인부양이 어려울 수 있다.

먼저 최소 단위로 100만원미만 응답자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269명(16%),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753명(4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693명(33%),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27명(5%)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77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030명(3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475명(4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95명(3%)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205명(18%),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564명(3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595명(38%),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55명(7%)이다.

〈그림-26〉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100만원 ~ 200만원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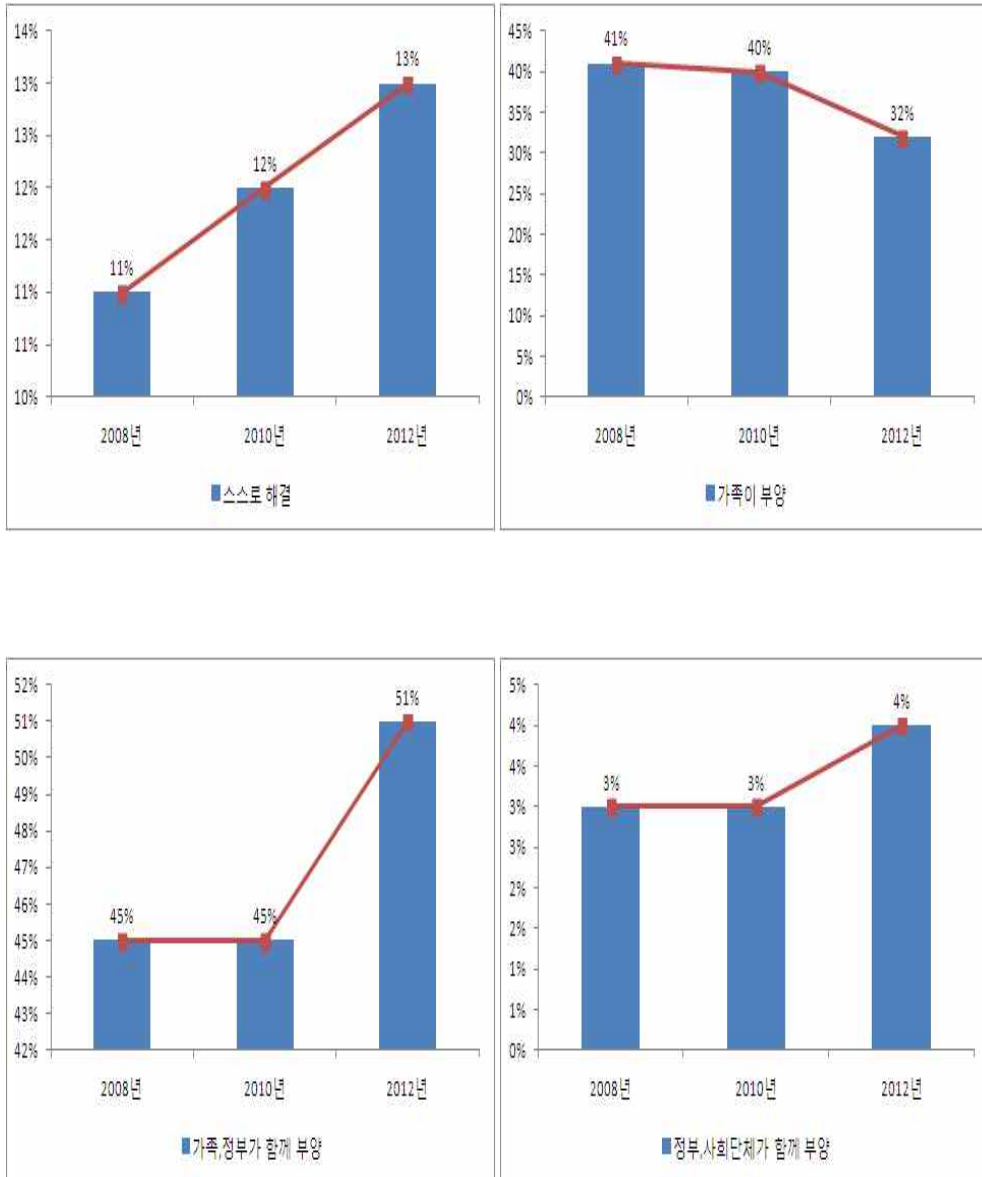
100만원~200만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231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353명(4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4,182명(41%),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89명(4%)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959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705명(3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221명(45%),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80명(4%)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338명(16%),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970명(3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662명(44%),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52명(4%)이다.

100만원미만 응답자의 응답자와는 다르게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림-27〉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200만원 ~ 300만원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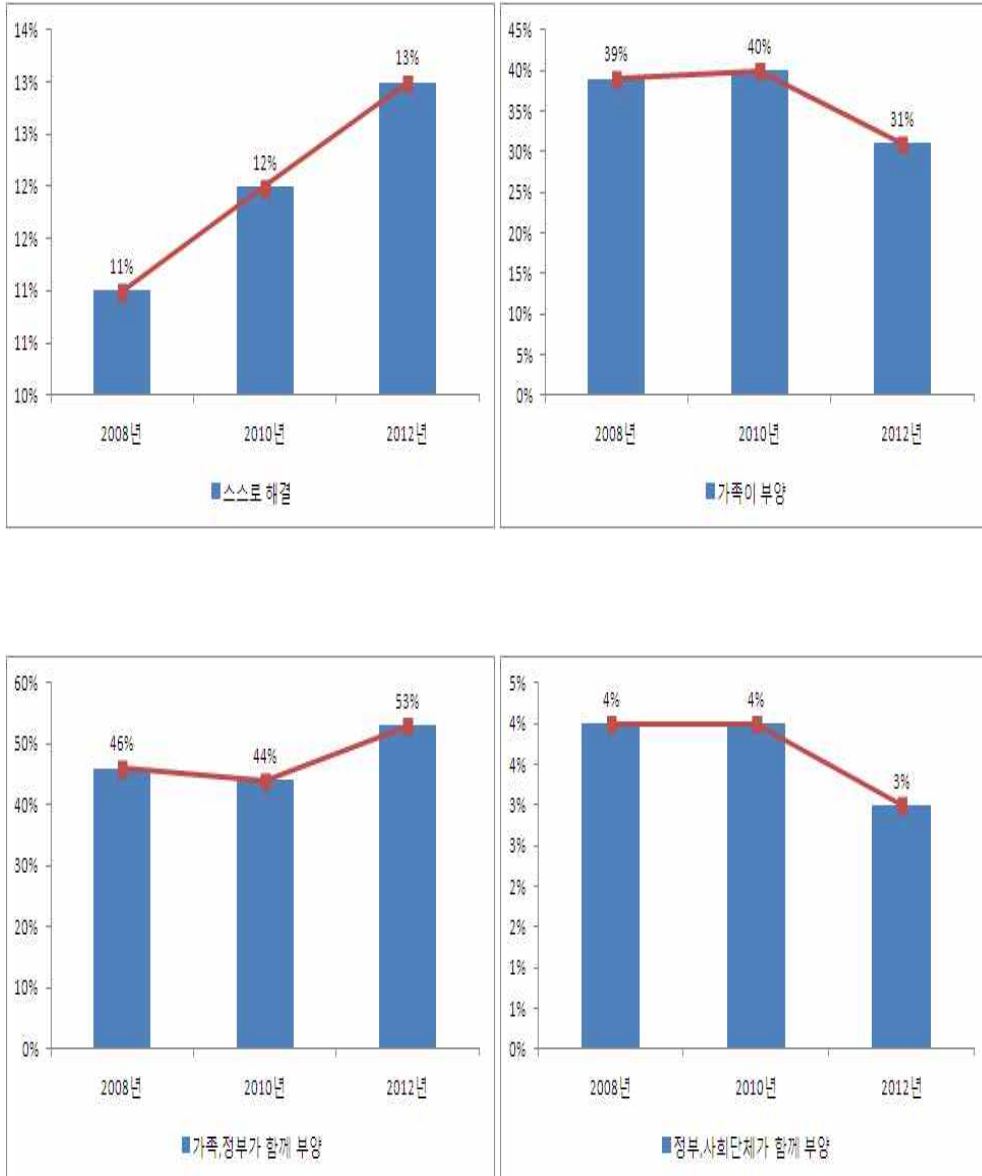


200만원~300만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133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233명(4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660명(45%),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51명(3%)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873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739명(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153명(45%), ‘정부와 사회단체가함께 부양해야한다.’ 269명(3%)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104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694명(32%),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214명(51%),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29명(4%)이다.

〈그림-28〉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300만원 ~ 400만원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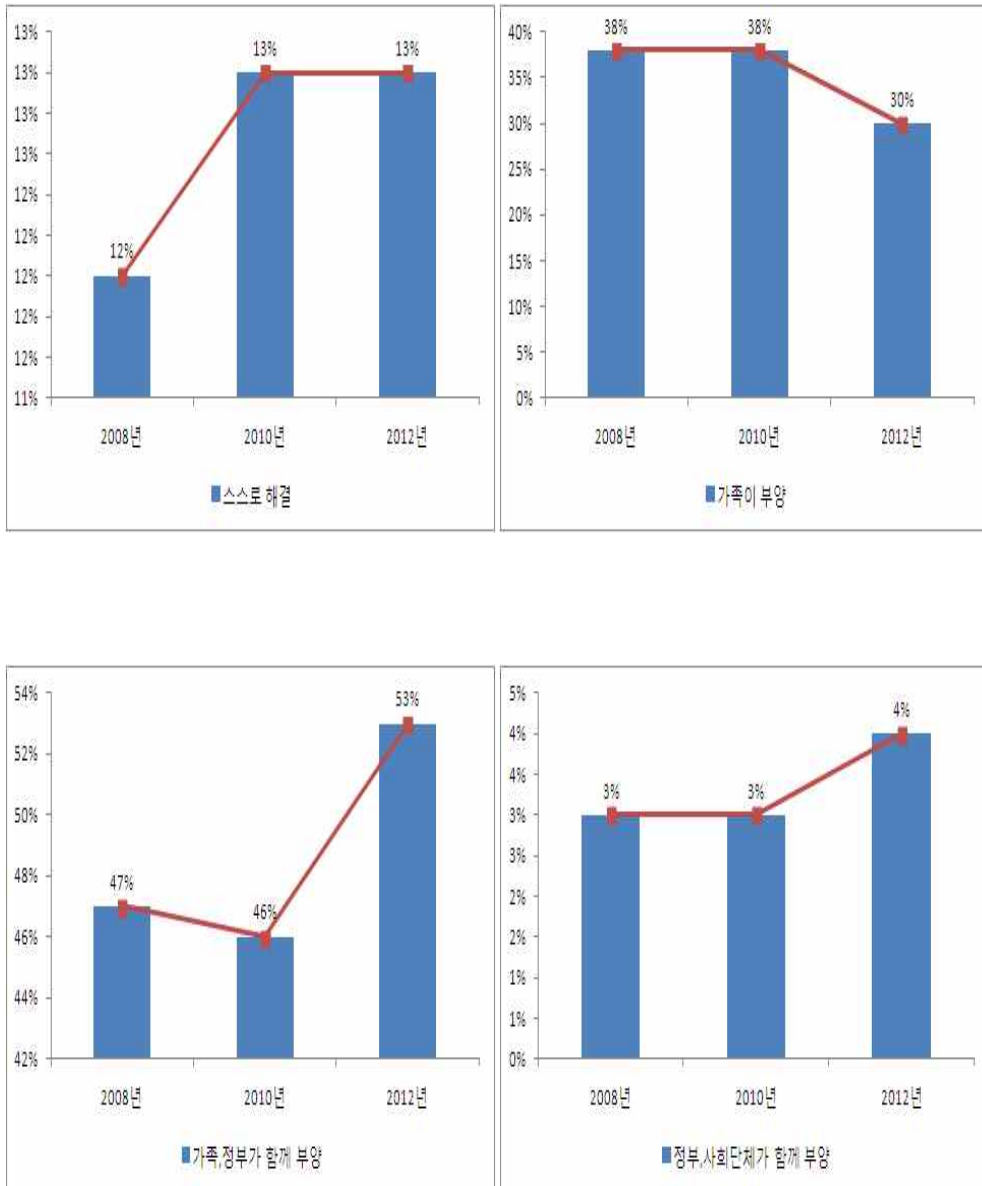


300만원~400만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65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290명(39%),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710명(4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96명(4%)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19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669명(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872명(44%),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61명(4%)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86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681명(3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296명(53%),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83명(3%)이다.

〈그림-29〉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400~500만원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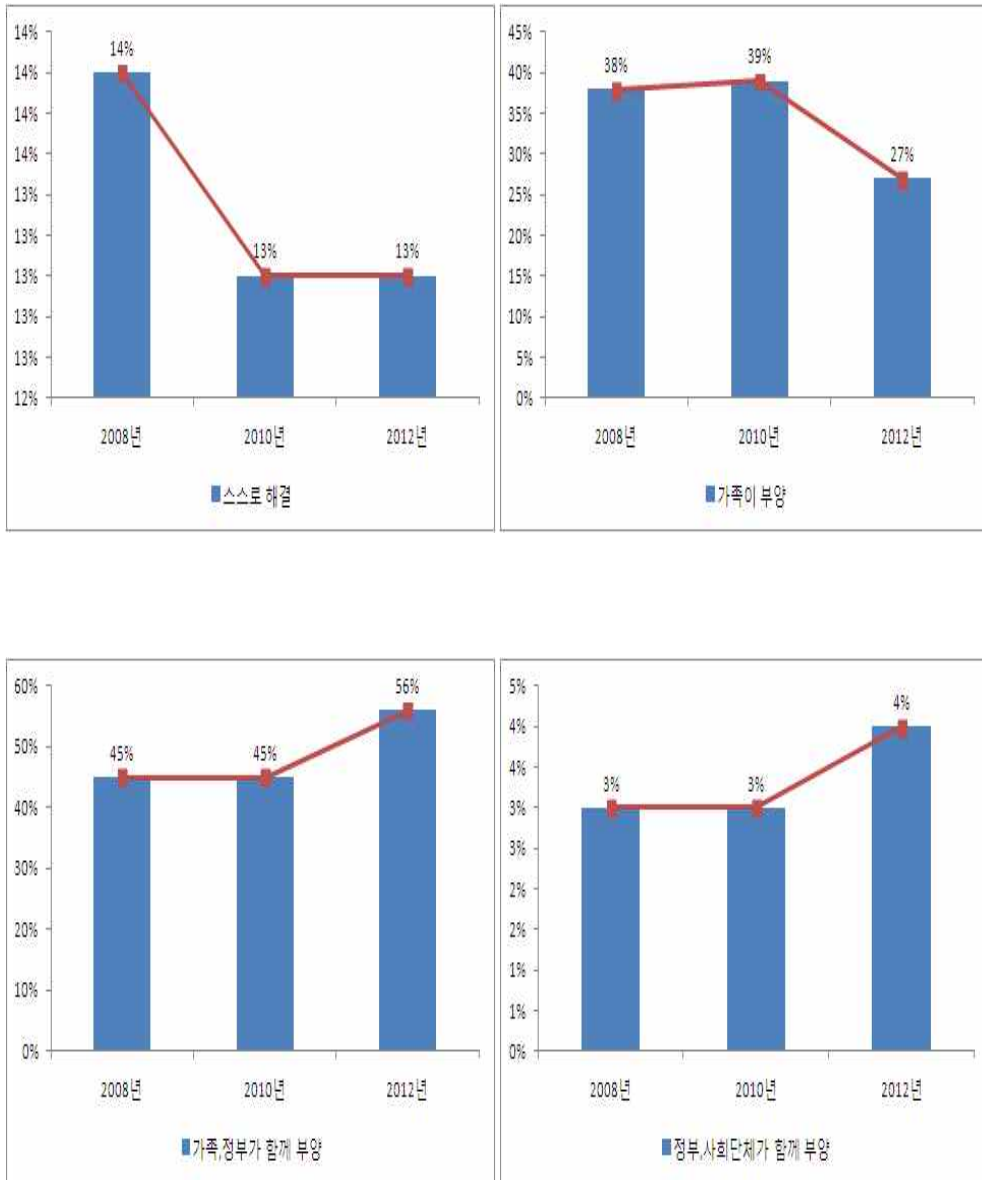
400만원~500만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448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475명(3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800명(47%),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33명(3%)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81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829명(3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004명(4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80명(3%)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468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082명(3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940명(53%),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44명(4%)이다.

응답자의 부양의식이 다른 응답 대상들 보다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그룹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변동이 아예 없거나 서서히 변화하는 반면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변동이 있었다가 다시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2008년에서 10년으로 가면서 올랐지만 12년에는 그대로의 값을 유지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 역시 마찬가지로 었다.

〈그림-30〉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500~600만원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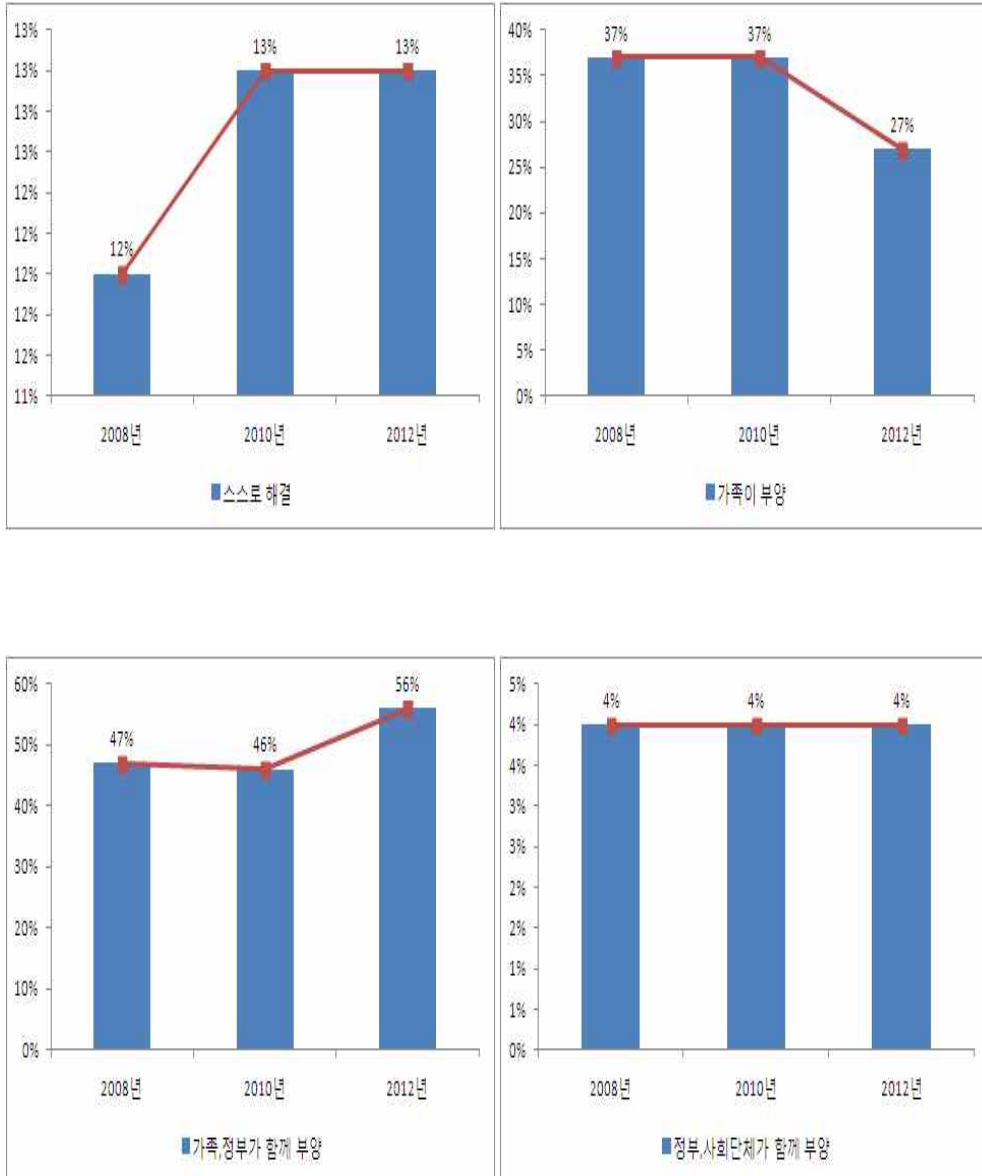


500만원~600만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69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744명(3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880명(45%),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60명(3%)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70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522명(39%),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600명(45%),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54명(3%)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43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96명(2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002명(5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71명(4%)이다.

〈그림-31〉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600~700만원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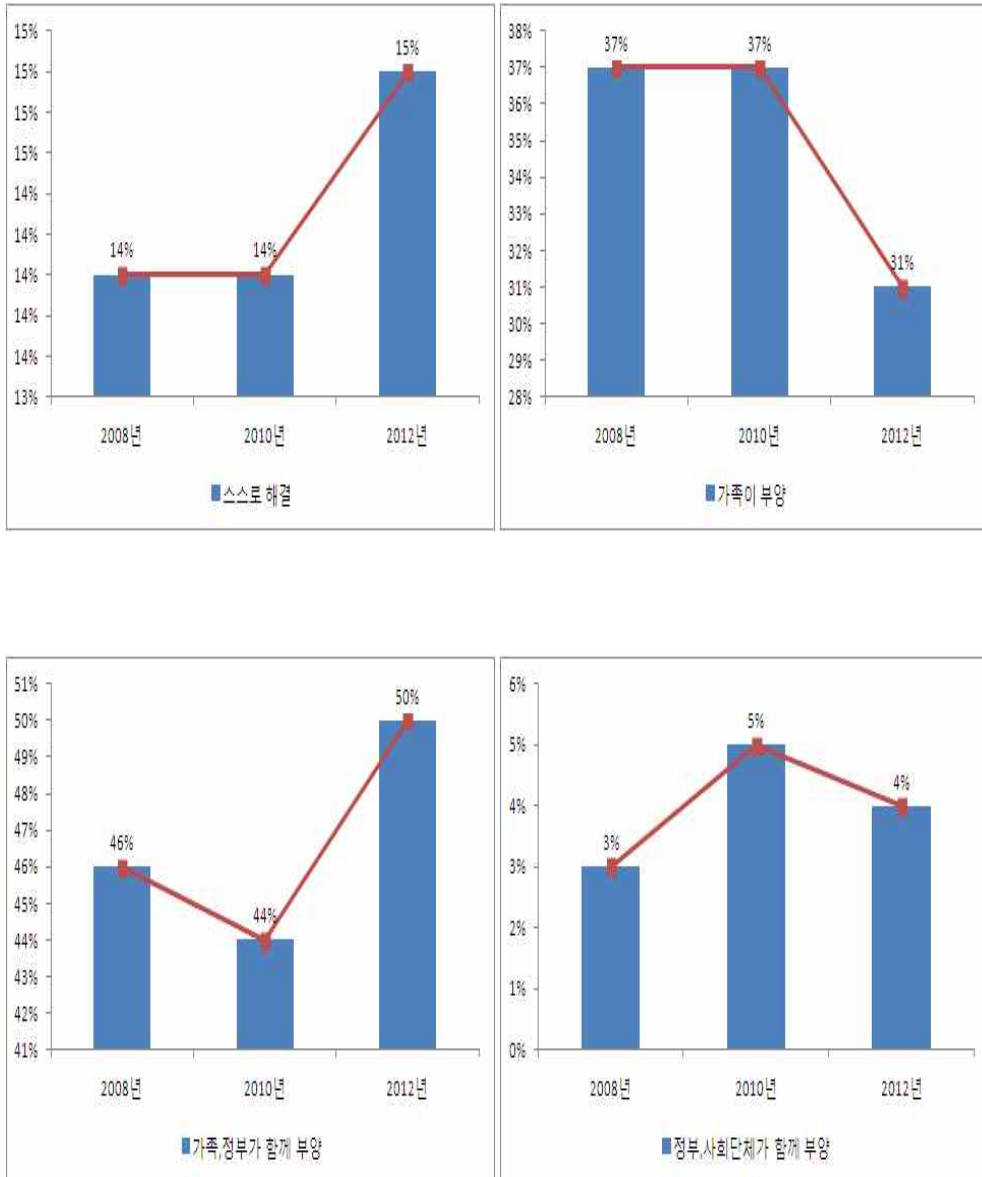


600만원~700만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96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96명(3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72명(47%),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4명(4%)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88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47명(3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08명(4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3명(4%)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25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55명(2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520명(5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3명(4%)이다.

〈그림-32〉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 (700만원 이상)



800만원이상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82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85명(3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611명(4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6명(3%)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29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40명(3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401명(44%),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9명(5%)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31명(15%),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79명(3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774명(5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56명(4%)이다

다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부양의식 중에서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직접적 부양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해지는 반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대상자보다 800만원 이상의 대상자의 수가 더 적다. 하지만 부양의식의 비율은 비슷하다. 이를 확대해석 해보면 고소득 대상자들의 수를 더 많이 조사하여 보면 비율이 더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부양의식 역시 높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응답에 따른 부양의식의 흐름에 따른 비율은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직접적 부양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해지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꼭 소득의 격차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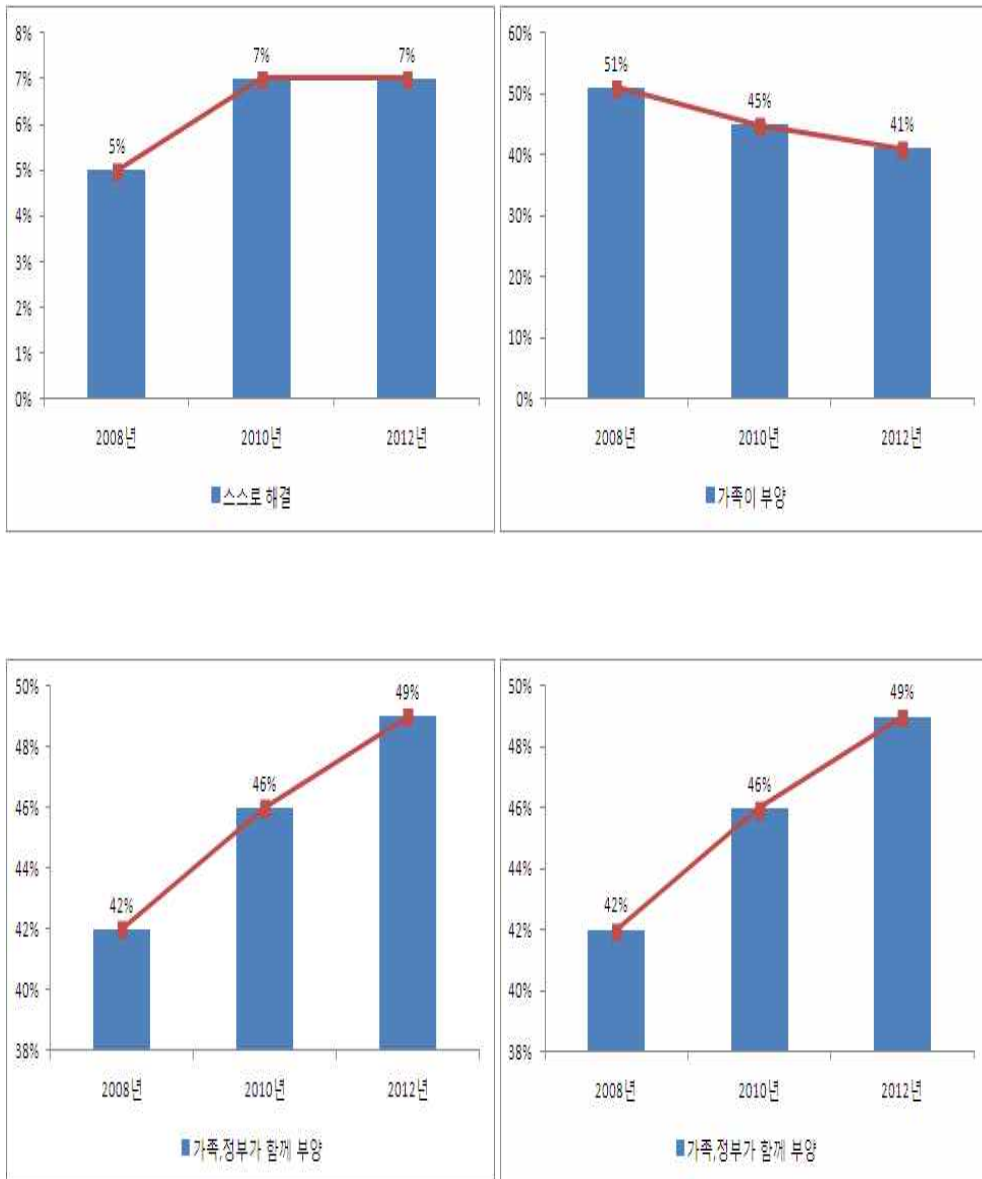
3. 부모와의 교류(동거)와 부양 의식의 관계

〈표-9〉 부모와의 교류(동거)와 부양의식의 관계

(2008년 N=10,933, 2010년 N=17,034명, 2012년 N=16,139명)

구분		빈도 백분율 (%)											
		2008				2010년				2012년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동 거 여 부	살 고 있 음	64 (5%)	642 (51%)	522 (42%)	27 (2%)	101 (7%)	636 (45%)	655 (46%)	32 (2%)	87 (7%)	510 (41%)	597 (49%)	40 (3%)
	살 고 있 지 않 음	1,906 (10%)	7,613 (40%)	8,959 (47%)	681 (3%)	1,684 (11%)	5,545 (36%)	7,852 (50%)	529 (3%)	1,722 (12%)	4,644 (31%)	7,948 (53%)	591 (4%)
	전체	1,970 (10%)	8,255 (40%)	94,81 (46%)	708 (4%)	1,785 (11%)	6,181 (36%)	8,507 (50%)	561 (3%)	1,809 (11%)	5,154 (32%)	8,545 (53%)	631 (4%)

〈그림-33〉 부모와의 교류(동거)와 부양의식의 관계 (동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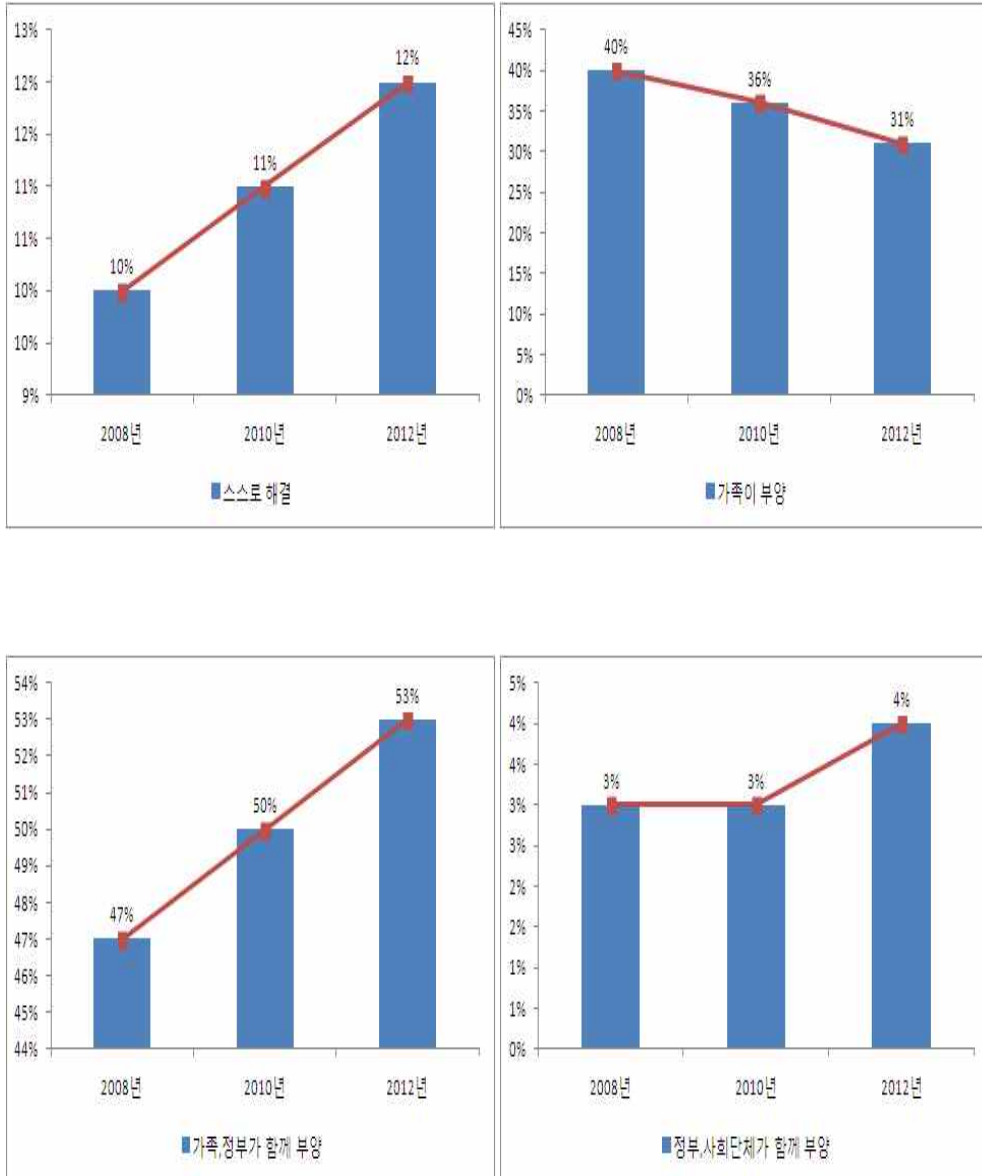
근대화, 즉 산업화가 되면서 가족형태의 변형이 일어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노인과 함께 동거하던 대가족형태에서 독립적 소가족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 아직도 대가족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동거여부가 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같이 살고 있다.’는 대상자들부터 살펴보면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4명(5%),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642명(5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522명(42%),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7명(2%)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01명(7%),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636명(45%),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655명(46%),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2명(2%)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87명(7%),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510명(4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597명(49%),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0명(3%)이다.

〈그림-34〉 부모와의 교류(동거)와 부양의식의 관계 (비동거)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대상자는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906명(1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7,613명(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8,959명(47%),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681명(3%)이다.

2010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684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5,545명(3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7,852명(5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529명(%) 이다.

2012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722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644명(3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7,948명(53%),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591명(40%)이다.

근대화, 즉 산업화가 되면서 전통가족형태의 변형이 일어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노인과 함께 동거하던 가족형태에서 독립적 소가족 형태가 늘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부양의식 중 시대의 흐름에 따른 부양의식 중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해지는 반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강해졌다. 동거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의식 변화의 빈도가 눈에 띄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동거하고 있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에서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동거 여부가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특성을 통해 조사대상자중 90%이상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우리 가족관계 및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의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하는 의식형태를 가장 많이 보였고 반대로 동거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들의 경우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제 3 절 교환이론에 따른 부양 의식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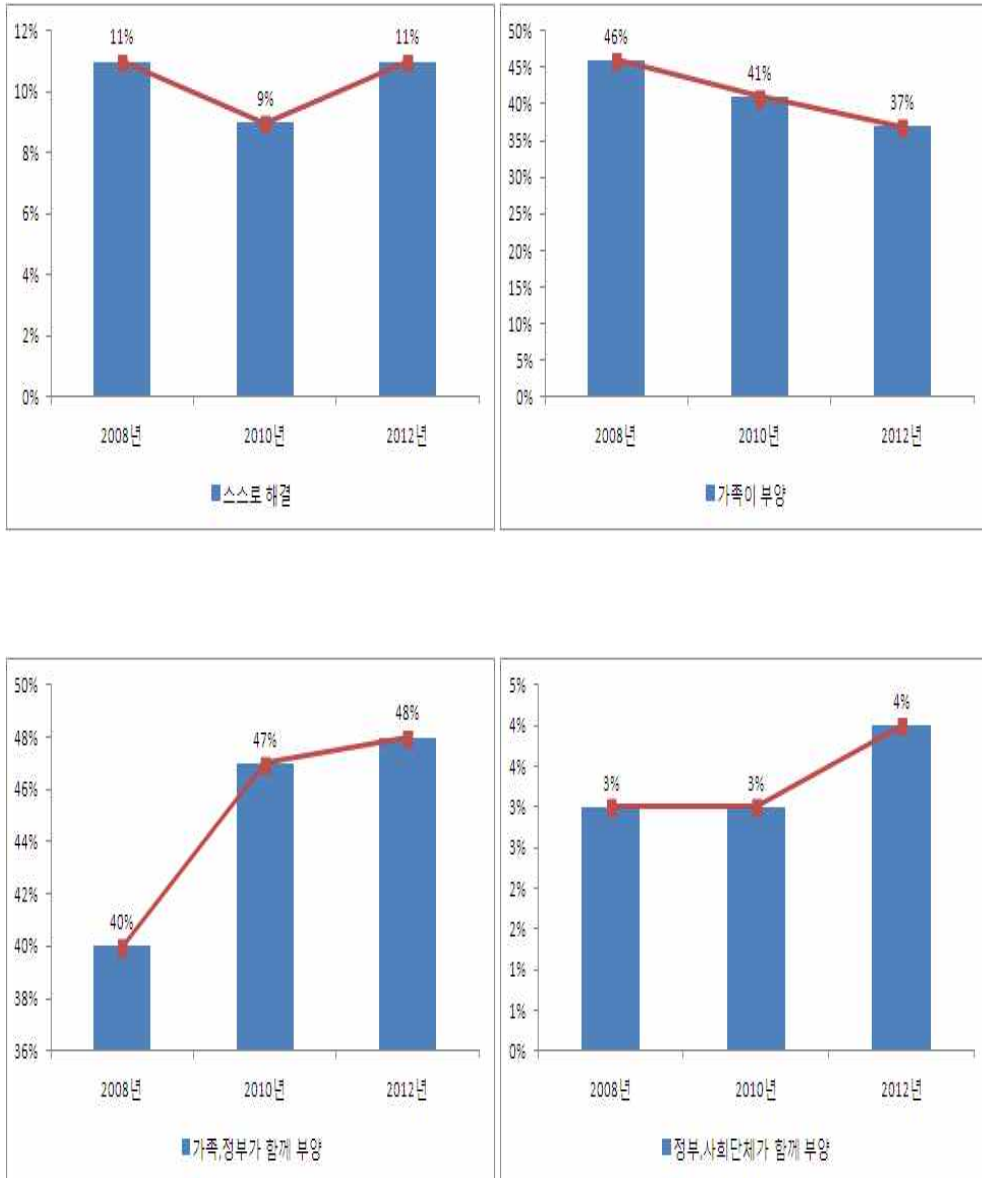
1.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표-10〉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2008년 N=42,456, 2010년 N=18,726명, 2012년 N=36,877명)

구분		빈도											
		백분율 (%)											
		2008년				2010년				2012년			
		스 스 로	가 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 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부모 와 교류 (만남)	거의 매일	103 (11%)	452 (46%)	393 (40%)	27 (3%)	83 (9%)	361 (41%)	417 (47%)	19 (3%)	98 (11%)	316 (37%)	413 (48%)	33 (4%)
	일주 일에 한두 번	278 (10%)	1,189 (42%)	1,299 (45%)	95 (3%)	276 (10%)	1,004 (37%)	1,348 (50%)	82 (3%)	319 (12%)	902 (33%)	1,432 (52%)	87 (3%)
	한달 에 한두 번	757 (10%)	2,806 (38%)	3,553 (48%)	251 (4%)	660 (11%)	2,241 (37%)	3,017 (49%)	201 (3%)	652 (11%)	1,830 (31%)	3,228 (54%)	247 (4%)
	1년 에 몇번	721 (9%)	3,021 (40%)	3,572 (47%)	289 (4%)	615 (11%)	1,815 (33%)	2,913 (52%)	207 (4%)	584 (12%)	1,472 (29%)	2,739 (55%)	197 (4%)
	거의 하지 않음	47 (13%)	145 (41%)	142 (40%)	19 (6%)	50 (14%)	124 (35%)	157 (45%)	20 (6%)	69 (19%)	124 (35%)	136 (38%)	27 (8%)
	전체	5,293 (13%)	17,629 (41%)	17,908 (42%)	1,626 (4%)	4,800 (26%)	5,545 (30%)	7,852 (42%)	529 (2%)	5,400 (15%)	12,221 (33%)	17,633 (48%)	1,623 (4%)

〈그림-35〉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거의 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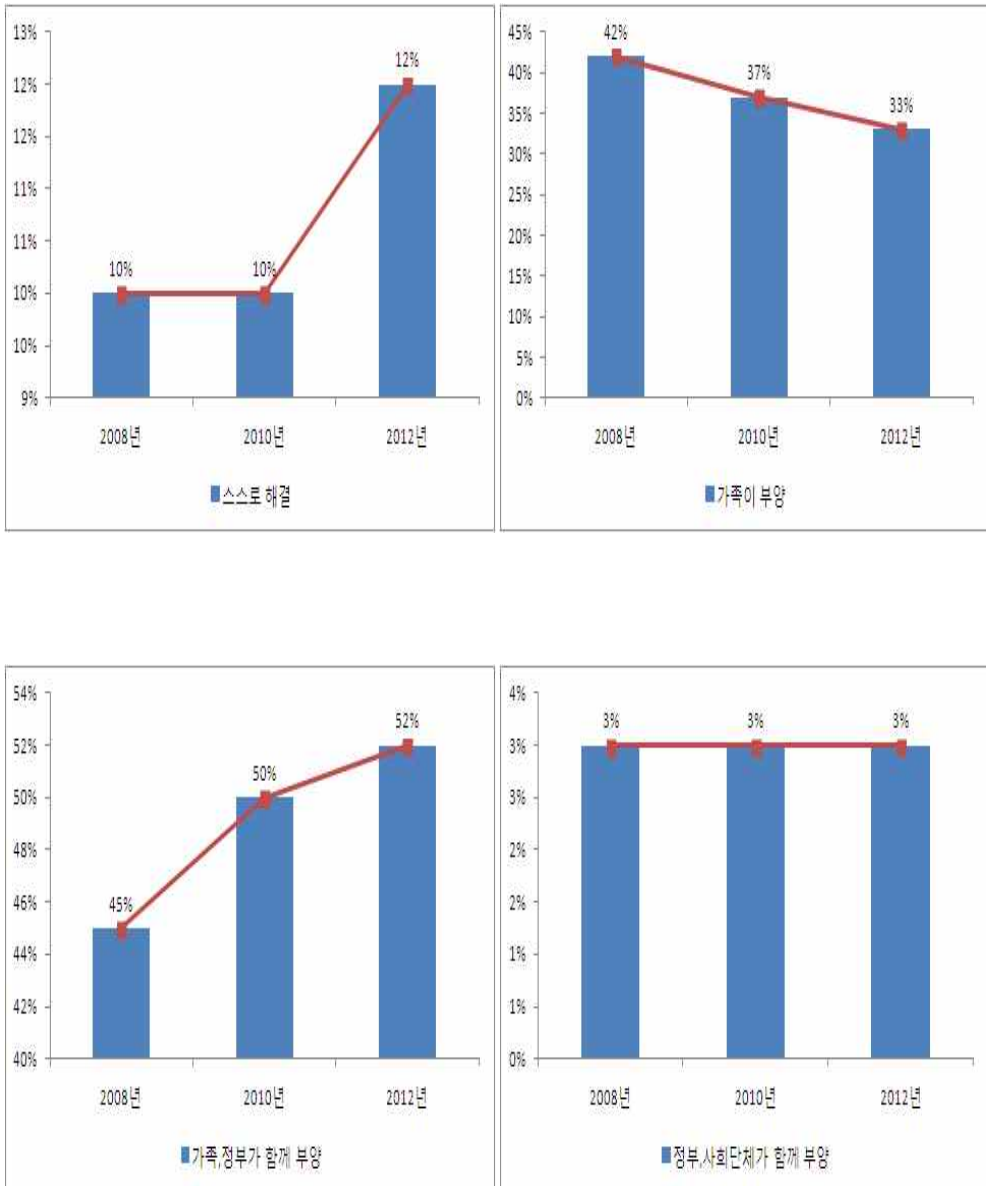
부모와의 교류 중 다양한 교류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비중이 큰 것이 바로 ‘만남’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부양의식의 정도를 알아본다. 먼저 만남에 관한 교류부터 살펴보았다.

거의 매일 교류(만남)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03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52명(4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93명(4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7명(3%)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98명(9%),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16명(4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13명(47%),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3명(3%)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83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61명(3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17명(48%),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9명(4%)이다.

〈그림-36〉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일주일에 한 두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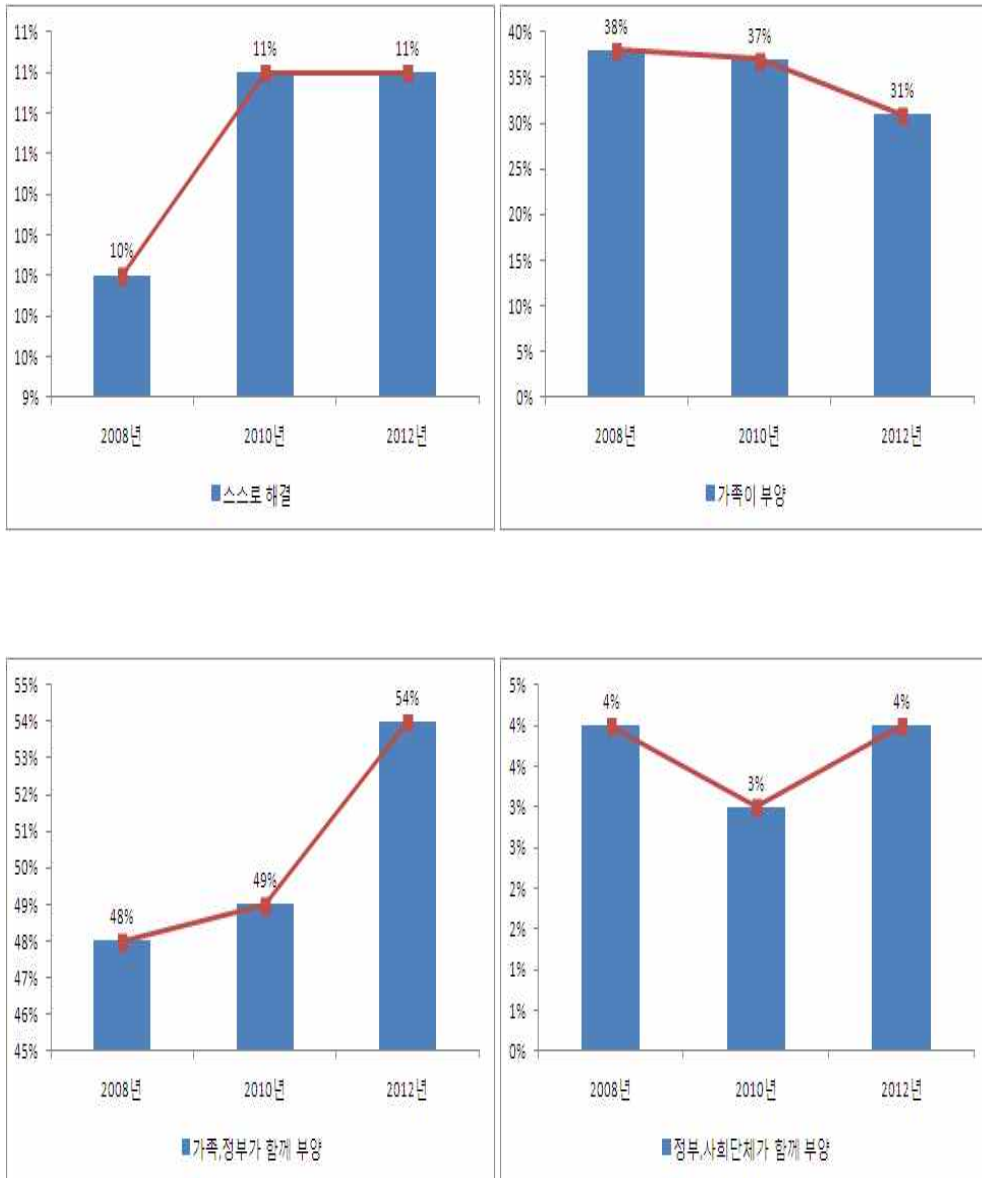


일주일에 한·두 번 교류하는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78명(1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189명(42%),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99명(45%),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95명(3%)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19명(1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902명(3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432명(5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87명(3%)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76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004명(3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348명(52%),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82명(3%)이다.

〈그림-37〉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한달에 한 두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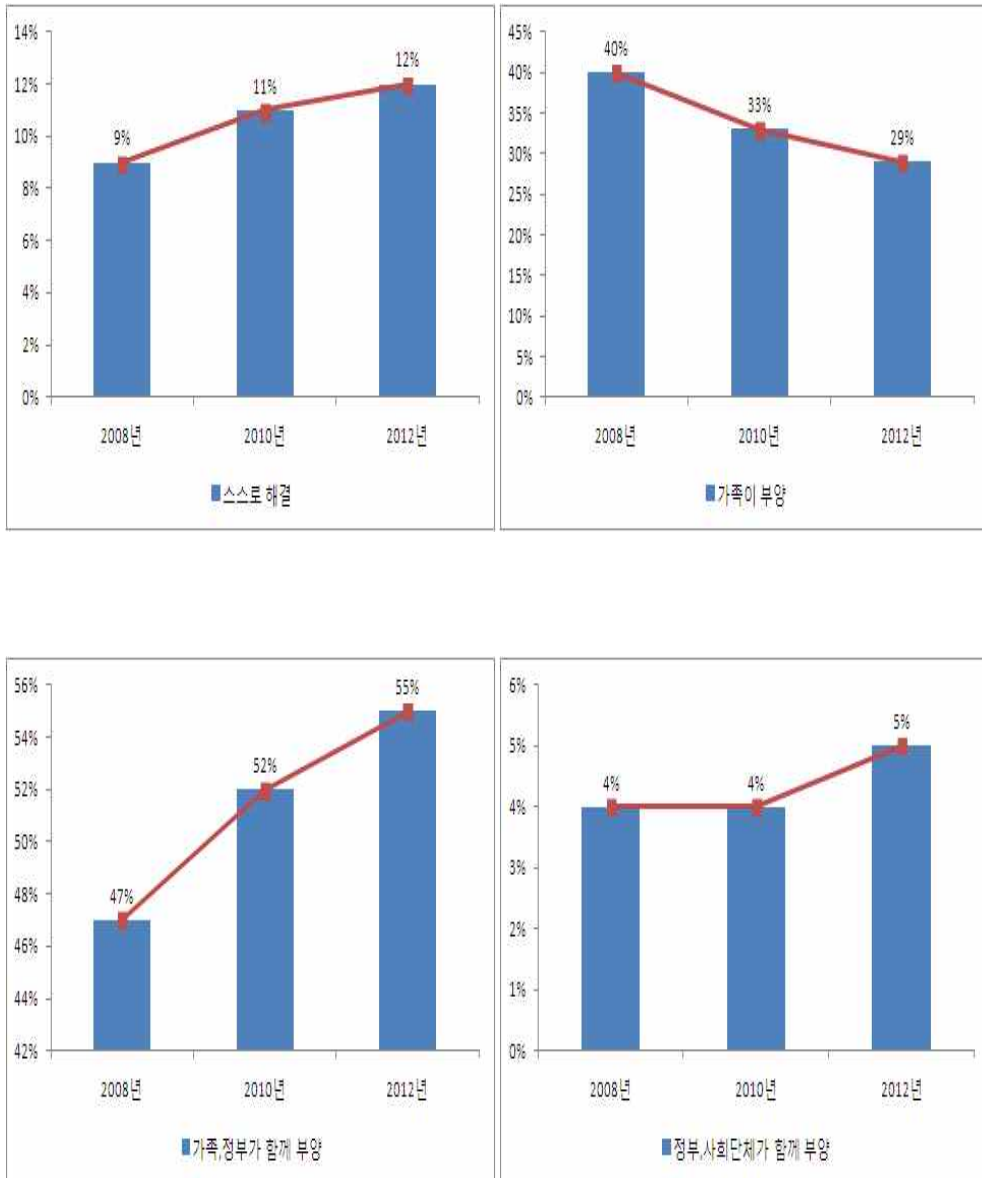


한달에 한·두 번 교류(만남)하는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44명(1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540명(3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114명(48%),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44명(4%)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38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683명(3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530명(49%),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78명(6%)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22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268명(3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241명(54%),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89명(4%)이다.

〈그림-38〉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일년에 몇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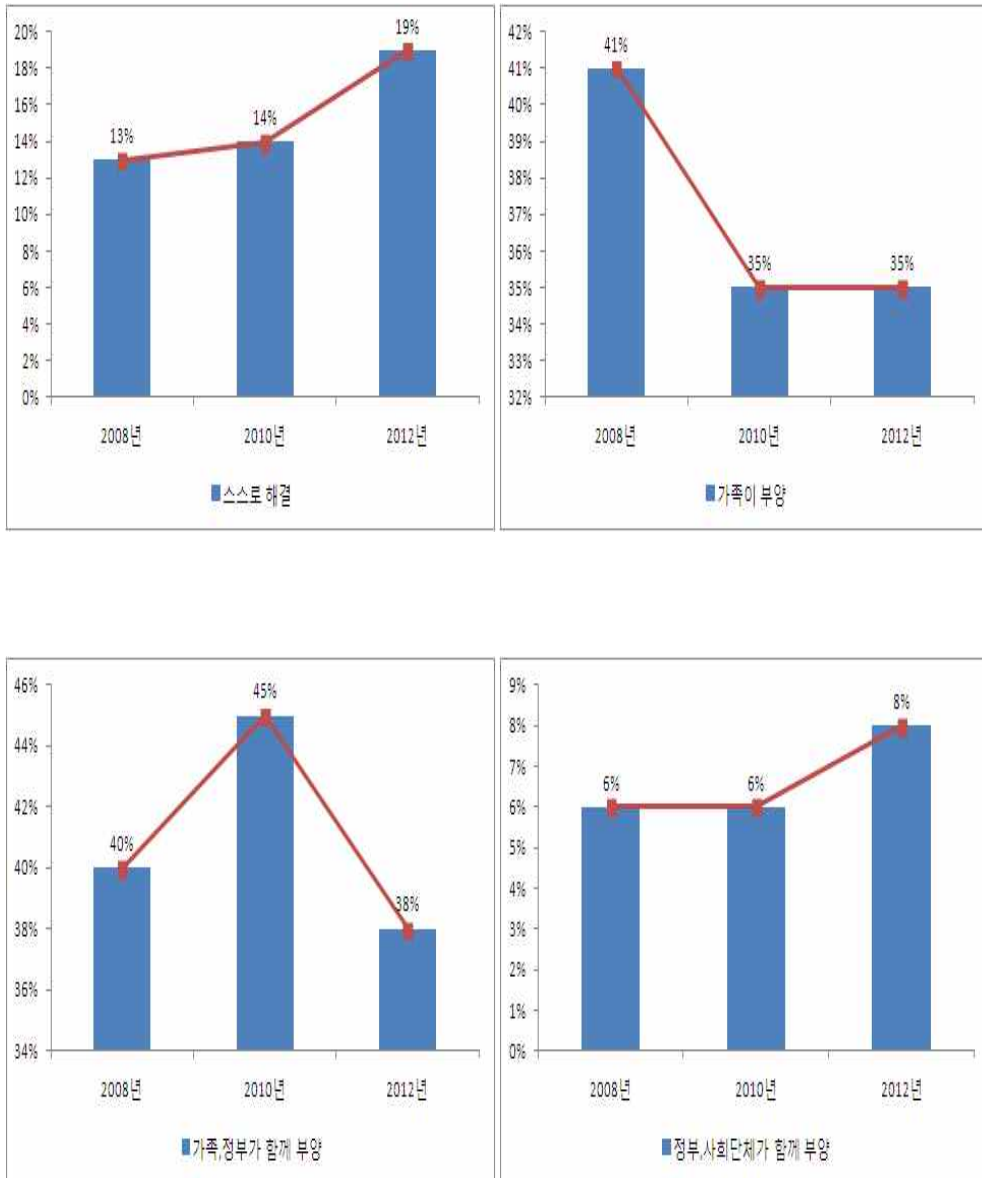


1년에 몇 번만 교류(만남)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721명(9%),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021명(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572명(47%),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89명(4%)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84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472명(3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739명(52%),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97명(4%)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15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815명(29%),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913명(55%),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07명(4%)이다.

〈그림-39〉 부모와의 교류(만남)와 부양의식의 관계 (거의 하지 않음)



‘부모와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47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45명(4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42명(4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9명(6%)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9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24명(35%),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36명(45%),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7명(6%)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0명(19%),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24명(35%),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57명(38%),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0명(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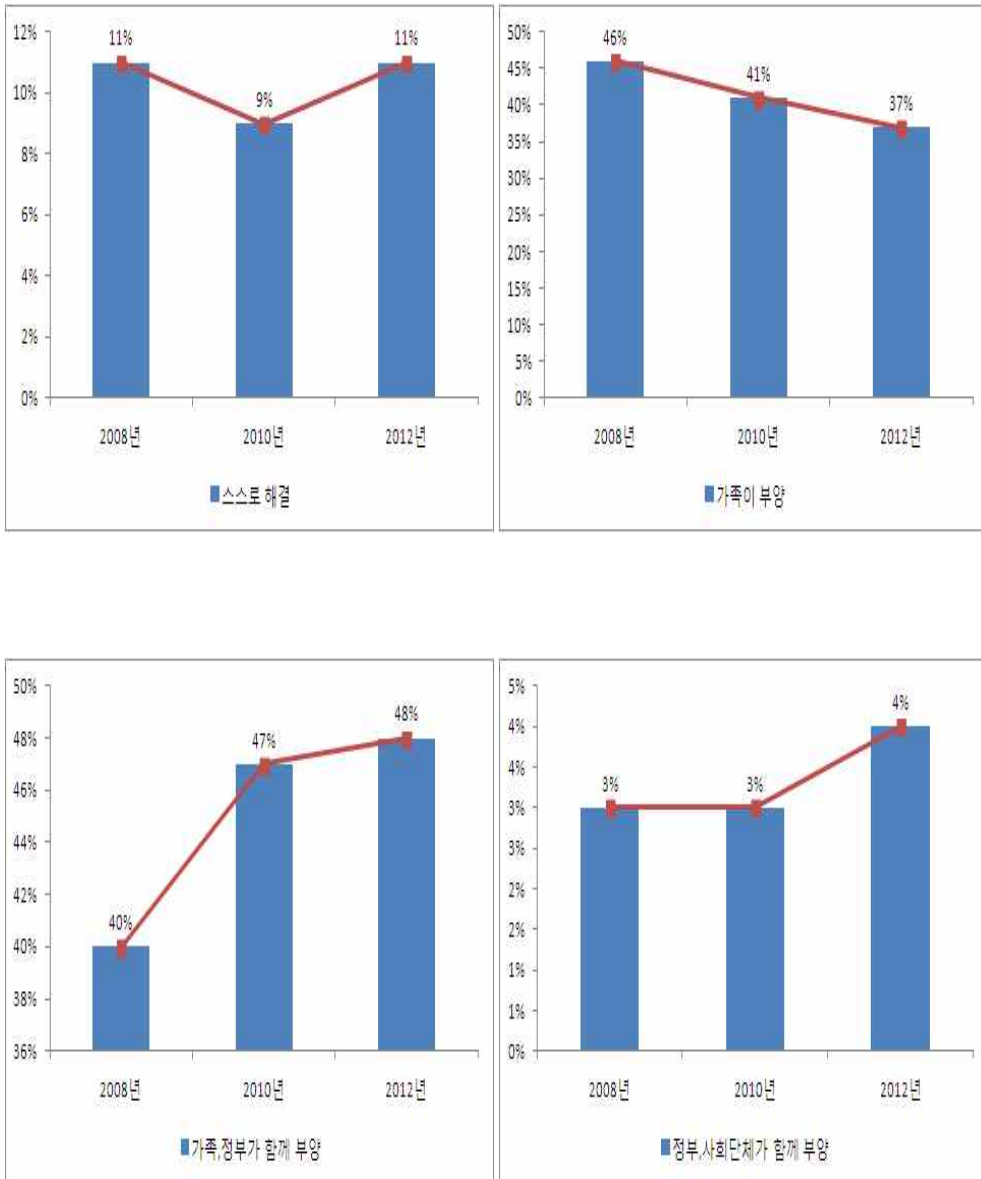
2.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표-11〉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2008년=42,456명, 2010년 N=18,726명, 2012년 N=36,877명)

구분		빈도 백분율 (%)											
		2008년				2010년				2012년			
		스 스 로	가 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 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스 스 로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부모 와 교류 (통화)	거의 매일	103 (11%)	452 (46%)	393 (40%)	27 (3%)	83 (9%)	361 (41%)	417 (47%)	19 (3%)	98 (11%)	316 (37%)	413 (48%)	33 (4%)
	일주 일에 한두 번	278 (10%)	1,189 (42%)	1,299 (45%)	95 (3%)	276 (10%)	1,004 (37%)	1,348 (49%)	82 (4%)	319 (12%)	902 (32%)	1,432 (52%)	87 (4%)
	한달 에 한두 번	757 (10%)	2,806 (38%)	3,553 (48%)	251 (4%)	660 (11%)	2,241 (36%)	3,017 (49%)	201 (6%)	652 (11%)	1,830 (31%)	3,228 (54%)	247 (4%)
	1년 에 몇번 거의 하지 않음	721 (9%)	3,021 (40%)	3,572 (47%)	289 (4%)	615 (11%)	1,815 (33%)	2,913 (52%)	207 (4%)	584 (11%)	1,472 (29%)	2,739 (55%)	197 (5%)
		47 (13%)	145 (41%)	142 (40%)	19 (6%)	50 (14%)	124 (35%)	157 (45%)	20 (6%)	69 (19%)	124 (35%)	136 (38%)	27 (8%)
전체		5,293 (12%)	17,629 (42%)	17,908 (42%)	1,626 (4%)	4,800 (25%)	5,545 (29%)	7,852 (42%)	529 (4%)	5,400 (15%)	12,221 (33%)	17,633 (49%)	1,623 (3%)

〈그림-40〉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거의 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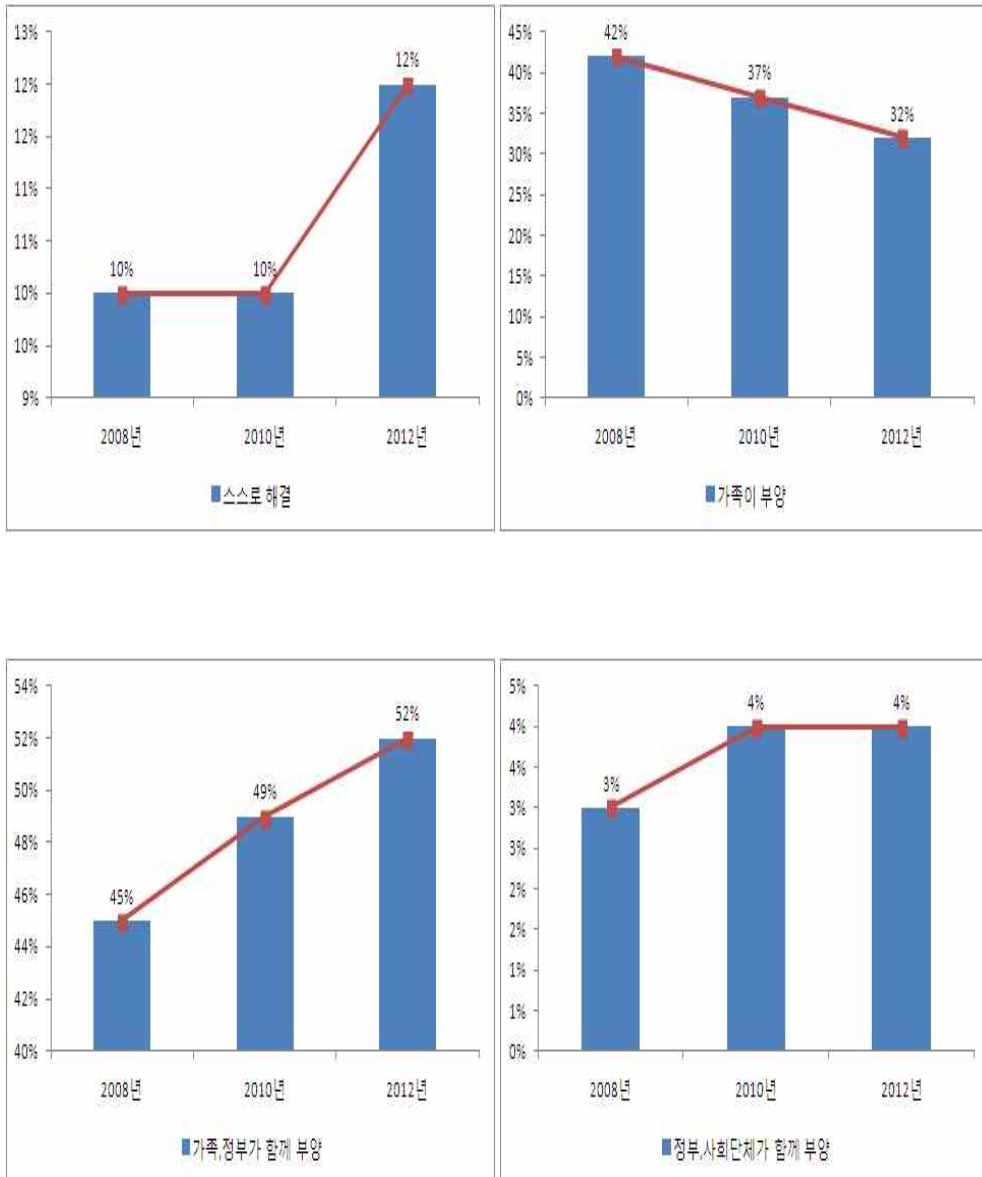


거의 매일 통화하는 응답자의 부양의식을 먼저 살펴보면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03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452명(4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93명(4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7명(3%)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83명(9%),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61명(4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17명(47%),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9명(3%)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98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16명(3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413명(48%),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3명(4%)이다.

〈그림-41〉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일주일에 한 두번)



일주일에 한·두 번 통화하는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78명(1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189명(42%),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299명(45%),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95명(3%)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76명(1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004명(37%),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348명(49%),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82명(4%)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19명(12%),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902명(32%),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432명(52%),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87명(4%)이다.

〈그림-42〉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한달에 한 두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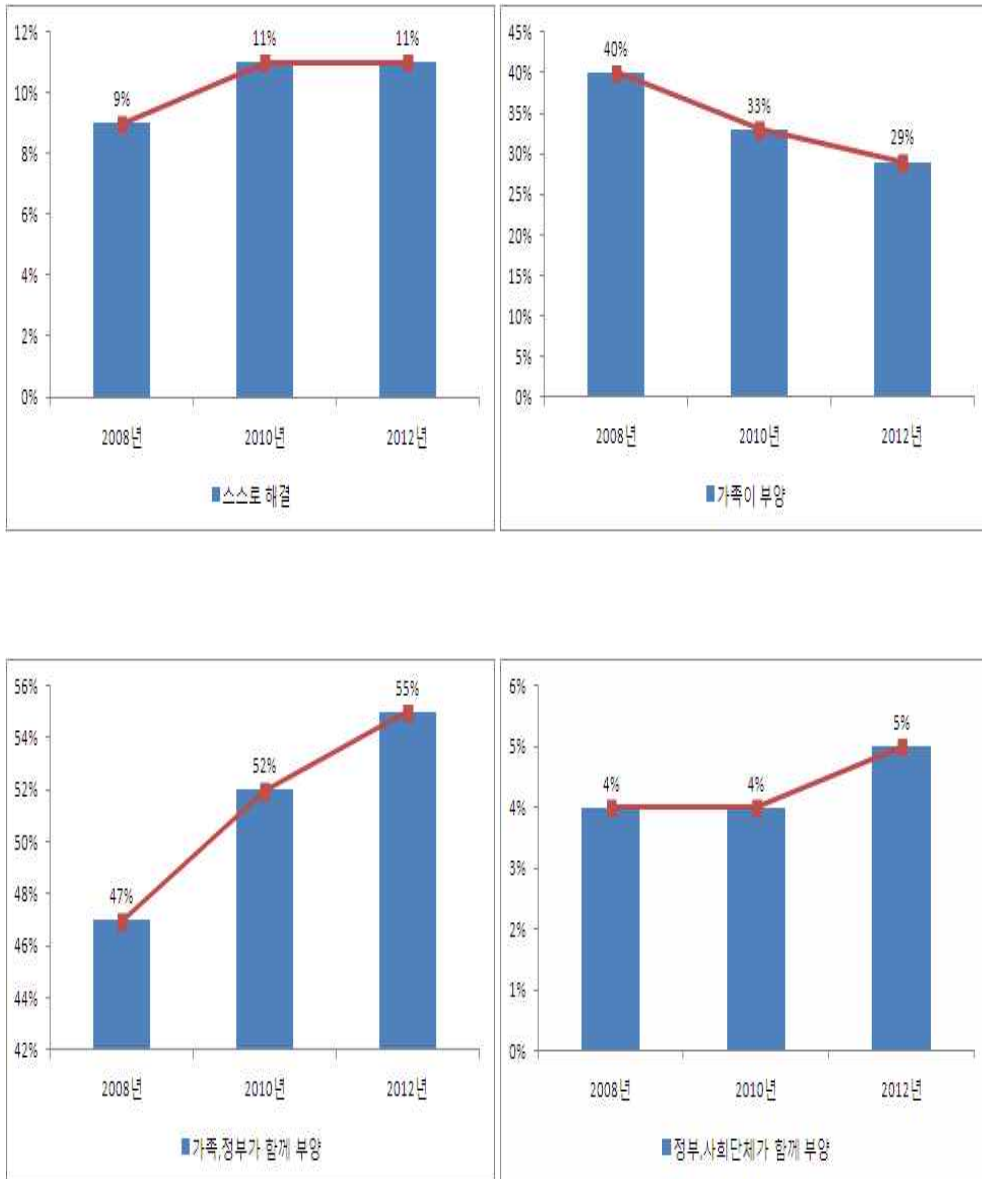


한달에 한·두 번 통화하는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44명(10%),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540명(38%),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3,114명(48%),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44명(4%)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38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683명(36%),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530명(49%),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78명(6%)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22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268명(3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2,241명(54%),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한다.’ 189명(4%)이다.

〈그림-43〉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일년에 몇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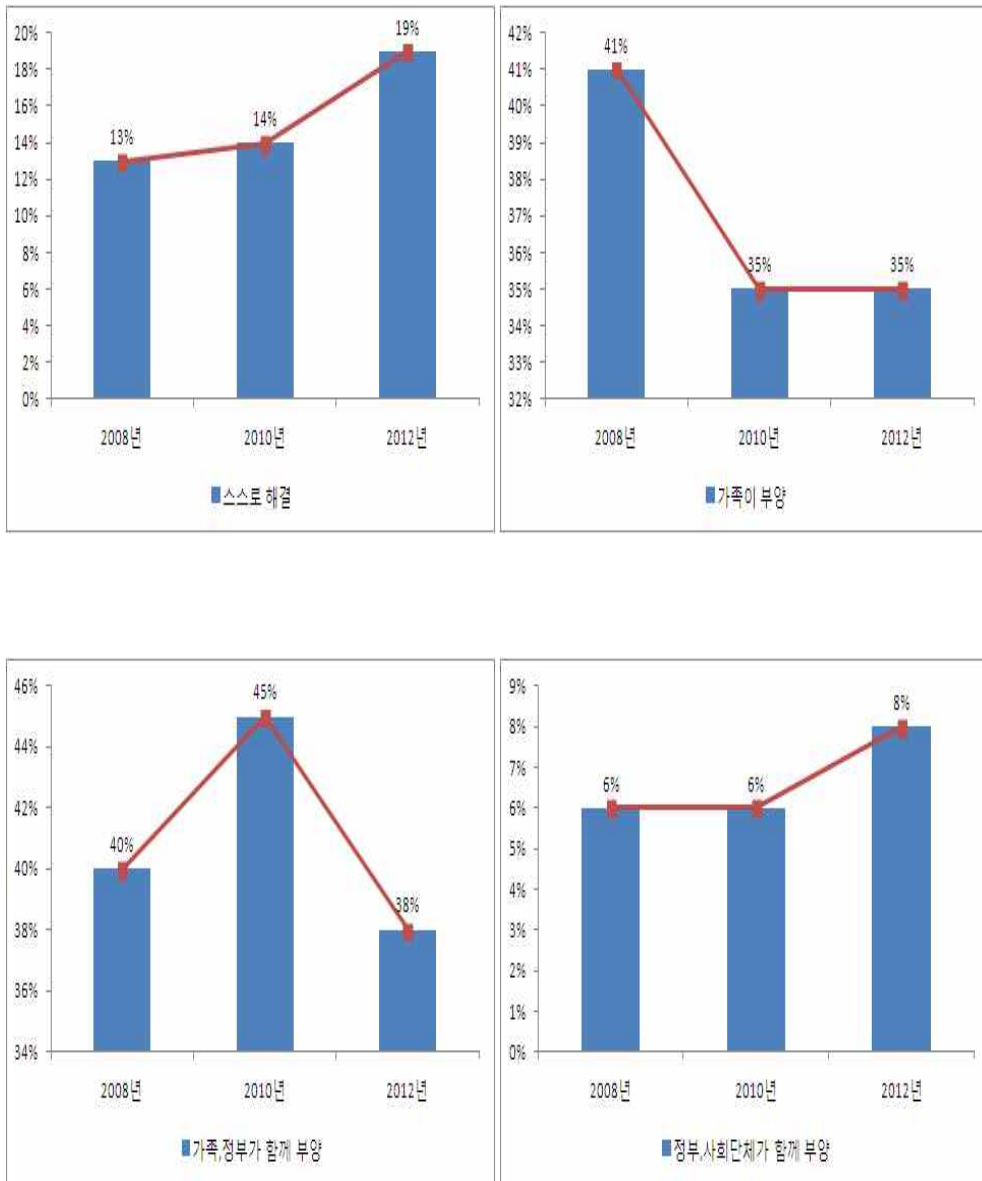


1년에 몇 번 통화하는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19명(9%),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374명(40%),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446명(47%),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51명(4%)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73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24명(33%),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76명(52%),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49명(4%)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93명(11%),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202명(29%),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70명(55%),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7명(5%)이다.

〈그림-44〉 부모와의 교류(통화)와 부양의식의 관계 (거의 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경우 2008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8명(13%),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94명(41%),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79명(40%),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5명(6%)이다.

2010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4명(14%),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40명(35%),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80명(45%),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29명(6%)이다.

2012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82명(19%),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 151명(35%),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175명(38%),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32명(8%)이다.

2008, 2010, 2012년도 모두 부모와의 교류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부모와 전화통화를 한다.’고 응답했다. 부양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부모와의 교류가 많던, 많지 않던 노인 부양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에서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부모와의 교류가 부양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에 흐름이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요약 (이론 및 연구의 특성)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회조사표를 근거로 하여 사회통계조사 중 ‘가족’분야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연도별 각 2008년=52,940명, 2010년=45,078명, 2012년=36,888명을 대상으로 ‘가족’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필요 유형만 추출 후 분석하였다.

이 중 무응답 대상자는 정확한 연구 표본을 파악하는데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대상으로 포함하였지만 실제 분석단계에서는 제외 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구방법은 ‘일반적 특성과 부양의식의 관계’와 ‘부양이론과 부양의식의 관계’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혼인상태,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고 부양이론은 대표적 이론인 ‘근대화이론·교환이론’과 부양의식의 관계를 통해 시대에 흐름에 따른 부양의식의 변화를 연구한 것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인부양의식 견해가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양의식의 변화 추이는 모든 연구에 기본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

부양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자녀의 부양의식과 부양가치관은 과거 부자중심의 전통적인 대가족주의 가치관에서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단위의 생활체제로 변화했다. 더 나아가 과거 가문과 가족을 중요시하던 경향에서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사회구조 또한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을 이룩하면서 동양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가진 노인 세대와 서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공조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현재 노인과 비(非)노인의 세대 갈등심화와 부양과 피(被)부양자로 나뉘어 부양문제 등 다양한 노인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곧 ‘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될 우리나라의 현대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양의식의 변화를 통해 미래에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향후 부양의식의 변화를 간접적 유추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인부양문제 대책 수립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결 론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전체적인 연구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논문의 결론은 대체적인 양상은 이러하다.

성별과 부양의식의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높아지고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낮아지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었지만 대상인 ‘남과여’의 부양의식은 변화의 흐름이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변화의 정도’가 완곡한 모습을 보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완곡한 증가의 모습을 보이는 남성에 반해 여성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의 폭과 그 정도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와 부양의식의 관계는 미혼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사별, 이혼 이렇게 나누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약해지고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강해지는 기본적인 공통적 특성을 제외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사별’한 대상자와 ‘이혼’대상자의 경우 다른 부양의식보다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대상자가 미혼자 또는 기혼자 보다 높았다. 이는 사별한 대상자와 ‘이혼’대상자의 경우 정부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부양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혼자들의 경우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지만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연령대와 부양의식의 관계는 전 연령대의 부양의식 변화는 기본적인 특성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10대부터 30대까지는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급격히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30대 역시 10, 20대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이지만 40대부터는 기본적인 변화 특성인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면서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 역시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40대부터는 실질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이를 맞이해야 하는 시작의 선에 서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50대부터 60대, 70대 그 이후로 갈수록 젊은 층과는 달리 부양의식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늘어나고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 변화가 10대, 20대, 30대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완곡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고 장년층인 80, 90대를 살펴보면 70대와는 달리 노년층으로 갈수록 본인이 실질적 부양주체가 되어서 인지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약간 늘어나고 있지만 미미하다.

교육 정도와 부양의식의 관계는 공통으로 부양의식변화는 기본특성을 갖는다는 점은 같았지만 고학력의 대상자가 전체인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지만 교육 정도인 학력이 높은 고학력자가 꼭 노부모를 공경하며 직접 부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학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노인부양의식에 있어서 다른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거여부와 부양의식의 관계는 가장 먼저 조사대상자 중 90% 이상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로 현대사회의 우리의 가족관계 및 형태를 보여주었다. 전통가족형태의 변형으로 노인과 함께 동거하던 가족형태에서 독립적 소가족 형태가 늘어났다.

소수이지만 동거를 하고 있는 대상자에 비해 동거하고 있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에서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의 대상자들 역시 부양의식 변화에서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동거하지 않는 대상자들 보다 변화의 추이가 느리다. 또한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하는 의식형태를 가장 많이 보였고 반대로 동거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들의 경우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부모와의 교류(만남·통화)와 부양의식관계는 부모와의 교류가 많던, 많지 않던 노인 부양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에서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진 변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 부모와의 교류가 실질적 부양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대에 흐름이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과 부양의식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노인부양이 현실조건에 맞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고 적음은 부양을 하는데 실질적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환경은 부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노인부양이 어려울 수 있다.

소득이 많고 적음은 부양을 하는데 실질적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적 환경은 부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 소득의 격차는 부양의식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하의 대상자보다 800만원 이상의 대상자의 수가 더 적다. 하지만 부양의식의 비율은 비슷하다. 이를 확대해석 해보면 고소득 대상자들의 수를 더 많이 조사하여 보면 비율이 더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부양의식 역시 높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의 격차와 부양의식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위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인부양의식 견해가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양의식과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기본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각계각층의 노인부양주체에 대한 의식이 통일적인 것은 아니며, 계층에 따라 다소 다른 ID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향후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입안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욕구를 세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고, 세분화된 욕구에 맞게 맞춤형의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 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고수현, 김익균, 김치영, 도미향, 문혜숙, 변보기 외. (2002). 『사회복지개론』. 서울: 대학출판사.
- 권중돈. (2004).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두섭. (2001).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김영중. (2004). 『사회복지 행정』. 서울: 학지사.
- 성규탁. (2003). 『사회복지 행정론』. 서울: 법문사.
- 성영혜, 이재연, 서영숙, 이소희. (1997).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인희. (2012). 『현대국가와 복지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최경석, 김양희, 김성천, 김진희, 박정운, 윤정향. (2003).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 복지.
- 최순남. (2002).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법문사.
- 최일섭, 최성재. (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출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소양 교육 매뉴얼』.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홍숙자. (2001). 『노년학개론』. 서울: 하우.
- 황진수. (2003). 『현대복지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 학위논문

- 이영진. (2001).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세대별 비교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길중. (2003). 한국대학생과 중국 조선족 대학생간의 노인부양의식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한림대학교석사학위 논문.

정선주. (2003). 청·장 노년기의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 학술지

이재영, 김진숙. (2012).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일의 의미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연구. 『노인복지연구』, 58, 353-381.

이혜원. (1996).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의 발전과정: 일본의 경험 분석. 『사회복지정책』, 2, 120-146.

2. 국외문헌

Homans, G. C. (1967). *The Nature of Social Science*. Iowa: Brace and World.

Powell, J. L. (2006). *Social Theory And Aging*.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 Inc.

3. 인터넷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보건복지부 (www.mw.go.kr)

통계청 (www.kostat.go.kr)

한국노년학회 (www.tkgs.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

【부 록】

사 회 조 사 표

1. 귀하의 성별은 어떠하십니까? (번호에 ○ 또는 √ 표시)

1)남성 2)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떠하십니까?

1) 20세 미만 2) 20~30세미만 3) 30~40세 미만 4) 50~60세 미만
5) 60~70세 미만 6) 70~80세 미만 7) 90~100세 미만

3. 귀하는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4년제 미만)
6) 대학교 (4년제 이상) 7) 대학원 (석사과정) 8) 대학원 박사 (박사과정)

4.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하십니까?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사별 4) 이혼

5. 귀하 부모님은 귀 댁에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같이 살고 있음 2) 같이 살고 있지 않음

6. 귀하의 귀하의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한두번 3) 한달에 한두번 4) 1년에 몇 번
5) 거의 하지 않음

7. 귀하의 귀하의 부모님과 만남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한두번 3) 한달에 한 두번 4) 1년에 몇 번
- 5) 거의 하지 않음

8.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스스로해결 2) 가족 3) 가족과 정부·사회 4) 정부·사회단체

9.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 4) 300~400만원 미만 5) 400만원~500만원 미만 6) 500만원~600만원 미만 7) 700만원 이상

ABSTRACT

A Study on Consciousness Changes of Supporting the Elderly

Hwang, seul ki

Major in Industry for the elderly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A change in social environment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has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from the tendency of having emphasized family in the past to the tendency of emphasizing individual. In this way,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is changing.

In traditional society, a supporting form for the elderly was the largest in 'direct supporting method' by family. It was the best. However, an environmental change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changes social structure for a short time, thereby changing a supporting value of young generation.

Owing to the mixture of value system, the generation-based difference is gradually getting deepened. Diverse elderly problems are caused such as aging, elderly disease, and mixture of value caused by generational gap. A supporting service and a supporting measure are imminently needed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proceeds with

running toward 'aging society' beyond aging society.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as saying of which the family needs to directly support in the past is being changed its form in the changing process into modern society. Direct supporting consciousness got weakened. On the other hand, the consciousness as saying of which the family and the government need to support together got stronger. As time flows slowly, this is getting stronger. Therefore, the aim is to examine about how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is changed according to a flow of time. The aim is to be worried together about how supporting service and measure need to be arranged by inferring this.

Accordingly, arranging the research method and procedure of this study, they are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what about a change in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econd, what about a change trend of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according to a theory of modernization?

Third, what about a change trend of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according to a theory of exchange?

Fourth, what about a change trend of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according to a social disengagement theory?

Fifth, the aim is to infer on which change its opinion has according to this, and how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It extracted by selecting 'family' field, as each subject partially and by year based on the social survey table that is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alyzed only type according to a survey of 'family' among survey items, and then examined a change in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by applying it to the typical support theory through the existing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was divided largely into 4 kinds such as 'needing to be supported by oneself.', 'needing to be supported directly by family.', 'needing to be supported together by family and government.', 'needing to be supported together by the government and social group.'

In conclusion, it examined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which is changed according to a flow of tim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by substituting these 4 kinds of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for the above research method. The aim is to infer a change flow on how the future supporting consciousness for the elderly will be changed through the supporting consciousness, which was examined in this way. Through this, it will be able to be utilized even as basic data level of research, which arranges a supporting service and measure.

【Key Words】 Subjects of Supporting, Supporting Consciousness, Change of consciousness